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견제 민주주의의 시민교육적 함의 연구

-신로마 공화주의의 의사결정론을 중심으로-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허 윤 회

견제 민주주의의 시민교육적 함의 연구

-신로마 공화주의의 의사결정론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 창 우

이 논문을 허윤희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허 윤희

허윤희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견제 민주주의의 시민교육적 함의 연구

-신로마 공화주의의 의사결정론을 중심으로-

허 윤 회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화주의의 입장과 연관해서 견제 민주주의가 의사결정에 대한 최선의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의견 ‘불일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불일치를 민주주의의 필연적인 산물로 인식하고 모든 사람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게끔 합의하고자 노력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불일치는 필연적인 것이며 이에 대하여 합의하기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관계에 기반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의 방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민주주의의 유형을 참여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결집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민주주의는 한

계에 부딪히게 된다.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동조현상의 문제, 대의 민주주의는 수탁자의 문제로 귀결되었고, 결집 민주주의는 애로우의 역설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 심의 민주주의는 담론적 딜레마의 문제가 도출 되었다. 본 연구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이러한 관점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민주주의 내에서의 의사결정론으로서 ‘그룹 행위자(group agent)’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룹 행위자 이론이란 반다수결주의 조건에 입각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뜻한다. 반다수결주의 조건이란 현실에서 원만한 합의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불일치를 긍정하는 태도를 뜻한다. 페팅과 리스트는 그룹 행위자 이론에 기반하여 대리인의 일관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비공식 여론조사(straw-vote)’는 구성원들이 불일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기가 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공화주의의 두 유형 즉, 시민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 중 신로마 공화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로마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 freedom)’, ‘반다수결주의(the counter-majoritarian)’, ‘공화주의적 헌정주의(republican constitution)’ 등의 핵심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신로마 공화주의가 갖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특성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성의 해소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견제 민주주의(Contestatory Democracy)’를 통하여, 의견 불일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의 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견제 민주주의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능력(contestatory capability)’을 강조하였다. 이의제기능력이란 기존 대의 민주주의와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며 보완 가능한 개념이다. 시

민이 대리인의 수탁자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견제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시민들의 대표자인 정치인과 동등한 관계이면서도 정치인 고유의 권한까지 지니려 하는 ‘공동 저자’의 역할보다는, ‘편집자’로 그 역할을 한정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흡사 시민불복종 개념으로 이어지기 쉬운 기존 이의제기능력과 구분 가능하다.

셋째, 본 연구는 견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국가와 시민들 간의 견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순응자 중심의 ‘관계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 회복적 정의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게 되면 이들은 오히려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은 그 목적을 처벌과 보상 중심에서 순응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정의론이다.

넷째, 본 연구는 견제 민주주의가 도덕과의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견제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적 방법으로 갈등적 토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토론 수업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의사결정론, 신로마 공화주의, 견제 민주주의, 비지배 자유, 그룹 행위자이론, 이의제기능력, 관계 회복적 정의, 민주시민교육

학 번: 2014-30498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6
II. 기존 민주주의 의사결정 이론	11
1. 참여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이론	11
1) 참여 민주주의의 의의	11
2) 참여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한계	14
2. 대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이론	19
1) 사회계약론과 대리적 동의의 의의	19
2) 대의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한계	23
3. 결집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이론	25
1) 결집적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의의	25
2) 결집적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한계	31
4. 심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이론	35
1) 심의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의의	35
2) 심의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한계	40
III. 민주주의 불일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	46
1. 동의 개념의 전환: 소극적 동의	46
1) 순리적 동의: 스캔론	46
2) 결과적 동의: 후견주의	51
2. 합의 개념의 심화: 급진적 합의	56
1) 다중 민주주의: 네그리와 하트	56

2) 경합 다원주의: 무폐	63
3. 합의 개념의 전환: 반성적 합의	70
1) 우선순위 규칙: 리스트	70
2) 그룹 행위자: 페킷과 리스트	78

IV. 신로마 공화주의의 이념 87

1. 민주주의의 보완으로서 공화주의	87
1) 공화주의의 부활	87
2) 공화주의의 유형과 논의	92
2. 신로마 공화주의의 기본적 가치	98
1) 소극적 자유론 비판	98
2) 비지배 자유 체계화	101
3. 신로마 공화주의의 특징	110
1) 반다수결주의 조건: 위그노 혁명과 저항권	110
2) 권력분산의 조건: 공화주의적 헌정주의	115
4. 신로마 공화주의의 범주 규명	122
1) 공동체주의와의 길항관계	122
2) 시민 공화주의와의 길항관계	128

V. 신로마 공화주의의 민주주의에의 적용: 견제 민주주의134

1. 신로마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접목	134
1) 기존 민주주의 비판	134
2) 새로운 민주주의 구축	139
2. 지배에 대한 시민의 견제: 이의제기능력	143
1) 이의제기능력을 활용한 시민들의 참여	143
2) 긍정적 저항권으로의 전환	148

3. 지배에 대한 국가의 견제: 관계 회복적 정의 ...	153
1) 공화주의적 정의 정립	153
2) 관계 회복적 정의를 통한 공공선 추구	157
 VI. 견제 민주주의를 반영한 시민교육의 과제	164
1. 도덕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164
1) 도덕과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변천 과정	164
2) 민주시민교육 방법에 관한 논쟁	169
2. 도덕과에서의 견제 민주주의의 적용 모색	174
1) 민주시민의 근거로서 공화주의적 시민성	174
2) 『윤리와사상』에 나오는 공화주의 분석 및 적용 ·	177
3. 이의제기능력에 입각한 수업 모형 탐색	182
1) 기존의 갈등 수업 모형	182
2) 이의제기능력을 활용한 수업 모형	186
 VII. 결론	193
 참 고 문 헌	199
Abstract	227

표 차례

<표 1> 정보의 폭포효과	16
<표 2> 양자 택일의 결과	31
<표 3> 두가지 인식체계	33
<표 4>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조건	43
<표 5> 작업장에서의 담론적 딜레마	43
<표 6> 정부 재정과 관련한 담론적 딜레마	74
<표 7> 통근 상황에 대한 담론적 딜레마	74
<표 8> 다양한 입장의 딜레마	76
<표 9> 화석연료와 이산화탄소량의 담론적 딜레마	83
<표 10> 외부적 장애와 관련한 변수	98
<표 11> 간섭과 지배에 관한 네 가지 유형	108
<표 12> 재판관들의 담론적 딜레마	111
<표 13>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비교	159
<표 14>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의 영역 변천사	166
<표 15> 2007, 2011, 2015 교육과정 내용 요소 민주시민교육 관련 비교	167
<표 16> 영국 학교 시민교육 학습방안 내용	171
<표 17> 2015 『윤리와 사상』 성취기준	178
<표 18> CEDA 토론 진행 순서	184
<표 19> 소수자 우대정책에 관련한 수업 사례	189
<표 20> 비공식 여론조사를 활용한 갈등적 심의 순서	190
<표 21> 비공식 여론조사를 활용한 수업 사례	190

I. 서론

1. 연구 목적

민주주의는 그리스어로 ‘민중(demos)’ 과 ‘지배(kratos)’ 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민중에 의한 지배’ 를 뜻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심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시민이고 그러한 권리가 시민들 개개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짐을 뜻한다 (Bobbio, 1993: 64). 그러나 모든 시민이 다스리는 정치는 과연 가능할 것일까.

앞선 물음의 대답으로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 민주주의 지수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2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온전한 민주주의’ 가 아닌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로 분류되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선거과정’ 과 ‘시민의 자유’ 에 있어서는 각각 9.2점, 8.2점으로 높은 편이나 ‘정치참여’ 와 ‘정치문화’ 에 있어서 7.2점과 7.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¹⁾ 위의 지수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절차적 공정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민주적이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참여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의 공정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는 그리 많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이와 관련한 공론장이 등장했는데, ‘신고리 5·6호기 탈원전 공론화’ 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시행공약에 따라 ‘탈원전’ 에 입각한 ‘대체 에너지

1) 매일경제(2019.01.10.), “英 EIU ‘민주주의’ 순위서 한국 세계 21위”,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1/21126/>

지’를 시행하였지만 상당수 시민 및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정에 수긍하지 못하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6월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²⁾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59.5%)로 결정되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되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전문가들을 제외하여 그들의 주장들을 시민이 경청하여 결정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³⁾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결과 여부와 관련 없이 시민들이 정당한 토론 과정을 거친 후에 자신들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데에 우리 사회의 심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그러나 탈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아쉬움도 적지 않게 남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충실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합리적 토론에 입각한 합의는 언제든지 기존 결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설에서 반복된 결정을 내리기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탈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건설 승인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신고리 5·6호기의 토목 공사를 시작하여 이미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였다. 타당성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원전 재가동은 시행되어서는 안됐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경제적 이익 및 현실적 어려움 등의 내용에 의하여 원전 재가동을 선택한 것이다.

2)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2만 명이 참여한 1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의향이 있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2차 설문 조사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관련된 정보에 대한 학습 기회, 질의응답 형태와 같은 토론을 제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을 참고하시오.

3) 프레시안, (2017.11.06.),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네 가지 문제와 한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4711&utm_source=dauman&utm_medium=search

한편, 대학 입시 공론화에서는 정부의 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는 학생들의 치열한 교육열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되었다. 이러한 과중한 교육열에서 벗어나고자 정시 위주 체제에서 수시 위주의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 정부에서도 대학 입시에 있어서 수시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투명성 및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하였다고 판단, 현 제도에 대한 수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다.⁴⁾ 신고리 공론화와 같은 방식의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현 대학입시에서의 수시 제도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교육부에서는 수시 제도에 대한 불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에 있어서 정시전형의 소폭 확대와 수시 제도 투명성 제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학생부종합 전형은 축소되지 않았다(교육부, 2018). 정부에서 제안한 수시 축소는 ‘권고’에 불과하였지 대학의 이해관계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⁵⁾

본 연구자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다양한 요인에 부딪쳐 완전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자 한다. 불일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암묵적 동의’를 들 수 있다. 브레히트의 희곡 『동의자와 거부자』의 주인공이 이와 관련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이를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구하러 선생님은 다른 마을로 떠난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어머니를 둔 학생이 함께 동행하게 된다. 그러나 산을 넘다가 소년마저 전염병에 걸리고 만다. 그런데 전염병에 걸린 마을에는 옛날부터 계속 갈 수 없는 사람은 골짜기에 던져야 하는 관습이 있었다. 물론, 무작정 사람을 던지는 것이

4) 리얼미터(2018.11.19.), ‘국민 53% “대입 수능 정시 확대해야”’,
<http://www.realmeter.net/%EA%B5%AD%EB%AF%BC-53-%EB%8C%80%EC%9E%85-%EC%88%98%EB%8A%A5-%EC%A0%95%EC%8B%9C-%ED%99%95%EB%8C%80%ED%95%B4%EC%95%BC/>

5) 조선일보(2019.03.25.), “대학들 “정시 30%는 너무 많다” 고1 大入 다시 술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5/2019032500232.html

아니라 계속 갈 수 없는 당사자에게 의사를 물어본 후 결정하게 된다. 만약, 병이 난 사람이 관습대로 던져지기를 거부한다면 선생은 다시 원래의 마을로 돌아가야 하기에 선생은 학생에게 관습에 따를 것을 은근히 종용하고 있다.

만약, 내가 학생의 입장이라면 선생님의 주장을 거절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암묵적 동의 및 관습에 대하여 거부하기 힘들다. 즉,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관습에 순응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암묵적 동의는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룰이 되어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되짚어보면, 절차적 공정성에 입각한 공론화 과정만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하여 실질적 합의를 이룰 수 없는 ‘불일치(disagreement)’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민주주의의 절차만으로는 온전한 합의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왈저는 토론 이외에 타인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주장하였다.⁶⁾ 왈저는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 이성이 담보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사유와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불일치를 타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으로 솔로몬 왕의 사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두 여인은 갓난아이를 두고 자신의 친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솔로몬 왕은 아이를 둘로 가르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다. 갓난아이가 둘로 갈린다는 것은 결국 아이의 죽음을 의미하기에 친모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친모의 포기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친모와 계모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이처럼, 솔로몬의 판결은 갈등적 상황에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6) 왈저는 토론 이외의 합의하는 방법으로 14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정치교육, ② 조직, ③ 동원, ④ 시위 ⑤ 성명, ⑥ 논쟁, ⑦ 협상, ⑧ 로비활동, ⑨ 캠페인, ⑩ 투표, ⑪ 모금활동, ⑫ 부패, ⑬ 잡무, ⑭ 통치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Walzer, Michael(김용환 외 옮김) (2001), 『자유주의를 넘어서』 2장 「토론정치와 그 한계」 참고하시오.

대표적 사례로 종종 활용되고 있다. 오히려 갈등은 모순적 상황일 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갈등은 악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신로마 공화주의는 솔로몬 왕과 비슷하게 ‘갈등’을 긍정하고 있다. 공화주의에서는 갈등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 같이, 신로마 공화주의는 갈등의 긍정의 태도를 ‘반다수결주의 조건(the counter-majoritarian condition)’에 입각하여 ‘그룹 행위자(group agent)’ 이론으로 발전된다. 그룹 행위자 이론이란 행위자가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선호에만 그치지 않고 타인의 의견과 공공선을 위해서 조율할 수 있는 행위자를 뜻한다. 즉,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합당한 근거가 입증된다면 자신의 이익을 철회하는 선택이 가능한 반성적 행위자인 것이다.

상기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서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견제 민주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⁷⁾ 견제 민주주의는 페тит(Philip Pettit)이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론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의의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기존 민

7) 민주 공화국과 공화민주주의 혹은 견제 민주주의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민주 공화국의 개념은 헌법학계에서 자주 활용하는 개념으로 기본권 보장, 국민주권, 선거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 지방자치제도 등을 강조한다(신용인, 2016: 360). 반면에 공화 민주주의 및 견제 민주주의는 시민이 비지배 자유에 입각한 국가에 대한 견제 방법을 의미한다. 즉, ‘민주 공화주의’는 시민 중심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혼합정 관점으로 이해하고, ‘공화 민주주의’는 기득권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한다(김경희, 2007: 114).

주주의 의사결정론의 한계로 인하여 시민들 간의 불일치를 없앨 수 없음을 밝힌다.

둘째,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으로서 동의론, 급진적 합의론, 반성적 합의론의 논의하고, 페티트와 리스트의 그룹 행위자 이론이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론으로 상정한다. 나아가 이들의 논의가 신로마 공화주의의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규명한다.

셋째, 신로마 공화주의는 시민 공화주의, 공동체주의와는 다른 독립적 개념으로서 비지배 자유, 반다수결주의 조건, 공화주의적 헌정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넷째, 신로마 공화주의는 모든 정치체제를 환원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보완 관계로서 견제 민주주의로 완성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국가에 대한 시민 견제 방법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능력(contestatory capability)’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견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국가와 시민들 간의 견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순응자 중심의 ‘관계 회복 정의(restorative justice)’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섯째, 이러한 견제 민주주의가 민주시민교육에서 의의가 있음을 확인한다. 특히, 토론교육에 있어 크나큰 함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논의에 입각하여, 본 연구자는 페티트의 논의에 따라 신로마 공화주의의 기본 입장을 취하고 민주주의의 보완으로서 견제 민주주의의 이론을 체계화함으로써 불일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다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논의에서 공화주의가 가질 수 있는 의의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신로마 공화주의의 논의에 주목함으로써 기존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지닌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관련한 유형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민주주의 내에서 의사결정 방법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모색할 것이다.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란 주어진 정보와 지식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은 참여, 대의, 결집, 심의 민주주의로 구분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본 연구자는 민주주의에서 논의하는 의사결정 개념의 의미를 명료화할 것이다. 2장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의사결정론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새로운 의사결정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동의론에 입각한 의사결정론으로서 스캔론(Thomas Scanlon)의 순리적 동의와 드워킨(Ronald Dworkin), 섀스타인(Cass Sunstein)의 후견주의에 입각한 결과적 동의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합의론에 입각한 의사결정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합의론은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el Hardt), 무페(Chantal Mouffe)와 공화주의에 기반을 둔 리스트(Christian List)와 페티트(Philip Pettit)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는 다중 민주주의를 선보이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무페는 온건적 사회주의를 도입하여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닌 소수자들의 쟁투를 바탕으로 다원주의 사회를 추구하고자 노력한다.

다음으로 페티트는 리스트의 논의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새로운 이론인 ‘그룹 행위

자(Group agent)’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스캔론의 『What we owe to each other』, 드워킨의 『Paternalism』, 선스타인의 『Nudge』, 네그리와 하트의 『Empire』와 『Multitude』, 무페의 『The democratic paradox』, 『The Return of the Political』, 페티와 리스트의 『Group Agent』의 논의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신로마 공화주의의 개념 범주 규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안으로서 정치 이론인 공화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와 키케로와 마키아벨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로마 공화주의(neo-Republicanism)’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두 개념에 대하여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범주의 혼재가 나타났다. 시민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와의 가장 큰 차이는 공동체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시민 공화주의에서 공동체란 가족, 혈연, 문화라는 속성에 벗어나기 힘든 선천적인 공동체로 간주하지만 신로마 공화주의에서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신로마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자신의 목표와 동일시하며 헌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신을 맹목적이지 않은 자발적인 성격의 헌신으로 이해하는 점이 시민 공화주의와 가장 큰 차이로 규정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신로마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과 구별되는 신로마 공화주의만의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기존 신로마 공화주의가 비지배 자유, 반다수결주의 조건, 공화주의적 헌정주의 등의 세 가지 특징으로 이해한다면 본 연구자는 신로마 공화주의의 특징을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 freedom)’, ‘반다수결주의 조건(the counter-majoritarian condition)’, ‘공화주의적 헌정주의(republican constitutionism)’로 이해하였

다. 페티트의 『A Theory of Freedom』과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중 「Republican Freedom: Three Axioms, Four Theorems」에서 논의된 내용에서 제시된 비지배 자유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저항권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기존 민주주의의 중심이 선거 제도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주의였다면 신로마 공화주의에서는 심의를 넘어 견제가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저항권과 관련해서 스킨너(Quentin Skinner)의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에서 규명한 내용을 토대로 삼을 것이다.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와 관련하여 메이너(John Maynor)의 『Republicanism in the Modern World』에서 다룰 것이다. 국가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 예로부터 공화주의자들은 권력 분산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의지를 지향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보다는 중우정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의 지배를 중시 여기는 헌정주의가 나타나며, 헌법은 피치자들의 동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신로마 공화주의가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견제 민주주의’의 체계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견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지배에 대한 시민의 견제 방법으로서 ‘이의제기능력(contestatory capability)’과 중우정치에 대한 국가의 견제 방법으로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에 입각한 ‘관계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제시하고자 한다. 신로마 공화주의는 선거만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힘들기에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는 페티트(Philip Pettit)의 『On the people’s terms』에서 제시한 ‘이의제기능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의제기능력이란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이 공적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리고 관계 회복적 정의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가하는 통제인 순응자 중심의 관계 회복적 정의의 특징과 타당성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견제 민주주의가 적합한지 논의할 것이다(Pettit, 2014a: 145). 페티트와 브레이스웨이트의 『Not Just Deserts: A Republican Theory of Criminal Justice』에서 제시된 관계 회복적 정의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견제 민주주의가 도덕과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공공선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이 가장 적절한 수업 방법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토론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열려있어야 한다. 그리고 토론은 학생들에게 타인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보도록 권장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가 견제 민주주의가 민주시민교육에 의의를 준다고 생각한 이유는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도덕적 문제, 이슈, 주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여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Ⅱ. 기존 민주주의 의사결정 이론

본 장은 기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론의 기존 논의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새로운 의사결정론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의 성격을 지닌다. 1절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참여 민주주의의 특징과 한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2절에서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3절에서는 결집 민주주의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4절에서는 심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1. 참여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이론

1) 참여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는 앞서 정의한 것처럼,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원형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광장(agora)에 모여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는 의회와 같은 대의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테네 민주주의는 특정한 제도 및 권력자에 의해 집중화되지 않으며 정치적 결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였다.

페리클레스(Pericles)의 『추도사』는 민주주의의 헌신적 참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페리클레스의 추도사는 페르시아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희생당한 병사들의 추모하기 위한 자리에서의 연설문이다. 그는 아테네가 다른 나라의 정치와는 다르게 다수의 시민들로 구성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사적 영역과 공공선을 일치하게 만들어 국가를 위한 공공선을 추구한 것이다. 아테네 시민들의 공공선에 대한 헌신은 사

적 영역을 뛰어 넘는 숭고한 행위로 상정하고 있다(박효중, 2005: 411). 이러한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만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되었고, 자신의 판단이 곧 국가의 판단으로 직결되기에 현명한 판단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아테네식의 민주주의가 지닌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테네에서의 시민은 20세 이상의 남성이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지닌 사람들만 인정하였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온 이민조과 여자를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은 편협한 시각의 시민 개념이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은 3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최소 1년에 40여 번의 회의에 6000여 명의 정족수를 요구하였다. 즉,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민들만 정치에 참여가 가능하기에 일종의 귀족정으로 변질되었다(Bellamy, 2011: 32).

이와 같이 직접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기 위해 시민들의 의지로 민주주의를 구성하고자 하는 참여 민주주의 시각이 나타나기에 이른다. 참여 민주주의는 루소가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우선, 루소의 자연상태에 대한 논의부터 알아보자. 루소가 상상한 원초적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원시의 인간은 일도 언어도 거처도 없고, 싸움도 교제도 없으며, 타인을 해칠 욕구가 없듯이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쩌면 동류의 인간을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이 그저 숲속을 떠돌아다녔을 것이다.” (Rousseau, 2003: 89)고 하여 선악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고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초적 자연 상태에서 행복이 지속될 수 없었다. 인간의 사적 소유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질투, 경멸, 부러움 등과 같은 감정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Rousseau, 2003: 112-113). 모든 사람들이 소유권을 놓고 벌이는 투쟁 상태에서 더 큰 위험을 느낀 것은 가난한 자가 아닌 부자인 사람들이었다. 루소는 이와 같은 부자가 빈자를 지배하는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서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원초적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권위는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 안에 있음을 주장한다.

나는 주권은 전체 의사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은 오로지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력은 이양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는 결코 그럴 수 없다 (Rousseau, 2004: 35).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기에 정치적 권리 역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적 권위는 본질적으로 국민 안에 있다. 이러한 권위는 본질상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은 이에 대한 행사를 누구에게 위임할 수 없다. 법은 본래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Rousseau, 2004: 77-82).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각 개인이 신체와 재산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한 후, 공동의 권력에 의하여 다시 자신의 것을 보장받는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공동 권력은 ‘일반의지(Volontegenerale)’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의지는 최고의 주권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자는 단일 개인이 될 수 없고 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만이 주권자이다(Roussaau, 2004: 130-132).

루소에게 있어 시민의 의지가 반영되는 사회라면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과 같은 정부 형태는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자는 부자의 지배하고 빈자는 의무의 이분법적 구도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자의 특권이 확고해지고 불평등은 제도로 고착화되어 현재

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한다(Rousseau, 2003: 103-104).

루소는 시민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주인으로 상정하는 민주주의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인격이 모두 결합되는 정치체를 ‘도시 국가(Cite)’로 부르거나 ‘공화국(Republique)’, ‘정치체(corps politique)’로 불렀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구성원을 칭할 때는 국민으로 부르고 주권에 참여하는 국민을 시민(Citoyens)으로, 국가의 법률에 종속된다는 의미를 신민(subject)으로 불렀다(Rousseau, 2004: 21-22).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원할 때마다 세울 수 있고 해산할 수 있는 편의적인 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루소는 현재의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의지를 통하여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루소의 이론은 한계가 나타나는데, 이어지는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2) 참여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한계

루소가 주장하는 일반의지는 모든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감정과 이성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루소의 일반의지는 절차적 합의를 넘어선 모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종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루소의 방법은 중우정치 및 동조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루소에게 있어 시민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민들이지만 현실에서는 비합리적 성향을 지닐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조현상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군중심리와 비슷한 논의이다(Sunstein, 2015: 28).

선스타인(Cass Sunstein)은 미국 수뇌부들이 ‘쿠바 미사일’ 사건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개인적 관계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를 지적한다.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행정 관료들의 의사결정이 개인적 친분으로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Sunstein, 2015: 25).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개인이 구성원 내의 사람들과 상이한 의견을 내었을 때, 야기될 따돌림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조 현상은 그 사회에서 믿고 있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믿음에 굳어지게 되는 현상이다. 동조현상은 ‘집단 사고(group-think)’와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의 심리학적 이론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⁸⁾ 자신의 의견이 다수가 생각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에 소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침묵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곧 집단 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존재가 집단을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이론을 토대로 하여 특정 집단이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이끄는 데 방해할 수 있다.⁹⁾ 2001년 9.11 테러에 대해서

8) 자신이 구성원 내의 사람들과 상이한 의견을 내었을 때, 야기될 따돌림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 부른다. 자신의 의견이 다수가 생각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에 소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침묵한다는 이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니스(Janis)는 집단 사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① 집단의 응집력이 높다. ② 집단이 외부 의견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③ 집단의 지도자가 매우 권위적이다. ④ 집단이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⑤ 스트레스가 높거나 외부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집단 사고의 증후로는 ① 집단이 취약하지 않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② 집단의 도덕성을 맹신하고 있다. ③ 집단의 결정을 합리화하고 있다. ④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⑤ 반대자에게 직접적인 동조 압력을 가하고 있다. ⑥ 구성원들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을 자체하고 있다. ⑦ 만장일치의 착각에 빠져 있다. ⑧ 반대 정보를 차단하는 구성원이 존재한다(함덕웅, 2005: 269 재인용).

9) ① 7명으로 구성된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장의 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② <그림 1>과 같이 <카드 1>에는 기준선이, <카드 2>에는 세 개의 비교 선이 그려져 있다. ③ 세 개의 비교 선 가운데 두 개는 기준선과 그 길이가 확연하게 차

미국인들 중 93%가 아랍인들의 소행이라 믿지만 쿠웨이트 국민들은 아랍인들의 소행 가능성을 11%로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Sunstein, 2011: 46). 이처럼, 루소의 일반의지가 누군가에 의해 어떠한 주장을 은연중에 세뇌하는 방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곽준혁, 2016: 219).

루소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루소는 각각의 시민은 다른 시민들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인 동시에 시민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상정한다.

그러나 루소의 일반의지가 추구하는 만장일치는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조건이다. 이상적 합의는 비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나와 타인 사이의 갈등을 없애기에 동일성 원리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Ranciere, 2015: 164). 이와 비슷한 사례로 ‘평판의 폭포효과(reputational cascade)’를 들 수 있다.

<표 1> 정보의 폭포효과(Sunstein and Hastie, 2015: 99)

	항아리에서 뽑은 공					
	행위자A	행위자B	행위자C	행위자D	행위자E	행위자F
개인적 선호	A	A	B	B	B	B
개인적 판단	A	A	A	A	A	A

이가 난다. ④ 실험 참가자들에게 <카드 1>의 기준선과 같은 길이의 선을 <카드 2>에서 골라 차례대로 번호를 말하게 하고 있다. ⑤ 실험 참가자 중 6명은 사전에 협조 요청을 받은 공모자들이고, 나머지 한 명은 피실험자이다. ⑥ 피실험자가 가장 마지막에 말하고 있다. 앞의 방법에 따라 다음 실험을 순서대로 실시하고 있다. 실험 1은 실험 전 6명의 공모자에게 모두 오답 1번을 말하도록 하고 있다. 실험 2는 실험 전 6명의 공모자 중 한 명에게 정답을 말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오답 1번을 말하도록 하고 있다. 대조군은 100%에 가까운 높은 정답률을 보이지만 실험 1에서의 낮은 정답률은 개인의 판단이 공모자들의 오답에 영향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실험 2는 집단 내에 자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데 이는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는 경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해준다(Noelle-Neumann, 1974: 43-51).

어느 한 회사에서 A와 B가 X라는 판단했다고 가정해보자. C는 X가 이성적으로 고려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행위자, D, E, F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평판의 폭포효과는 행위자 A와 B의 선호가 A임을 먼저 선점하여, 나머지 행위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무시하고 동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의견의 반하는 행동에 대하여 비난을 피하고자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페тит은 “현실 정치에서 달성될 수 없는 루소적 이상을 환호하기에, 통치에 있어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곽준혁, 2009b: 131)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루소의 일반의지는 시민들은 주권을 형성하게 되며 절대적인 권력인 것이다.

그리고 페тит은 루소가 상정하는 시민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며, 낭만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Pettit, 2019: 230-231).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타인의 의견을 모두 내 것으로 포섭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모든 이들이 만족할 수 없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치관이 변한다면 이에 대하여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루소의 참여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문제점으로 혼합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루소는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혼합정부의 구성 중 호민관에 대하여 “호민관들의 권력은 자유를 위해 제정된 법의 힘으로 황제들의 보호 역할을 하였고 이들은 공화국을 파괴해 버렸다.” (Rousseau, 2003: 157)고 하여 극히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루소는 기존의 혼합정을 거부하고 혼합정부(mixed government)를 주장한다(Pettit, 2016: 184-185).¹⁰⁾

10) 혼합정이란 특정 권력의 지배로부터 맞서기 위한 권력의 견제 역할로서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력분립을 뜻한다(곽준혁, 2009b: 120). 권력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권력의 힘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ellers, 1998:

루소는 혼합정을 “정부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국가는 결속력을 잃기 때문이다.” (Rousseau, 2003: 101)고 하여 혼합정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그리고 그는 단일정부를 최상의 정치체제로 이해하지만 주권자가 군주로 변질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합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혼합정부는 시민과 주권자의 중간 역할을 맡는 행정관직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루소의 관점은 시민들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정치관이다. 페티트는 시민의 역할을 권력에 대한 시민의 견제이지 모든 곳에서 참여하는 정치는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Pettit, 2019: 213). 이처럼, 혼합정은 기득권의 무분별한 이권 추구나 시민들의 부패와 방종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정치 형태이다. 권력의 견제를 중시 여긴 공화주의자들은 전형적으로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따라 갈등(tumult)’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Honohan, 2002 : 230).

상기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루소의 참여 민주주의는 공화주의에서 변질된 논의이며 오히려 공동체주의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페티트는 루소가 “공화주의적 기원과의 연결고리를 모두 상실하게 만들었다,” (Pettit, 2019: 62)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여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의지를 담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모든 시민의 의지를 담는 것이란 너무 이상적이며 전체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기에 불완전한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참여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63).

2. 대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이론

1) 사회계약론과 대리적 동의의 의미

현대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발휘하여 국가에 투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차선택의 민주주의 의사 결정론으로서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 대표를 선택하는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가 채택되어 ‘민의’를 대신한다.¹¹⁾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 투표를 통하여 뽑고 대표자들이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박효중, 2005: 518).

대의 민주주의의 전통은 영국의 사회계약론자인 홉스와 로크에게서 찾을 수 있다. 사회계약론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며 권한위임 받은 주권자는 절대적 권위로 간주하는 형태이다. 절대적 왕권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홉스가 있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존재로 상정한다. 이러한 상태는 “자연법이란 인간의 이성 찾아낸 계율 또는 일반적 원칙을 말한다.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상명을 파괴하는 행위나 자신의 생명보존의 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는 금지” (Hobbes, 2008: 176-177) 되기에 모든 인간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은 경쟁과 불신을 낳게 된다. 이와 같은

11) 마넌에 의하면, 대의 민주주의는 네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①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거를 통해 통치할 사람을 임명한다. ② 통치하는 사람의 정책 결정은 유권자들의 일정 정도 독립성을 지닌다. ③ 피통치자들은 통치자들의 통제에 종속되지 않고 그들의 의사와 정치적 요구들을 표현할 수 있다. ④ 공공 결정은 토론을 거친다(Manin, 2004: 14).

상태를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상정했다. 개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상태이다. 오직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힘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상태에서는 타인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약육강식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개인들은 ‘자기 보호(self-protection)’라는 근본적인 목적 추구에 배치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홉스가 이해하는 인간은 욕망과 욕구를 가졌으며 욕구 충족은 결코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자기 보존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개인들에게 전쟁상태보다는 평화가 더 나은 결과를 함의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무제한적인 자연법을 포기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자유만을 허용된다.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리바이어던에게 양도해야 한다(Hobbes, 2008: 180-181).

다음으로, 간접적 방식의 권한 위임의 민주주의 형태가 나타나기에 이른다. 신탁자의 위임 형태로서 동의론이다. 동의 개념의 어원은 로마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받아야 한다(Quod omnes tangit, ab omnibus tractari et approbari debet).”고 설명하고 있다.

동의 개념은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와 ‘가상적 동의(hypothetical consent)’로 분류할 수 있다. 명시적 동의는 말 그대로 어떤 사안에 대하여 명백한 의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적인 ‘나’를 훼손하지 않고 복종할 수 있게 만드는 개념이다(박효중, 2001: 192-193). 명시적 동의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험의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당사자는 계약 여부에 따라 거절 및 승낙할 수 있는 특징이 있

다. 명시적 동의는 나와 타인 간의 속임수 혹은 어떠한 개입 없이 자유롭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명시적 동의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고 자연법의 시행자로서 권리를 지니고 있기에 개인이 스스로 동의할 때만 유효한 것이다(정연교, 1993: 61).

한편, 로크는 개인이 국가에게 대리적으로 위임하는 신탁에 가까웠기에 명시적인 동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묵시적 동의(tacit consent)’의 개념으로 우회하여 설명하고 있다(박효중, 2001: 192-193). 로크에게 있어 자연상태는 공동 재판관의 부재이다(박효중, 2005: 274). ‘양도 불가능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개인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로크는 권위를 가진 공통된 재판관이 부재한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모두 자연법의 집행자가 될 수 있기에 자연 상태는 곧 전쟁 상태로 변모한다고 이해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며 이를 공동체에 양도하고 있다. 양도한 권리로 시민사회가 수립되며 각 개인의 동의가 공동의 권위, 혹은 공공체에 정당성을 부여한다(Locke, 1996: 95).

신은 세계를 근면하고 합리적인 자들이 사용하도록 주었지, 싸우기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의 번덕과 탐욕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었다(Locke, 1996: 34).

로크는 주권의 성격을 홉스와는 다르게 인식, 허용할 수 있는 정부형태에서 절대 군주제를 제외, 실제적인 국가의 형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동등한 도덕적 동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로크에게 국가는 홉스 식의 자신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 ‘신탁(trust)’으로 이해, 시민의 위임자로서 대리자로 판단하였다(박효중, 2005: 279). 즉, 개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에 누군가에게 위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상기 논의한 바, 개인들은 정치적 권위를 지닌 대표자들에게 대리인(agent)의 자격을 부여한다(박효중, 2005: 531). 대리인의 자격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크는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절차적 공정성이란 각각의 개인이 어떠한 내용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승낙 여부를 뜻하고 있다. 절차적 공정성을 토대로 한 개인은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정부의 직접적 사법권은 자신의 영토에 미치며, 그 영토의 소유자가 그곳에 거주하며 누리는 것에 한정된다.(중략) 따라서 정부에 대해 묵시적 동의만을 한 토지 소유자는 기부, 매매 등의 행위로 그가 소유했던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다른 국가에 가서 국민이 될 자유를 얻게 된다(Locke, 1996: 121).

로크는 자신이 속한 국가의 혜택을 거부하면 묵시적 동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 불가능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침해할 수 없지만 국가의 명령이 법치에 의한 것일 때 권리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입각하여, 로크는 묵시적 동의만 한 행위자는 자신이 지닌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를 증여나 매각과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면, 언제든지 그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Locke, 1996: 119).

묵시적 동의는 개인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항구적인 국민, 완전한 시민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며 명시적 동의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에 의해 유지된 질서에 편입되어 있다면 개인은 정부에 복종할 의무 역시 지니게 된다. 즉,

묵시적 동의는 조건부적 의무를 지닌다 할 수 있다(정연교, 1993: 63-66).

지금까지 살펴본 대의 민주주의에는 홉스와 로크의 대리적 동의로 이해할 수 있었다. 홉스는 자신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있다. 홉스가 계약에 대해서 구속된다면, 로크는 계약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박효종, 2005: 255). 이 원칙은 중세 시대에 정립된 원칙으로 “피지배자의 동의가 정치적 정당성과 구속력의 근원이라는 신념을 확신시키고 확립하는 데 공헌” (Manin, 2004: 116)하는데 의의가 있다.

2) 대의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한계

대의 민주주의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나타난다. 이를 다음의 입장과 연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홉스가 상정한 리바이어던의 주권자는 권위적 권력은 ‘수탁적 권위(fiduciary power)’의 우려가 나타나게 된다(박효종, 2005: 267). 동의 개념의 수동성으로 인한 관행적 동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는 기본적으로 면허, 인가, 인증, 허가, 위임, 권한부여 등과 같은 암묵적 동의의 개념들을 전제하는데 상기의 주장에 입각하여 본다면, 동의 개념은 주로 ‘받다’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의 개념은 개인과 개인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자유적 선택보다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기의 논의에 근거하면, 동의 개념은 형식적으로 자기결정의 자유를 중시 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발성(voluntariness)’의 특징을 내포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짙게 배어 있다(박효종, 2001: 205). 즉, 대의 민주주의에 근거한 대리자는 시민들의 의지를 담아 전달하는 데 그쳐야 하지만 대리자는 자신의 권위를 남발하는 수탁자가 되기 쉽다.

둘째, 로크의 동의론은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로크의 암묵적 동의가 현실에서 성립하려면 자연 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져야 하는 데, 국가는 개인들의 취미 및 이해 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모이는 동아리처럼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없다. 국가는 포괄적 정치 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공식적인 억압 및 물리력을 지닌 조직이기 때문이다(박상섭, 2008: 15).

개인은 특정한 영토 안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개인이 살아온 언어, 문화, 관습, 사회적 관계 등의 수많은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손실을 감수한 채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논의이다. 이처럼, 국가의 정체성은 사회계약론자들이 주장하는 ‘자발적 구성물’이 아닌 ‘민족·문화적 공동체’로 보는 것이 타당한 논리이다. 결국, 국가는 개인의 자발적 의사로 모인 집합체라고 이해하는 사회계약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대리적 동의의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뽑았다 해도 필연적으로 대표자가 시민들의 의지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주인과 대리인’, ‘의사와 환자’처럼 한쪽의 입장이 일방적 관계로 치우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 투표로 뽑은 대표자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참된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 선거가 마치 연예인 선발대회처럼 인기에 의존하는 투표 제도로 전락하여 선거에서 뽑힌 대리자는 시민들의 의지와 괴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Manin, 2004: 174-175). 즉,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대리인이 유권자의 의도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의도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 민주주의에 기반으로 한 투표 제도는 유권자의 의도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

또한, 투표로 뽑은 대표자는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에 구애받지 않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동의는 기본적으로 ‘관행적 동의

(conventional consent)’의 성향을 지닌다(박효중, 2005: 533). 대의 민주주의의 특성상 대표자들이 시민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대표자에게 맞춰야 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박효중, 2005: 153). 그러므로 동의 개념은 “가설적인 계약은 그저 실제적인 하급 계약이 아니다. 그 계약은 전혀 계약이 아니다.” (Sandel, 2014: 242)고 말한 것처럼,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끼워 맞추는 식의 한계가 나타난다. 이처럼, 대의 민주주의에 따라 투표로 뽑힌 대표자는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에 구애받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이론중의 하나인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리적 동의론의 입장은 행위자 선택의 자유 결여, 절차적 공정성 문제, 관행적 동의, 동조현상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서 대리적 동의론과 일반의 지만으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절차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의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은 이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동의론의 입장과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절차를 구현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집적 합의론이다. 그렇다면 다음 절에서 결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3. 결집 민주주의 의사결정 이론

1) 결집적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의의

앞서, 대의 민주주의가 ‘더 많은 참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위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대의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론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생취하였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실패한 제도임을 논증하였다. 대의 민주주의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해결방법으로 합의론이 제시되었다.

합의(agreement)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많은 사람들 및 공동체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약속하는 것’¹²⁾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률적 용어로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다.”로 설명하고 있다.¹³⁾

합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방과의 평등한 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의 개념과 중첩되지만 합의는 어느 한쪽의 지식, 문화, 권위 등의 편향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또한, 합의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관계를 계산할 줄 아는 ‘합리적’ 개인들의 절충적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합의 개념은 나와 타인과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종의 상호적 계약으로 불리어도 무방해 보인다.

상기의 합의 개념에 적합한 개념으로 협상적 합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효용, 선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셈에 밝은’ 협상적 행위자(bargaining agent)로 간주하고 있다(박효중, 1994: 34).¹⁴⁾ 합리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12) <https://www.macmillandictionary.com/dictionary/british/agreement>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한영사전, 합의,

URL:law.go.kr/lsTrmSc.do?menuId=4andsubMenu=4andp1=1andfsort=10andoutmax=50andquery=#click35

14) 협상적 합의에서 상정하는 기준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합리적 행위는 믿음과 욕구에 의해서 야기된다. 협상이란 자신의 이익을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추구하는 행동이다. 즉, 행위자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이 합리성으로 이어지며 이를 ‘합리적 선택’이라 칭한다. 둘째, 합리성은 특별한 규칙 따르기와 관련되어 있다. ‘일관성(consistency)’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유무를 가려내는 기준이다. 행위자 자신의 선호 및 믿음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행위자가 10kg 감량을 목표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운동 및 식이요

선택, 협상 준수에 있어서 타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협력하리라고 확신하기에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어야 하는 상호 간의 전략게임이다(박효중, 1994: 186).

이러한 합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합리성에 입각한 행동은 믿음과 욕구 이외에도 비합리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적 조건에 의하여 선택이 바뀌는 경우 역시 종종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행위자 A는 아침에 조깅하기 위하여 런닝화를 사러 쇼핑몰에 갔다고 생각해보자. A는 자신이 원하는 런닝화가 품절되었다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본래 필요하지 않았던 셔츠 및 청바지를 구매할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대통령 선거에서 행위자 A는 대통령 후보인 Z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A는 대통령 후보 Z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에 투표할 것이다(Searle, 2015: 152). 이와 같이, 합리성은 다양한 조건에 의하여 변하는 특징을 지닌다.

다음으로, 합리성은 과학과 같은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다

법을 실천함과 동시에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일관성이 드러나야 한다. 이를 행하지 못했을 때는 일관성이 결여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합리성은 인지 능력에 해당한다. 포더(Jerry Fodor)의 모듈(modul) 이론에서 드러나듯이 합리성은 인간의 능력에서 별도의 능력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넷째, 의지의 나약함(akrasia)은 심리적 선행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앞서 10kg의 감량을 목표로 하는 행위자는 특별한 목표 의식 없이 다이어트 한다면 의지의 나약함이 나타나기 쉬울 것이다. 다섯째, 합리성은 행위자의 목표와 기본적인 욕구, 목적, 의도 등을 포함하는 행위자의 목적에서 시작한다.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상정할 수 있는데, 특별한 목표 의식이 없다면 의지의 나약함이 빈번히 나타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욕구를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테면,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인데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흰쌀밥이 나오기에 다이어트하기에 어려운 조건이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는 의지의 나약함이 나타나기 쉽기에 일련의 조건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합리성은 일관성을 지녀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하고 있다. 엘스터는 이를 인과성(causality)으로 상정하고 있다. 행위자 A가 전교 1등을 원한다고 해서 부적절한 방법인 커닝, 헐박 등을 한다면 인과성을 해치는 행동이다(Elster, 1993: 33-34).

음의 사례로 이해해보자.

오늘밤 비가 온다면, 땅이 젖을 것이다.

오늘밤 비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땅이 젖을 것이다.

상기의 논리적 사고에 의하면 “p와 q라면, q는 q를 함축하고 있다.”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무한 퇴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 논리적 추론은 전건 긍정의 규칙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는데, 위의 문장은 “오늘밤 비가 온다면”이라는 전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장이 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도덕은 논리적으로 ‘이다(is)’와 ‘이어야 한다(ought)’와 같은 당위적 가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Searle, 2015: 154-164). 다시 말하면, 이성적 추론에 근거한 기준은 수학적 증명 영역에서는 합리성을 지니는 반면에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합리성은 모듈과 같이 별도의 능력이 아닌 사유와 언어의 구조 내에 짜여있는 일종의 ‘지향성’의 관점이다.¹⁵⁾ 따라서 의지의 나약함 역시 비합리성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합리성은 최적성, 일관성, 인과성에 입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합리성은 ‘경제적’이고 ‘도구적’인 특징이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사

15) 지향적 태도란 자신이 스스로 응용 가능한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향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지향성에 대해 올바르게 실용적인 탐구전략은 지향적 태세를 취하는 것이다. ② 지향적 태세는 어떤 체계의 믿음과 욕망을 기술하여 그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전략이다. ③ 어떤 체계에 믿음과 욕망을 기술하는 경우는 그 체계의 행동이 합리적일 때이다. ④ 어떤 체계의 행동이 합리적인 경우는 그 체계가 목표 지향적이고, 일정한 규정과 제약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기능을 할 때이다. ⑤ 이런 기능은 어떤 체계가 생존과 번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자생존의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해 온 과정의 산물이다(정성호, 200).

량’, ‘연대’, ‘명예’와 같이 고귀한 도덕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합의는 ‘보고 싶은 현상만 골라서’ 보는 근시안적인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제한된 합리성’을 낳을 수 있다(박효중, 1994: 143). 즉, 협상적 합의는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에만 급급한 나머지 공공선을 위한 선택이 무시되어 ‘얕은 합의’에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협상적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개인이 협동을 전제하고 있기에 무임승차(free-rider)를 고려하지 않았다(Elster, 1993: 152-155). ‘죄수의 딜레마’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설명된 바 있다.¹⁶⁾ 그러므로, 협상적 합의는 이익들의 경중을 따지는 선호 전략에 불과하기에 이를 합의 개념으로 상정할 수 없다(Pettit, 2012: 347-348).

엘스터(Jon Elster)는 “게임이론에 대해 통일된 개념 구도를 제 공한다고 믿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Elster, 1993: 42)라고 하여 게임이론을 합의의 기본 토대로 상정한다. 하지만 게임이론의 선택 이론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Elster, 1993:

16) 두 명의 죄수가 있다고 하자. 두 명의 죄수는 각각 격리되어 조사를 받는데, 모두 범행을 부인할 경우 결국 완전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둘 다 자백할 경우 혐의가 모두 드러남으로써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자. 한편,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한 사람만 자백할 경우 자백한 사람은 방면해 줄 것이나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사람은 가중 처벌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죄수들에게 알려 주었다고 하자. 죄수 1은 죄수 2가 자백하는 경우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등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것이다. 우선 죄수 2가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죄수 1도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괜히 혼자 범행을 부인하다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수 2가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죄수 1은 공범을 배신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죄수 1은 죄수 2의 행동 여부에 관계없이 자백을 하는 것이 최적의 행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죄수 2에게도 마찬가지다. 조사 받기 전에는 둘 다 자백을 하지 말자고 굳게 약속을 했겠지만 결국 둘 다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행위자는 자신에게 피해가 덜 오면서 상대방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선택, 모두 자백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선은 아니지만 모든 이가 만족할 수 있는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는 ‘조건부적 합의(conditional agreement)’가 도출된다(Elster, 1993: 66-67).

33-43). 인간 행위가 개인의 합리성보다는 사회적 규범의 입장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기의 논의에 의하면, 협상적 합의는 절차적 공정성은 확보하였지만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결집적 합리성(aggregation rationality)이 제시된다. 결집이란 행위자의 믿음, 선호, 가치, 효용 등에 의하여 자신이 처해 있는 외부적 제약에서 최선의 선택함을 뜻한다(정준표, 2003: 427).

결집적 합리성에 입각한 행위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신념(beliefs)과 욕구(satisfaction)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신념은 도구적 합리성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다르게 개인의 선택이 기대 이익에 따라 양화할 수 없다. 따라서 결집적 합리성에서는 규범적 합리성의 면모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결정은 현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 내에서 의사결정은 개별적인 판단을 한데 묶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랙(Dunkun Black)은 양자 변수로 가정하여 그 합의 개념을 전환한다. 블랙은 유권자의 분포가 가장 두터운 중위(mid-level)층에서 선호하는 정책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블랙은 지금까지 합리적 선택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다자 선택에 의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수를 최소한으로 제거하여 양자택일 상황인 단일 차원(single-peakedness)으로 가정하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합의론의 입장은 협상적 합의 개념과 결집적 합의 개념 중에 어느 개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협상적 합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강조한다면, 결집적 합의는 개인의 이익과 더불어 신념을 중시 여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 결집적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한계

앞서, 블랙이 주장한 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양자택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이 존재한다. 즉, 현실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잡한 문제가 엉켜 있으며,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책이 합리적 선택과 직결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콩도르세의 역설’과 ‘애로우의 역설’을 들 수 있다. 콩도르세의 역설이란 A가 가위, B가 바위, C가 보를 낸다고 가정한다면, A가 C를 승리하는 반면에 B는 A에게 승리할 수 있으며, C는 B를 승리할 수 있다. 이처럼, 양자택일에서는 승자를 겨룰 수 있지만 3자 택일에서는 순환론적 관점으로 도출되는 역설을 뜻한다.

애로우의 역설은 콩도르세의 역설에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 사회 내에서 ‘투표’로 대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 B, C라는 정당에 대한 선호가 $A > B$ 이고 $B > C$ 라면, $A > C$ 이라고 전제하고, 유권자 1은 $A > B > C$ 순으로 선호하고, 유권자 2는 $B > C > A$ 순으로, 유권자 3은 $C > A > B$ 라는 순으로 선호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블랙이 제시한 바대로 양자택일의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상기의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구성될 수 있다.

<표 2> 양자택일의 결과

	유권자 1	유권자 2	유권자 3	양자택일의 결과
A 혹은 B	A	B	A	A
A 혹은 C	A	C	C	C
B 혹은 C	B	B	C	B

3자 선택이 아닌 양자선택으로 질문을 바꾸어 보자. “A, C중 선호하는 것은?” 이라고 질문한다면, 유권자 2와 3은 C를 선택하고, 유권자 1은 A를 선택하여 C가 최종 선택될 것이다. 또한 만약 ‘B, C중 선호하는 것은?’ 이라고 묻는다면 유권자 1과 2는 B를, 유권자 3은 C를 선택하여 결국 B가 최종적으로 선택될 것이다. 이처럼, A, B, C 유권자는 각각 원하는 후보가 다르지만, 양자택일의 특성상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다른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애로우의 역설은 개인의 선택이 다른 사회 구성원의 선택을 무시하고 결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원칙을 어기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결국, 유권자가 원하는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박효중, 2005: 614-652).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더 발전시킨 학자는 기바드(Allan Gibbard)와 새터스웨이트(Mark Satterthwaite)의 불가능성 정리로 확장된다. 이들은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더 확장시킨다. 이와 비슷하게, 이들은 선거 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투표에 관련해서는 소(小) 플리니우스(the younger Pliny)가 체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2심제 투표의 경우로 변경될 시, 1단계에서는 무죄와 유죄를 추궁하는 방법이라면 2단계에서는 유죄에서 다시 유배와 사형으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2심제 투표는 소신에 의한 선택보다는 전략에 의한 선택으로 바뀌게 된다(박효중, 2005: 658-659). 이와 같은 근거에 입각하여 그는 단심제 투표를 강조하는 것이다.

기바드와 새터스웨이트는 이와 같은 소 플리니우스의 전략적 투표를 더욱 정교하게 체계화한다. 대통령 선거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A후보는 진보, B후보는 중도, C후보는 보수

의 정치적 성향을 지닌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 유권자의 절반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1차 선거에서는 2심제로 가기 위한 투표이기에 끌지만 면하기만 하면 된다. 즉, 1차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를 노리지 않아도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그리고 2차 선거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컨대, A후보와 C후보가 2차 선거에 올라갔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지층이 아닌 1차 선거에서 떨어진 B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을 얼마만큼 흡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B후보가 특정 후보의 지지선언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측면으로 볼 때, 선거는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하지 않는 전략적 조작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의 문제점은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행위자의 정직성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박효중, 2005: 661-673).

다음으로, 결집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행위자들의 비판 없는 사고를 꼽을 수 있다. 행위자는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이지만 객관적인 확률을 무시하고 미래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대책 없는 낙관성이 나타난다(Sunstein, 2016: 49-65). 이를 ‘현상유지편향’이라 하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Thaler and Sunstein, 2009: 110; Sunstein, 2016: 50). 이에 따라, 행위자는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어 장기적 미래인 저축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비판적인 사고를 탈러와 섀스타인은 ‘자동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3> 두 가지 인식체계(Thaler and Sunstein, 2009: 41)

자동 시스템	숙고 시스템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다
노력이 필요 없다	노력이 요구된다
결합적이다	연역적이다
신속하다	느리다

무의식적이다	의식적이다
능란하다	규칙을 따른다

지하철에 음료수 자판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음료수보다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음료수를 선택하는데, 이는 비판 없이 사고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Thaler and Sunstein, 2009: 110). 또한, 현상유지편향은 집단 애착으로 흐르기도 한다. 자신들의 신념과 맞지 않는 정보는 거짓으로 치부해버리고 믿고 싶은 정보만 믿는다. 자신이 감정에 의하여 선택했음에도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보를 찾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난다(Sunstein, 2011: 79-80). 이와 같은 자동 시스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숙고 시스템을 설명한다. 숙고 시스템이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의미하며, 이들은 이러한 숙고 시스템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행위자는 타인의 간섭에 의한 동조현상과 스스로의 종속을 만들어버리는 현상유지편향과 같은 문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결국, 자유로운 행위자는 알게 모르게 타인의 간섭과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결집적 합의의 과정에서 동조현상과 현상유지편향이 작동되었음을 명확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의하면, 결집적 민주주의는 행위자의 신념과 믿음에 기반하여 합의가 가능함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집적 합의가 행위자의 신념과 믿음에 위반하는 딜레마인 애로우의 역설과 기바드와 새터스웨이트의 전략적 투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결국 행위자들에게 순수한 자신의 선호를 선택하지 못하는 수단적 합리성에 그치게 될 것이다.

상기의 논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 내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없음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숙고적 방법에 입각한 심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할 것이다.

4. 심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이론

1) 심의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의의

현재 우리가 정치적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의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타난 제도가 심의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합의적 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포함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타인간의 갈등 상황을 조정 및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합의(agreement)’는 이를 개념화한 것이다.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의사 전달을 해야 하는데 보통 ‘대화’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하버마스(Jurgen Habermas)가 있다. 그는 민주주의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행위자의 자율성이다. 행위자들이 자주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지녀야 한다. 둘째, 민주적 공민권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인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 동등하게 살아야 한다. 셋째, 정치적 공론장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통해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상호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이다(Habermas, 2011: 170). 이처럼, 하버마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위한 방법으로 ‘담론윤리(Diskursethik)’가 제시된다. 담론윤리란 타인과의 상호 소통을 통한 보편타당한 도덕을 추구하는 이론이다(Habermas, 1997b: 245).

하버마스는 담론윤리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새롭게 논의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오스틴(J. L. Austin)의 화용론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¹⁷⁾ 하버마스는 발화효과적 행위를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발화수반적 행위를 ‘의사소통적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발화효과적 행위는 청자에게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즉흥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발화에 불과하기에 깊은 대화로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이처럼, 타인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기에 서로간의 ‘객관적’ 혹은 ‘같은 의미’라는 전제조건이 달성되었을 때만 타당성 있는 대화로 실현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가 담긴 발화수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Habermas, 2008: 133-141).

또한, 의사소통적 합의는 언제든지 합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자신의 의사소통적 합의는 모든 당사자에게 ‘도덕적 관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들만이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U’ (Universalisierungs Grundsatz)를 제시함으로써 상기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 1.1 모든 발화자는 스스로 모순이 되는 주장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1.2 술어 F를 어떤 대상 a에 적용하는 모든 화자는 모든 중요한 점에서 a와 같은 모든 대상에 F를 적용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 1.3 다른 발화자들이 같은 표현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1. 누구나 자신의 믿음, 신념에 관해 주장할 수 있다.
- 2.2. 토론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공격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1.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타인과 경합할 수 있다.
- 3.2. a. 누구나 모든 주장에 관해 문제 삼을 수 있다.
- b. 누구나 담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주장에 관한 소개 및 설명

17) 오스틴에 의하면, 화행(speech-act)은 크게 문장의 뜻(sense)과 지시체(reference)를 결정하는 ‘발화행위(locutionary act)’, 명령이나 약속 등을 의미하는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함으로써 듣는 이가 반응하는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로 나뉜다(Austin, 1992: 124).

할 수 있다.

c. 누구나 자신의 태도,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3.3. 발화자가 내·외부적 강압이나 3.1과 3.2를 넘어선 권한에 대해 방해받을 수 없다(Habermas, 2000: 68).

담론윤리는 내용적 규범에 대해 강제하지 않으며, 개개인들이 도덕적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한 절차를 강조한다는 점이 다른 윤리 이론과의 차별성이다(Habermas, 1997b: 168-175).

그러나 회의주의자들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Munchhausen trilemma)’ 논증으로 하버마스를 비판하고 있다.¹⁸⁾ 한편, 하버마스는 회의론자들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회의적’이라는 주장은 이미 타인에게 의사 표현이 되고 있는 모순이 지적된다. 다시 말하면, “A는 B이다.”와 같은 주장을 제시하는 순간, 그 명제 자체도 의심 가능한 회의적 명제이다. 즉, 회의주의자들의 모든 주장은 회의적이어야 하기에 자신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은 모순으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소통적 행위는 타당성 주장을 내포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배제하는 대화는 성립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를 ‘수행적 모순(der performative widerspruch)’으로 논박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 개념으로 나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이해 지향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을 역설하고 있다.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유효하게 참여하기 위해 우선 인정해야 하는 전제가 있다. 이와 같은 논증으로 하버마스는 회의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상호적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하버마스는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논증

18) 뮌히하우젠 트릴레마란 특정 주장의 논리에서 근거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어떤 것이든 옳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근거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 무한 반복된다. 따라서 논증 자체는 "증명 없이 옳다"는 명제로 순환된다. 이처럼, 세 가지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순환론적 논증으로 귀결되는 역설 현상을 의미한다(Habermas, 1997b: p.125).

규칙의 보편화 원리인 ‘D’ (Diskurstheoretischer Grundsatz)를 설정하고 있다.

- ① 담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담론 내에서 나타나는 주제에 대해 동등하게 말할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질문과 답변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 ② 모든 담론 참가자들은 평등한 기회를 지니며 주장, 권고, 설명, 교정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에 대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의 타당성에 도전해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한 비판에 대해 명백하며 반영되지 않은 편견은 남아 있지 않다.
- ③ 참가자들은 발표 연설을 통해 자신의 태도, 감정, 소망을 자연스럽게 명백하고 동등하게 표현하고, 참가자도 서로에게 정직해야 할 것이다.
- ④ 참가자들은 명령을 이행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에 동등한 기회를 지니며 타인과의 충분한 상호적 수용을 통해 약속과 거절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상호 호혜적인 방법이다(Habermas, 1984: 177-178).

그러나 의사소통적 합리성 역시 현실에서 구현하기 힘든 이상적인 전제 조건으로 비판받고 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대안으로 구트만(Amy Gutmann)과 톰슨(Dennis Thompson)의 상호적 합리성이 제시되고 있다. 구트만과 톰슨은 합의의 속성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거래임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구트만과 톰슨은 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힘의 불평등을 간과하면 참여 주체들이 심의 과정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참여 주체에게 상호성(reciprocity)을 제시하고 있다(Gutmann and Thompson 1996, 52-94).

구트만과 톰슨은 자신들이 제시한 상호적 합의 역시 투표 제도의 가상적 공개성에 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존의 투표제도가 비공개 투표였기에 시민들은 합리적 무관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대중을 현혹하고 선동하기 위해 왜곡되고 변질된 방법을 지속해서 나타난다고 지적

하고 있다. 즉, 비공개 투표에 머무른다면 시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트만과 톰슨은 ‘반복된 심의’로 시민이 심의적 책임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트만과 톰슨은 심의 민주주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로 소규모 위원회를 소개하고 있다. 구트만과 톰슨은 애커만과 피쉬킨의 ‘심의 민주주의의 날’을 참고하고 있다. 피쉬킨(James Fishkin)과 라이프(Ethan Leib)는 ‘심의 투표(Deliberative Polling)’ 개념으로써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심의 투표의 기본 논조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적 심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약 500여 명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참여하게 하고, 다시 15명의 조를 나눈다. 조마다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전문가에게 질문할 내용을 합의하고 있다. 각각의 소그룹의 의견을 정리하여 질문하고, 정책 전문가들의 논의를 제출하고, 다시 배심원들은 최종 결정에 대하여 투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확보한 결정은 거부할 수 없는 권리가 된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 합의된 결론을 대표자에게 권고안으로 제출하거나 헌법 개정안으로 공표하고 있다. 만약, 투표로 인한 결정을 거부한다면 권력 남용으로 간주하여 시민들은 항소할 수 있다(Ackerman and Fishkin, 2004: 129).

이와 같이, 상호적 합리성은 의사 결정자가 법 집행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문가의 독단적 결정을 제어할 수 있다(장동진, 2012: 90). 구트만과 톰슨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상호적 조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최근까지 가장 체계적인 자유주의적 심의 민주주의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곽준혁, 2005). 다음 절에서는 심의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이 지닌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심의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한계

기존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논의와 비슷하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의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힘든 이론이라고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버마스의 심의 민주주의는 평등한 관계에서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의사소통적 합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원칙상으로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중을 대표하는 연설들끼리의 토론이 벌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의사소통적 합의는 토론이 아닌 대표의 웅변에 의한 설득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Elster, 1998: 1).

그리고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합의는 개인이 자유로운 가운데 강제 및 지배 없이 이성의 힘으로 합의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타협이 아니라 도덕적 타당성을 지니는 합의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의는 개인의 권리에 중점을 맞추으로써 그가 주장한 ‘생활 세계’ 내에서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봉착한다. 이에 따라 겉으로는 심의적 의사 결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있는 자의 웅변이나 순응하게 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의 연역적 논리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현실에서는 체스 게임과 같은 형식적 규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Wellmer, 2009: 94-95, Mouffe, 2008: 111, Pettit, 2009a: 6-7). 의사소통적 합의의 한계에서 논의한 바처럼 구트만과 톰슨의 상호적 심의 역시 기술적 토론에 그쳤다는 문제점이 있다(Peterson, 2009: 56).

셋째, 심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에 기반

하고 있기에 합의하기 어렵다(Elster, 1998: 66). 하버마스는 이성 간의 대화로 합의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비슷한 언어 및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생활세계’가 있기에 가능한 논의이다. 그러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이 나타난다면 합의는 이상적 상황에 불과할 것이다. 공약불가능성이란 각각의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도덕적 가치가 다르기에 서로 간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모두 사물들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체험하고, 다르게 느낀다. 타인의 세계 안에서 등장하는 것은 자신의 세계 안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상이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상이성에 대해서조차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이성은 상대방과 나에게 아주 상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차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이로서 규정하고 확정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깊고 넓다(Rombach, 2001: 284).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처럼, 공약불가능성은 논리나 가치중립적 경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공약불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종(conversion)’ 밖에 없다. 이러한 공약불가능성은 어떤 지식 및 합의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역할일 것이다.

넷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합리적 이성 및 진리만을 말해야 하는 전제가 있는데 이는 너무나 이상주의적인 입장이다(Blattberg, 2003: 157). 렉(William Rehg)은 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렉은 직장생활에서의 불평등한 관계를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고용인 A와 피고용인 B가 있다고 가정하자. A는 B에게 지금의 지역보다 아주 먼 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A의 권유에 대해 B는 거부할 수 없다. 둘 사이에는 ‘고용’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기에 이를 거부한다면 B는 해고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hg, 1994: 70).

이와 같이, 심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론은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의사소통적 합의를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불평등한 관계로 인한 ‘암묵적 동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겉으로는 심의적 의사결정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가 있는 자의 웅변에 순응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의는 평등한 관계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잠정적 합의에 그칠 것이다.

다섯째, 담론윤리가 지닌 보편화의 원리는 결국, 비일관적인 원리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 페티트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를 비판하는데, 정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버마스가 추구하였던 의사소통적 합의는 일종의 진리를 담보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기존의 심의 이론에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추상적인 법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없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의는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이상적 논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 내에서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불일치를 도출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Pettit, 2001: 2).

이러한 근거로 의사소통에 근거한 합의가 진행되었어도 담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페티트는 ‘담론적 딜레마(discursive dilemma)’로 심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담론적 딜레마는 앞서 제시된 애로우의 역설을 심화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애로우의 역설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일관적인 의사결정으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남을 잘 보여주는 딜레마였다(List, 2002: 72).

<표 4>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조건(Pettit, 2001b: 285)

	자동차를 원하는가?	볼보 자동차를 원하는가?	볼보 자동차가 있는가?
행위자 A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행위자 B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행위자 C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위의 사례는 자동차를 원하는 행위자와 볼보 자동차를 원하는 행위자 간의 갈등 상황이다. 자동차와 볼보 자동차를 원하는 쪽이 다수이기에 결론적 추론으로 보았을 때, 볼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 결정이다. 결론적 추론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공동체 내의 시민이 원하는 바가 ‘볼보’ 자동차인 이유는 다른 메이커의 자동차보다 내구성, 안정성 등에서 나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위자들이 볼보 자동차를 원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타당성 있는 선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리적 의사결정은 현실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조건이다. 특히, 의사결정의 불일치는 재판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어느 회사에서 감전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유무에 관한 논의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행위자는 적절한 대화와 심의를 거쳐 감전이 심각한 위험이 있는지 내지는 안전장치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임금을 삭감할 것인가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 가지 유형의 그룹이 도출될 것이다.

<표 5> 작업장에서의 담론적 딜레마(Pettit, 2001: 273)

	감전이 작업장에서 위험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효과적인가?	임금을 삭감할 것인가?
A그룹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B그룹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C그룹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A그룹은 감전이 작업장에서 위험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해한 반면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에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에 B그룹은 감전이 작업장에서 위험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반면에 안전장치는 효과적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A와 B는 모두 임금을 삭감하는데 부정하고 있다. 그룹 C는 모든 전제에서 긍정하고 있다.

위에서 나타나는 딜레마는 근거와 결론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감전에 대한 위험한 결과’ 및 ‘안전장치의 효과’에 대한 조건에서 그룹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금을 삭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다가 우세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상기의 표에서 나타난 딜레마는 ‘전제적 추론(premise-driven)’에 의하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결론적 추론(conclusion-driven)’에서는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주장이 우세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Pettit, 2001: 274-276).

다시 말하면, 전제적 추론의 결정을 존중하면 결론적 추론이 무시되지만 결론적 추론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전제적 추론 결과가 무시되는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택지가 다자 선택일 경우 유권자가 원하는 대리인이 뽑히기보다는 정치적 전략에 따라 선택되는 양상이 나타나 선택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페티트는 애로우 역설과 비슷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행위자가 어떤 추론에 근거했는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됨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객관적 사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치판단에 의하여 판단이 달라지는 합의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대의 민주주의의 과반수결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 심의 민주주의에서의 실질적 합의에 관한 문제 등이 민주주의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다. 결국,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심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해주지만 실질적 합의는 담보할 수 없으며, 대화의 합의보다는 공약불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의사소통적 합의는 더 나은 논증만이 유효해야 하지만 나와 당사자들은 자신의 견해만을 주장하는 끝없는 평행선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버마스가 기획한 보편적 화용론은 절차적 규칙만 강조하는 데 그치게 된다(Mouffe, 2008: 111). 이처럼, 담론윤리에서 가정하는 같은 조건, 보편성에 기반을 둔 합의는 유토피아적 이상향이며,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지 못하기에 현실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로 머무르고 말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론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할 것이다.

Ⅲ. 민주주의 불일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번 장에서는 민주주의 불일치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우선, 1절에서는 동의 개념의 전환으로 소극적 동의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세부적으로, 순리적 동의인 스캔론과 결과적 동의인 후견주의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2절에서는 합의 개념의 심화로서 급진적 합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중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네그리와 하트, 무폐의 경합 다원주의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3절에서는 합의 개념의 전환으로서 반성적 합의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인 담론적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리스트와 페팅이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알아봄으로써 민주주의 불일치가 해소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1. 동의 개념의 전환: 소극적 동의

1) 순리적 동의: 스캔론

앞 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의사결정 방법은 ‘대리자(delegate)’와 ‘수탁자(fiduciary)’ 역할 중 어느 쪽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대리자는 시민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해주는 전령 역할만 자임한다면, 수탁자는 시민들의 동의에 따른 권위를 부여받아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민의 의지를 반영한 민주주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또한,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의 투표 제도는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부감이 적은 사람’을 선출하는 데 머무른다(박효종, 2005: 520). 현재 대의 민주주의의 선거 방식은 누구를 대표하는지, 무엇을 대표하는지, 대리

인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무정형의 대표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의 민주주의는 19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소멸한 정치 이론으로써 ‘가상적 동의’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현대사회의 정치제도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옹호한 학자가 스캔론이다. 스캔론은 도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정의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도덕적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틀리고 타인이 옳을 수도 있는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용은 어떤 인간도 결코 오류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통찰과 모든 사람은 자기 관점에 얽매일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오류 가능성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지 수정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끼칠만한 합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Scanlon, 2008: 120-122).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빛을 지고 있는가.’의 의미는 좋음을 증진하는 것이며 이는 도덕적으로 불편부당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Scanlon, 2008: 146). 이와 같이, 행위자가 도덕적 행동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에 의하여 일어남을 의미한다.

스캔론 계약주의의 특징은 좋음을 가진 존재들이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도덕적 판단에 민감한 존재들이며, 도덕적 추론을 할 수 있으며, 상호 협동 가능함을 의미한다. 계약주의의 이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가치를 호소하는 것을 중시 여기며 이를 상호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Scanlon, 2008: 261-279).

한편, 스캔론의 동의 개념은 로크와 비슷하게 가상적 동의로 구분할 수 있다. 스캔론에게 있어 동의란 모든 사람들이 ‘순리적인 조건(reasonable terms)’으로 그 개념을 제시한다. 스캔론이 규정하

는 동의론은 기존의 동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의 관점이 아닌 ‘거부될 수 없음’으로 개념의 전환을 이루어 낸다(박효종, 2005: 710). 스캔론의 거부될 수 없는 순리적인 동의는 크게 네 가지 조건으로 구체화하여 설명된다.

- ① 개인이 선호하는 어떤 행위나 정책은 ‘다른 사람들이’ 순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면, 허용 가능하다.
- ② 어떤 행위나 정책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순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면 그 경우에 한하여 허용 가능하다.
- ③ 어떤 행위나 정책은 ‘어떤 대표자’라도 그것을 순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면, 그 경우에 한하여 허용 가능하다.
- ④ 어떤 행위나 정책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특정 대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만보다 그 대안에 대하여 더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경우에 한하여 허용 가능하다(박효종, 2005: 712).

스캔론은 거부할 수 없는 순리적 동의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존스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 15분 동안 송신기를 끄지 않으면 구조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 존스를 구하기 위하여 송신기를 차단한다면, 수많은 시청자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지 못하게 된다. 한편, 존스는 목숨에는 지장 없지만 그의 손과 육체적 상해는 입은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월드컵 시청에 의한 즐거움에 따른 존스의 육체적 희생이나, 존스의 피해에 따른 수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의 감수에 대한 딜레마 상황을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스캔론은 행위자들이 더 큰 이익을 산출하는 행위 과정을 선택하기를 주장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누릴 즐거움’이 ‘한 개인의 고통’보다 크다면 이는 합당하게 존스에 의하여 15분간 송신기를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Scanlon, 2008: 361-362).

합의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이익을 구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동기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게 거부하지 못하

는 원칙들을 찾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가정한다(Scanlon, 2012: 23).

스캔론은 나와 타인간의 동의는 적용만 하면 되는 원칙으로 상정할 수 없으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살인을 하지 말라’와 같은 원칙은 전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Scanlon, 2008: 313-315). 따라서 스캔론이 주장하는 ‘거부할 수 없는 동의’는 개인의 목표, 능력, 조건들에 의한 일반적 이유(generic reasons)에 근거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원칙은 구체적인 예외 규정을 두거나 계약을 파기할만한 고려 사항이 없을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덕은 개인의 편견을 수정하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스캔론의 계약주의 강점은 도덕에 대하여 통일된 설명이 가능한 규범적 기초를 설명가능하며, 배제 가능성의 기준을 확실히 규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canlon, 2008: 323-339).

이와 같이, 스캔론의 순리적 동의의 강점은 도덕에 대하여 통일된 설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배제 가능성의 기준을 확실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로 다른 모든 도덕적인 개념들을 한 가지 개념으로 환원하지 않고 통일된 도덕의 틀 안에서 도덕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 (Scanlon, 2008: 337)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캔론의 순리적 동의의 문제는 순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옳음이 도덕적 술어이듯이 그름(wrong) 역시 도덕적 술어이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그르다라는 술어는 행위자의 게으름과 낭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관점에서 정당화 가능하지 않음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동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즉, 어떠한 원칙이 합당하게 거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다(Pettit, 2000: 149). 누가 순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처럼, 순리적 동의는 루소의 일반의지에서

지적된 바와 비슷하게 순리성은 개인들의 반성이나 성찰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어야 하지만 동조현상 및 관습에 의한 강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박효중, 2005: 711).

또한, 스캔론의 거부할 수 없는 순리적 동의는 도덕에서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난다. 스캔론은 수학의 소거법과 같은 방법으로 명제의 부정이 다른 조건과 거짓이 있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참임을 밝히는 과정으로 증명한다. 그러나 도덕에는 포섭되지 않은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적 성취나 환경윤리와 같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를 다룬 원리들은 스캔론이 주장한 ‘거부할 수 없는 동의’와 관계가 없다. 즉, 명제의 부정이 성립된다고 해서 그 명제가 타당한 것은 아니다.

페티트는 이와 같이 도덕 영역에서 순리적 동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정당화불가능성(unjustifiable)’의 개념으로 반박하고 있다. 스캔론은 정당화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필요충분관계로 해석하지 않고 연역적이고 선형적인 관계에서 이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문제시 되는 것이다(Pettit, 2000: 153). 왜냐하면, 스캔론은 행위자는 좋음을 증진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주장에는 의미론적 보증(semantic warrant)과 실제적 의미론적 보증(semantic cum substantive warrant)에 의한 방법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의미론적 방법은 옳음이라는 개념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인 반면에, 의미론과 실제적 보증은 정당화가능성으로만 이해하는 시각이다.

페티트는 빨강(red)을 통해서 둘을 구분하고 있다. 선형적으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즉 빨간색은 붉은 사물의 객관적인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물의 본질과 상관없이 붉게 보이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빨강게 보이는 것일 뿐 진정으로 빨간 것이 아니다. ‘빨간 것’이 객관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라면 ‘빨강게 보이는 것’에는 주관적인 성질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성질을 지닌 의미론과 주관적인 의미론과 실제적 보증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사물의 객관적인 속성을 보증하는 의미론과 주관적인 속성인 실제적 의미론과는 구분된다.¹⁹⁾

페티트는 스캔론의 순리적 동의 방법은 타인과 동의가 가능하다는 그 도덕적 명제는 진리가 되는 것인데, 너무나 자의적인 측면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대의 민주주의에서 제시된 바 있는 부정형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비판한다(Pettit, 2000: 161-162). 이처럼, 본질적으로 도덕이 있다는 입장과 본질적인 척 하는 도덕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스캔론의 순리적인 동의의 방법은 이 둘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스캔론의 순리적 동의는 거부할 수 없는 동의 개념으로 로크의 묵시적 동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스캔론의 순리적 동의 방법은 매우 합리적인 이론이면서도 동시에 상대주의적 합의에 그치게 만들었다. 다음 절에서는 스캔론과 비슷하게 로크의 묵시적 동의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으로 후견주의가 등장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알아보려고 할 것이다.

2) 결과적 동의: 후견주의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리적 동의는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행위자들이 거부할 수 없다면 동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순리적 동의의 기준에 대한 의문, 상대주의적 합의에 대한 불확신에

19) 나아가, 페티트는 『에우티프론』에서 제시되었던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통하여 위의 논변을 보충한다. 소크라테스가 신들이 경건함 때문에 신에게 사랑받는 것인지 경건함이 신에게 사랑받는 것인지를 에우티프론에게 물어본다. 그는 적절한 기도와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 대답한다. 그렇다면 경건함이란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경건함인데 에우티프론이 처음에 주장했던 “경건하기 때문에 신에게 사랑받는다.”의 논리는 모순된다.(Pettit, 2000: 153-161).

대한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의사결정론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소극적 동의의 형태인 후견주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앞서, 가상적 동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 바 있다. 가상적 동의는 행위자의 승낙 없이도 동의가 이루어지지만, 로크의 묵시적 동의 논변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 개념은 여전히 행위자의 수동적 태도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후견주의자들은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논의로 가상적 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후견주의(paternalism)’란 행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간섭은 타당하다는 동의론이다.

후견주의는 기본적으로 밀의 ‘위해의 원리(the harm principle)’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밀(J. S. Mill)은 “인간이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게 되는 경우는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Mill, 2005: 30)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후견주의는 타인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행위자에게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스스로의 자유를 방종할 수 있는 권리로 후견주의를 반박할 수 있다. 즉,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관하는 ‘비뚤어진 자유’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위자 중 가까운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같이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국민연금을 포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냉소적인 개인보다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공정한 판단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Marneffe, 2006: 89).

이와 관련하여, 드워킨은 ‘미래 지향적 동의(future-oriented consent)’를 주장, 현재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나에게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로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후견주의는 행위자들이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 정확한 정보 및 이익을 산출하지 못할 때, 후견주의는 안내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Thaler and Sunstein, 2009: 118). 다시 말하면, 후견주의는 강제로 유도하는 강압적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행위자에게 몇 가지 대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언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간섭이라면 정당하지 않은 간섭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동의에 입각한 후견주의가 아닌 결과에 입각한 ‘복지 증진(welfare promoting)’ 전략의 방법으로 나타난다. 넛지(nudge) 이론이 대표적인 복지 증진 전략 방법이다. 넛지란 피후견인의 선택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게끔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Thaler and Sunstein, 2009: 16). 넛지는 가장 좋은 선택을 권유할 뿐 특정한 가치나 선택을 강요하지 않기에 ‘수단 개입주의’적 성격을 지닌다(Sunstein, 2016: 80-90).

이와 같은 후견주의는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의 논의와 상당 부분 비슷하게 전개된다. 후견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는 율리시스의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율리시스를 묶은 선원을 ‘친절한 강압’으로 간주, 율리시스를 위해 대변해주는 대리인(agent)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Pettit, 2009: 46-47).

후견주의가 주장하는 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추정된 ‘암묵적 동의’로 이해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을 잃어 길에서

쓰러져있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수단적 개입주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다고 가정해보자. 응급 처치가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그의 신분 및 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간섭이 정당화 된다. 이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추정된 동의’라 하며, 이러한 동의는 환자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에 정당화 가능하다.

그러나 후견주의가 상정하는 암묵적 동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할 수 있다. 우선, 후견주의는 행위자의 자발성을 훼손할 수 있다. 1957년 살고(salgo)가 수술의 부작용으로 신체 마비가 오자 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이다(Ruth and Tom, 1986: 125-129). 이와 같이, 후견주의는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현실에서는 후견주의가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존재한다. 길거리에서 폭행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다가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례²⁰⁾, 가방을 빼앗긴 여성을 도와주다가 일행과 함께 폭행을 당했으나 해당 여성은 진술을 거부한 사례가 그것이다. 피해 남성은 “여성들의 진술 거부가 폭행당한 것보다 더 억울하다”며 “앞으로 눈 앞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도와주려 나서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하였다.²¹⁾ 이처럼, 후견인의 동의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견주의적 간섭이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사례

20) '무차별 여성 폭행' 썩썩한 무관심
<https://www.youtube.com/watch?v=nVjesr99Arg>

21) 술취한 여성 돕던 30대 남성 무차별 폭행 당해 중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2&aid=0002055122>

가 나타날 수 있다. 국가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는 마약금지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시민들의 마약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일로서 이를 강압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못한 결정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대표적인 후견주의적 실패 사례이다. 1960년대는 전쟁 직후 시기여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였다.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덜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하고 있다.” 나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1970년에 4.53이었던 출생률이 2011년에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져 저출산이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 내리는 정부조차 판단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후견주의는 알게 모르게 수단적 개입주의에 그치지 않고 지배적 성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Pettit, 2019: 132).

일련의 논의를 통하여, 후견주의는 행위자가 명백한 사실로서의 동의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온정적 간섭에 의한 법적 동의를 해명하는 것에 관심 가진다(Husak, 1981: 28). 구성원들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간섭을 행하며, 그 사람의 ‘의지’ 신념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자유에 가해지는 제약인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 운전 중 안전벨트 강제 착용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견주의적 체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후견주의적 접근은 좋은 간섭이 아닌 행위자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으로는 부적합하다. 다음 절에서는 기존 합의 개념의 심화로서 사회주의자들의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다중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민주주의와 쟁투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무페의 논의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할 것이다.

2. 합의 개념의 심화: 급진적 합의

1) 다중 민주주의: 네그리와 하트

앞서,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후견주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후견주의는 암묵적 동의라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견주의는 좋은 결과를 위하여 개입하였으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의 가능성을 논변하였다. 또한, 후견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기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론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급진적 합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탈냉전 시대로서 공산주의의 몰락되었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점철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서 새로운 접근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el Hardt)는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다.

네그리와 하트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냉전의 종식으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으로 보이나 예상치 못한 국면이 나타났음을 주장한다. 우선,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제국주의 대신에 ‘제국(empire)’의 개념이 새롭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제국주의는 로마, 영국, 오스만 제국과 같이 큰 영토를 차지하는 정복을 의미하였다면 제국은 공간 및 경계가 없이 지배하고 있는 탈공간, 탈국가, 탈지역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제국은 지구화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네트워크의 힘이 스스로 대중을 억압, 착취한다고 주장한다(Hardt and Negri, 2005: 428).

제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질서의 모든 곳에서 작용하여 푸

코의 규율사회와 비슷하게 시민들을 제국의 영향 하에 포섭하여 생체 권력으로까지 확장된다(Hardt and Negri, 2005: 19-20). 결국, 제국은 시민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훈육하려는 규율사회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노동은 이러한 제국의 면모가 잘 나타나는 곳이다. 노동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은 상승하는 낙관적인 예상을 하였지만 오히려 노동의 예측을 가지고 왔다. 노동은 단순히 생활을 위한 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노동 바뀌어 착취의 문제점이 오히려 심화되었다(Negri, 2010: 137).

그리고 제국은 전쟁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제국은 정부 없는 주권 형태로 나아가기에 이른다. 언뜻 생각하면, 정부 없는 주권의 형태는 ‘인민(people)의 조직들’로 이해하여 초지역적, 초국가적인 형태인 UN, NGO가 형성되기에 세계시민주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Hardt and Negri, 2005: 407-408).

그러나 이들은 세계시민적 기구가 신자유주의적 기획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세계시민적 기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도덕성에 입각하여 있기에 역설적으로 제국이 추구하는 질서를 옹호하는 근거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단순히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지구의 질서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걸프전쟁이다. 걸프전쟁은 미국이 이라크의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정의로운 전쟁으로 간주한다.

제국적 전쟁은 전지구적 정치환경을 형성하는 과제를 떠맡는다. 그리하여 그것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미에서 삶권력의 한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제국적 전쟁이 새로운 전지구적 질서를 정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동적 혁명의 어떤 지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기존의 제국 질서를 공고히 하는 규제적 과정에 불과하

다.(Hardt and Negri, 2008: 56).

미국은 이라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권선징악으로서의 정의로운 전쟁으로 그 의미를 격상시킨다. 이처럼, 이라크 전쟁은 탈국가적인 제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제국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고 구성된다.” (Hardt and Negri, 2005: 43) 고 하여 제국은 단순히 폭력적 권력에서 나오지 않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사법적인 권력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네그리와 하트는 현대 사회의 제국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은 현재의 민주주의가 만인의 민주주의이기에 ‘절대적’인 가치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 즉, 만인의 민주주의는 모든 이들이 권력을 가진다는 개념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루소의 일반의지에 입각한 참여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만인의 민주주의를 수정하기 위하여 대의 민주주의가 등장했다. 대의 민주주의는 민중의 지배를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백신’ 역할을 하고 있다.(Hardt and Negri, 2008: 321-322).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주지 못했는데, II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의 민주주의는 모든 이들을 만족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시민들이 기존의 투표 제도에 대한 불신 및 항의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Hardt and Negri, 2008: 359).

이와 같이 제국의 사회에 포섭되어 있는 시민들이 제국을 전복하기 위해서는 ‘다중(multitude)’의 개념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다중은 무차별적인 무리를 뜻하는 대중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공통성을 만들어 시민을 뜻한다(Hardt and Negri, 2005: 13).

네그리와 하트는 다중에 입각한 시민이 자본주의에 대항할 방법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자본주의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천적 방법이다. 또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수많은 사례가 등장하였기에 노동자들의 노동거부는 자칫하면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자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은 파괴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으로, 네그리와 하트는 현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폭력을 민주적으로 사용하기를 권유한다. 현 체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폭력적 혁명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은 체제 전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jercito Zapatista de Liberacion Nacional)’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모든 군사적 활동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폭력의 사용은 오직 방어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폭력의 사용은 폭정에 맞선 방어적 저항으로 간주한다. 이는 나치에 맞서 유대인들의 저항이 이와 같은 사례로 설명한다. 만약, 유대인들이 나치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죽음에 맞서 폭력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에 입각하여 시민은 ‘무장한 시민’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Hardt and Negri, 2008: 450-453).

네그리와 하트는 분명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내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기획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우선, 권력에 대한 관점이 상이하다. 그리고 네그리와 하트는 “마키아벨리의 사유는 정치학을 영속적인 운동으로 재구성하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장을 열었다.

이러한 것들이 서구의 민주주의의 교리가 마키아벨리에게서 도출되었다는 것이 교훈이다.” (Hardt and Negri, 2005: 223)고 하여 마키아벨리의 갈등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국에서의 권력이 중심이 없고 탈영토화 되어 있어 기존의 정치 질서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네그리와 하트는 마키아벨리를 계승하는 몽테스키외와 미국의 연방주의자들도 권력 분산의 조건으로서 혼합정을 주장하였다. 마키아벨리는 제도 내에서의 갈등의 긍정성을 강조했다면, 헌정주의는 기능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Hardt and Negri, 2005: 411). 네그리와 하트가 불일치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본질적인 모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혁명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네그리와 하트는 혼합정이 추구하는 권력의 견제 역할이 일종의 제국적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에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혼합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모든 것들이 조직되는” (Pettit, 2019: 212) 제도인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칙은 특정한 권력층에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며 시민과 권력층이 상호 견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혼합정은 권력을 지닌 자들이 영속적인 지배를 방어하기 위한 방편의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공화주의에 입각한 혼합정은 수평적 균형을 주장하기에 ‘의견 불일치’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뜻하는 불일치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정당에 대하여 경쟁적이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 등을 뜻한다(Bellamy, 2007: 83). 이처럼, 공화주의자들에게 있어 혼합정은 시민들이 권력자들에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지 제국의 질서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다음으로, 네그리와 하트의 주권 개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개념은 세계시민주의를 상정하는데 이는 지역적

및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페는 네그리와 하트가 주장하는 급진적 사회주의에 대하여 일정 부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개념과 같은 세계시민주의는 현실에서 구현하기 힘든 개념으로 이해, “전 인류적 시민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시민은 항상 영토화되어야 한다.” (곽준혁, 2009c: 173)고 하여 탈영토화를 주장하는 다중 개념을 일종의 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로마 공화주의자인 페тит 역시 네그리와 하트가 추구하는 세계 시민주의와는 사뭇 다르다. 신로마 공화주의 역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제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국가 내에서의 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시에는 국가가 시민들을 억압적이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초국가적인 주권을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Pettit, 2019: 241-244). 마치 롤즈의 ‘만민법(The law of Peoples)’에서 제시한 바와 비슷하게 ‘적정수준의 사회’는 ‘고통 받는 사회’를 원조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흡사하다(Ralws, 2017: 98-101).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이해할 때, 세계 시민주의는 오히려 ‘대표성을 띠는 국가’가 민주주의적 제도가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 전지구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Pettit, 2019: 259). 즉, 시민을 억압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페тит에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권력자들에게 종속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모두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네그리와 하트의 탈중심적이고 탈영토화 된 다중 민주주의는 페тит과 롤즈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추구하는 저항의 목적이 다르다. 네그리와 하트는 폭력적 저항을 하는데 있어 공화주의적 저항권으로 이해하

였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자신들의 폭력적 저항을 미국 헌법의 두 번째 수정조항인 “규율이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소지할 민중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하여 공화주의적 저항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이들은 무장한 시민들이 권위자의 폭력에 맞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공화주의에서는 국가는 필수적인 것이며, 시민의 자유와 국가의 간섭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 자유’를 강조하는데, 비지배 자유란 주인과 노예의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지배적 관계를 지양하는 것을 뜻한다. 시민들이 통치자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공공의 것(res publica)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곽준혁, 2008: 137).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에 의하면, 시민들은 권력자들에게 정당한 간섭은 받을 수 있지만 지배 자체를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로마 공화주의는 지배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 저항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공화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저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네그리와 하트는 현대 사회를 제국으로 간주, 이는 자본주의에 종속된 노동, 정의로운 전쟁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이를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국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중 민주주의에 입각한 저항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 민주주의는 현재 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현존하고 있기에 이상적이며 기존 사회를 모두 부정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사상이기에 획기적이면서도 동시에 무모한 시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네그리와 하트의 논의를 좀 더 완화된 형태인 무폐의 경합 다원주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할 것이다.

2) 경합 다원주의: 무페

앞 절에서 다룬 네그리와 하트의 기획은 사회주의에 입각한 의사결정론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급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급진적 해결책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논의들이 뒤따르고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으로서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무페와 라클라우는 네그리와 하트와 비슷하게 “헤게모니 개념의 이면에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기본 범주들을 보완하는 정치적 관계의 유형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숨어 있다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Laclau and Mouffe, 2013: 30)고 하여 기존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요소에만 천착하여 정치적 영역을 간과하고 있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네그리와 하트가 마르크스의 기본 논조인 폭력적 혁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무페는 사회주의 전략을 헤게모니에 입각한 개념으로 수정하는데, 이를 통하여 현대 사회에 걸 맞는 급진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합법성의 원리들을 구성하는 윤리-정치 원리들에 따라 제도적 질서를 상정한다. 그러나 이 사회는 이 원리들이 고유한 헤게모니 구성체에 접합되고 제도화되는 수많은 방식을 고려한다. (중략) 좌파 포퓰리즘 전략은 헌정적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 새로운 헤게모니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지, 다원적 자유민주주의와의 급진적 단절,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민주주의 가치에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부정해 버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시 접합시킬 새로운 헤게모니 구성체를 이끌 ‘대중’이라는 집합의지는 구성하는 것이다 (Mouffe, 2019: 75).

그녀가 추구하는 기획은 현재의 민주주의의 처방을 사회주의로

대체하려는 전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현재의 민주주의가 과거 직접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었던 시민들의 참여의 덕목이 훼손되고 있기에 이를 복원하려는 방법적 기획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네그리와 하트가 ‘도주(desertion)’와 ‘탈출(extra-parliamentary)’의 전략이라면 그녀는 ‘참여(engagement)’의 전략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는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에 입각한 민주주의와는 구분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크게 기존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결집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그녀는 결집 민주주의가 도구적 합리성에 매몰되어 있어 정치에서의 합리적 결정이 일종의 좋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변질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결집 민주주의 모델을 비판하는데, 이 모델은 민주주의 과정을 단지 채택된 정책을 실행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에 기재된 이해와 선호의 표현으로 환원해 버리기 때문이다.” (Laclau and Mouffe, 2013: 22) 고 하여 결집 민주주의의 도구적 합리성을 비판하고 있다.

둘째,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무페는 특히, 롤즈의 중첩적 합의에 대하여 비판한다. 롤즈의 중첩적 합의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면, 롤즈는 시민들이 공적 토론의 장에서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사용하여 논의를 거듭한다면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²²⁾

22) 공적 이성이란 이란 평등한 시민권의 지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성을 뜻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치적인 정의 원칙들이 구성절차의 산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이 절차에서 시민들의 대표이고 합당한 조건들에 예속되는 합리적인 대표자들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원칙들을 선택한다. ② 구성 절차는 본질적으로 실천이성에 기초해 있지, 이론이성에 기초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③ 정치적 구성주의가 그것의 구성에 형태와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복잡한 인간관과 사회관을 사용한다. ④ 정치적 구성주의는 합당성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 개념을 다양한 주제들, 관점들과 원리들, 판단들과 근거들, 인간들과 제도들에 적용한다(Ralws, 2009: 116-119).

또한, 롤즈는 “인생에서 가치있는 것 바람직한 형태의 우정이나 가족 관계 혹은 다양한 결사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입장을 담고 있는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관념들이 있다.” (Rawls, 1993: 17)고 정의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합당하지만 서로 상충하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로 심각하게 분열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에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러나 무페는 롤즈의 논의를 이상적 차원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녀는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게 되는 합의이며, 그것을 불안정화 하는 유일한 가능성은 외부로부터의 합당하지 않은 공격뿐이다.” (Mouffe, 2008: 52) 고 하여 중첩적 합의는 사실상 시민들의 상호 승인이 배제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Mouffe, 2008: 51). 결국, 그녀는 롤즈도 관용론과 비슷하게 ‘너는 너, 나는 나’ 와 같은 냉소주의로 흐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적대감(antagonism)’이라는 불일치의 차원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곽준혁, 2009c: 157).

이에 따라, 무페는 중립성에 대한 원칙을 배제하고 더 깊은 내용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Mouffe, 2008: 44). 그리고 무페는 푸코(Michael Foucault)의 담론 개념으로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를 비판한다. 푸코에 따르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시, 언술, 공통된 양식, 개념들의 항구성 등과 같은 하버마스가 제시한 담론 윤리의 전제조건을 부정한다(Foucault, 2000: 58-69).

다시 말하면, 하버마스의 담론은 나와 타인 간의 같은 의도와 맥락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생활세계를 공유하는 반면에, 푸코에게 있어 담론은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된 공유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무페는 롤즈와 하버마스식의 합의를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를 “합리주의적-보편주의자들” 라고 명명하며 이를 거부한다

(Mouffe, 2008: 100).

무페에 따르면, 하이데거가 ‘존재(Sein)’와 ‘존재하는 것(Seindes)’을 구분한 것처럼 정치도 ‘정치(Politik)’와 ‘정치적인 것(das Politische)’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는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종의 제도라면 ‘정치적인 것’은 모든 인간 사회에 본래부터 존재하며 제거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것은 언제, 어디서나 구현되는 갈등과 적대의 측면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치에 있어서 본질적 사고보다는 정치적인 것의 반본질적 성격에 입각하여 항상 갈등과 적대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Mouffe, 2007: 11; 곽준혁, 2009c: 134).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하여, 무페의 민주주의는 합의와 투명성으로 이해하는 것에 반대하고 갈등적 합의를 통하여 더욱 성숙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일종의 헤게모니²³⁾의 투쟁으로 상정하는 것이다(Mouffe, 2008: 160–162). 그람시의 헤게모니 전략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권력 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국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다(Mouffe, 2018: 78, 86).

무페는 나와 타인은 본질적으로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개념에서 상황에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은유적인 것에 불과하다. 무페는 이러한 은유성은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 논리를 차용하여 설명한다. “언어놀이란 낱말은

23)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사상을 의미한다. 그람시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주아 계급은 헤게모니 지배를 통해서 노동 계급의 계급의식의 형성을 저지하고, 심화되는 위기 속에서도 지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헤게모니 지배가 계속되는 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본다. 서구의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전략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함을 국가에 대한 직접적 공격인 레닌적 의미의 기동전보다는 시민사회에서의 진지전이라는 장기적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무페도 그람시의 전략에 동의하며, 마르크스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 투쟁의 방법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곽준혁, 2009c: 158–159).

여기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부, 또는 삶의 형식의 일부임을 부각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Wittgenstein, 2006: 23)고 하여 ‘언어놀이’를 명명하였으며 상황이 달라지면 언어의 쓰임 역시 달라진다는 의미로 설명한다.

그리고 합의 개념에 대해서 “의견에서의 합의가 아니라 삶의 형태에서 합의다.” (Wittgenstein, 2006: 241)고 하여 합의를 삶의 형태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처럼,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일치에 대한 규범적 가치는 기표에 불과한 은유적인 것이다. 따라서 합의는 헤게모니와 같은 투쟁의 결과이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민주주의의 조건이 구성된다고 이해한다(Laclau and Mouffe, 2013: 23).

민주주의에 있어서 갈등과 대립은 불완전함의 표현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숨 쉬고 이 안에 다원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Mouffe, 2008: 60)

민주주의는 단순히 중립적 절차들로 제한하거나 시민들을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시키거나 국가를 중립적으로 보는 관점을 지양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Mouffe, 2007: 177). 무폐에 의하면, “경합 다원주의는 정치적 기획이 아니라 다원주의적인 자유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방식입니다(곽준혁, 2009c: 155).”고 주장, 그녀는 민주주의가 고정된 형태가 아닌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

정리하면, 민주주의는 의무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타자의 인정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윤리적 접근으로 이해한다. 즉, 그녀는 갈등의 관점을 ‘적대(antagonism)’와 ‘경합(agonism)’을 구분하며 경합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Mouffe, 2019: 137). 경합적 민주주의가 달성될 때야말로 개인들은 다양한 삶의 공통된 형태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일종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Mouffe,

2008: 111).

그러나 그녀의 경합 다원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화주의와는 구분된다. 첫째, 갈등에 있어서의 지향점이 다르다. 경합 다원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에서의 갈등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둘은 갈등 개념에 대해서는 공통된 관점을 취하지만 추구하는 목표와 방법에서는 다르다. 경합 다원주의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시민들은 이에 즉각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분명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사고와 저의 경합 다원주의와는 유사성이 있다. (중략) 전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시민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자유주의 전통의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갈등과 갈등의 불가피성이 갖는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여긴다. 필립 페티트와 같은 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키아벨리 해석을 좋아하지 않는다(곽준혁, 2009c: 161).

그녀는 민주주의에 있어 법의 지배와 같은 규정된 가치를 비판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와 동일한 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타인과의 합의에 있어서 화해할 수 없는 공약불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Mouffe, 2006: 194-195). 나와 타인 간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환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잔존한다. 즉, 이성적인 차원에서의 합의는 불가능하며 폭력 및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민주주의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상대주의적 시각은 합의 개념을 오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적인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모든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화주의는 개인의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법의 지배’에 기반 한 공정한 절

차에 의하여 정당한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 공화주의에 입각한 국가는 법의 지배에 따라 움직이기에 자의적 간섭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적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갈등이란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현대 정치에서의 여당과 야당과 같이, 국가에서 상정한 법의 지배를 받아들이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갈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로마 공화주의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방법과 수단의 제도적 마련을 중시 여기게 되는 것이다(Pettit, 1997a: 296).

그러므로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의제기능력은 선출된 대표자들로부터 임의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의제기능력을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가 된 시민은 정치인이 하는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행하는 정책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페가 제시한 갈등적 합의와는 구분된다.

둘째, 무페와 페티트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무페의 경합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부정형성으로 파악, 민주주의에서는 합리적 이성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역설한다(Mouffe, 2008: 59, 200). 이처럼, 그녀의 경합 다원주의는 법의 지배에 기초하여 있지 않은 부정형의 상태를 강조하기에 경합보다는 투쟁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집단적 이기주의가 발현되기 쉽다.

반면에,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선험적인 전제 없이 개인들 간 상호적 관계로 정치적 인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공화국은 예외 없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헌정주의를 통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곽준혁, 2009b: 122)고 주장하고 있다. 즉, 법의 지배에 따라 움직이기에 자의적

간섭을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성격을 공화주의 및 공동체주의가 설정하는 시민들이 공공의 목표를 위하여 나아가는 일종의 공공선(res publica)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무페는 개개인의 권리를 쟁취하는데 있어 방법으로서의 시민적 결사(societas)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무페에게 있어 민주주의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연대성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그람시의 헤게모니를 토대로 하여 다원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무페는 마키아벨리의 갈등론을 토대로 하여 경합 다원주의를 추구하였다. 경합 다원주의는 사회주의적 기획을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녀의 기획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보편적 합의의 기준을 버리고 상대주의적인 합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녀의 기획은 합의 자체를 규정하지 않는 부정형성을 기획하기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합의 개념은 이러한 무페의 부정형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반성적 합의를 제시한다. 리스트는 우선순위규칙을 통하여 일종의 반성적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기획을 보여주며, 페팅은 그룹 행위자 이론을 통하여 좀 더 진전된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3. 합의 개념의 전환: 반성적 합의

1) 우선순위규칙: 리스트

앞 절에서 사회주의에 입각한 급진 민주주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민주주의는 현재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기획은 너무 급진적이며 전세계의 시민들이 ‘다중’의 기획으로 뭉칠 수 있다는 이상주의적인 시각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다중 민주주의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무폐의 경합 다원주의가 제시되었다.

그녀의 경합 다원주의는 현대 사회는 합의할 수 없는 다원적 가치들이 존재하였다. 롤즈는 이러한 다원적 가치들을 모두 존중해주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에 무폐는 무정형성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합 및 투쟁을 거쳐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무폐의 경합 다원주의는 마키아벨리의 갈등의 긍정성과 비슷한 논의로 이해할 수 있으나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다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 의사결정에는 대표자의 문제, 애로우의 역설, 공약불가능성, 담론적 딜레마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제도만 완비된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는다.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익, 동조현상, 현상유지편향 등이 나타나 일관성 있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합의 능력이 저하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기의 내용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에서 협상적 합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논의에서 제외되었지만 공정한 절차를 강조했다는 점과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합의 조건으로 ‘절차적 정의(procedural definition)’ 개념이 상정된다. 절차적 정의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해야 할 것이다.

- ① 경쟁적 다당제
- ② 보편적 성인선거권
- ③ 비밀 투표 및 합리적인 투표권 보호, 투표조작의 부재
- ④ 보편적 정치캠페인을 통해 주요 정당이 유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Tilly, 2010: 13-14).

절차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뜻한다. 즉, 합의

란 나와 타인 간의 공정한 기준 내에서 상호 간 약속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합의론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절차적으로는 공정하지만 내용으로는 불공정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발언자에게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여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행위자가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말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 방법과 같이 ‘전략적 조작행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박효중, 2005: 728).

이러한 상황에서 달(Robert Dahl)의 ‘과정 지향적 접근(process-oriented approach)’의 방법이 하나의 해소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달은 민주주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① 시민들의 공평한 참여 기회(effective participation):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 ② 투표의 평등(voting equality): 각 시민들의 선택을 표현할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선택은 다른 시민이 표현한 선택과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③ 합리적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 시민들은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하여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④ 의제의 통제(control of agenda): 합리적 선택의 과정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과 관련된 내용만 한정하여 나타난다.
- ⑤ 성인들의 수용(inclusion of adults): 모든 시민들이 이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Dahl, 1999: 56).

틸리(Charles Tilly)에 따르면, 달이 제시한 과정 지향적 접근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의의가 깊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데 있어서는 무력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각각의 기준끼리 충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사이의 충돌 문제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달의 과정 지향적 접근 방법은 민주주의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Tilly, 2010: 18-19).

이와 같이,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시민들의 합의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합의는 문제 해결과 예측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관점은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합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해결책으로 개인들이 서로의 행동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모(Moe)와 래리(Larry)는 약속한 시각까지 피아노를 위층으로 옮기기로 했으며 대략 30분이 걸린다. 그런데 모와 래리는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와 래리에게 도덕적 의무를 상기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은 양심에 의한 행위에 불과한 강제력이 없는 의무이다. 이에 따라, 모와 래리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해결 방법으로, 제 3자와의 약속을 들 수 있다. 제 3자인 수잔(Susan)이 모와 래리와 약속한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모와 래리는 수잔과의 약속으로 인하여 도덕적 의무와 더불어 도덕적 비난이 추가된다. 만약, 모와 래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수잔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Killoren and Williams, 2013: 296). 따라서 모와 래리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약속 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리인의 존재가 가장 탁월한 방법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제 3자에 의한 대리인으로 약속을 담보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주주의 내에서 의사결정은 이러한 개별적인 판단을 한데 묶어야 하는 난관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리스

트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표 6> 정부 재정과 관련한 담론적 딜레마(List, 2008: 9)

	개인 1	개인 2	개인 3
P(정부의 재정 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오
If P then Q (정부 예산이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교육비 지출을 늘려야 하고 있다.)	그렇다	아니오	그렇다
Q(교육비 지출을 늘려야 하고 있다.)	그렇다	아니오	아니오

위의 표를 보면, 개인 1의 판단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교육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관된 논리를 지닌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 2 역시 정부 예산을 교육비 지출에 사용하고 싶지 않기에 “P라면 Q이다.”와 Q는 거부하는 주장 역시 타당한 논의이다. 문제는 개인 3인데, 정부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교육비 지출에 찬성하고 있다. 즉, 개인 3과 같이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먼 나머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신념을 저버리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따라서 리스트는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일관성 없는 행위자에 대한 경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리스트는 통근 상황에 대한 담론적 딜레마 상황을 통해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표 7> 통근 상황에 대한 담론적 딜레마(List, 2002: 6)

	개인 1	개인 2	개인 3
P 휘발유에 대한 특별 소비세 도입	예	예	아니오

Q 대중교통 통근자에게 보조금 지급 폐지	예	아니요	예
R 통근자에게 특별한 세금 혜택을 줌	예	아니요	아니요
$R \leftrightarrow (P \ \& \ Q)$	예	예	예

위의 표에서는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사용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벌금과 인센티브의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우선, 벌금 형태로 P는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휘발유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폐지하는 Q가 있다. 반면에, 통근자에게 특별한 세금혜택을 주는 방법인 R이 있다고 가정하자. 위의 표의 내용대로라면, P와 Q가 수락되면, $R \leftrightarrow (P \ \& \ Q)$ 의 명제도 역시 수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통근자에게 특별한 세금 혜택을 주는 R의 명제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정책인 P와 Q의 명제는 대립적인 성질이다. 따라서 P와 Q를 찬성하면서 R을 동시에 찬성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개인들은 이러한 일관성을 지닌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결집 민주주의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인간은 동조현상과 현상유지편향과 같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관적이지 않은 시민들을 어떻게 규제 및 제재할 수 있을까. 리스트는 합의에 필요한 조건을 네 가지로 도출한다.

- ①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담보되어야 한다.
- ② 공정한 절차는 모든 개인의 판단에 있어 동등한 비중이어야 한다.
- ③ 집단이 결정한 판단은 한정된 주제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 ④ 집단이 결정한 판단은 모순이 없는 일관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List, 2008: 18).

이처럼, 리스트는 합의 도출 과정에서 행위자의 일관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리스트는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뿐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하여 ‘메타 합의(meta-agreement)’로 해결하고자 한다. 메타 합의란 개인의 선호와 판단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음의 사례를 들어, 리스트는 메타 합의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세 가지 정책에 관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표 8> 다양한 입장의 딜레마(List, 2008: 12)

	개인1	개인2	개인3	개인4	개인5	개인6
P 선호	비선호	비선호	비선호	비선호	비선호	선호
만약 P라면 Q를 선택한다	선호	선호	선호	선호	선호	비선호
Q 선호	선호	선호	선호	비선호	비선호	비선호

모든 개인은 P에 대한 선호와 “만약 P라면, Q를 선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반대의 입장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Q 선호는 선호와 비선호가 3대 3의 비율로 나타나는 딜레마에 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 1, 2, 3, 4, 5는 P를 선호하지 않는 같은 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Q 선호에 있어서는 극단으로 갈리게 된다.

리스트는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원인으로 포착되지 않은 조건이 존재하며 이는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관, 문화적 속성, 대중들의 심리 상태와 같은 제 3의 원인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도 논란의 여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 결국, 딜레마를 확률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동전 앞, 뒷면을 맞추기 것처럼 우연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확률적 방법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리스트는 상기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순위규칙(sequential priority rule)’을 정립하게 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심의의 방법으로 쟁점이 되는 현안이 무엇인지 식별 가능하다.
- ② 심의의 방법은 논의된 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가능하다.
- ③ 각 개인은 가장 선호하는 선택을 계산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④ 단체 심의는 개인이 가장 선호하는 선택 대신에 중간 값을 결정한다 (List and Pettit, 2004).

상기에서 제시된 우선순위규칙은 기존 심의의 방법은 차용하되 행위자들이 선택하는 판단에 대한 결정 대신에 중간 값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스트의 해결책은 모든 개인들에게 합리적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트의 방법론은 일종의 중용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롤즈의 ‘반성적 평형’에서 제시된 개념과 비슷하다. 이처럼, 페티트는 리스트가 주장하는 우선순위규칙의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수의 교집합으로 만들어 낸 결론은 모든 행위자의 의지를 담지 못한 결론이며, 애로우의 역설과 같은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선순위규칙에 의하여 선택되는 결정은 기존의 관습을 더 우위에 두고 있기에 새로운 사고 및 혁신적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도출된다(Pettit, 2001: 276). 이와 같이, 우선순위 이론은 개인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거나 동조를 요구하는 식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2) 그룹 행위자: 페тит과 리스트

페тит은 리스트가 제시한 우선순위규칙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의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에 따라, 페тит은 리스트와 함께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 개념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페тит에 의하면, 담론적 딜레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론과 판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하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의 사례를 통하여 일관된 결정을 보여주고 있다(Pettit, 2001b: 111).

문제는 개인은 이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에 공공선을 선택하는데 있어 님비현상과 같은 문제점에 항상 노출된다는 점이다. 즉,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개인은 공공선에는 이익이 되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안은 선택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 공정한 재판관에 가까운 제3자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정한다 해도 여전히 문제 해결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메타 합의에 의하여 적절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완벽한 해결이라 보기 힘들다. 페тит은 이러한 담론적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룹 행위자’ 이론으로 새롭게 설명한다.

페тит과 리스트는 인간 본성에 대해 알아야 개인의 공공선 추구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각 개인은 이익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공공선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 행위자의 모델은 벌과 개미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페тит과 리스트는 플라톤의 철인정치를 꼽고 있다. 통치자인 철인은 국가의 본질, 국가의

이상적 모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한 존재이다(Plato, 2005: 412b-414b).

플라톤은 최선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각각의 구성원들은 계급, 지위를 막론하고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질서와 안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국가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에게 정해진 일을 해야 하고(ta hautou prattien)’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톤의 철인 정치는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의도적인 개입 없이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페тит과 리스트는 각 개인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여 행동하는 방법인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홉스는 갈릴레이의 ‘분해 종합 방법’을 차용한다. 분해 방법은 연구 대상을 필요한 만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며, 종합 방법은 인식 대상을 가장 단순한 것에서 단계적으로 가장 복잡한 것으로 나아감으로써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명이란 사지의 운동에 지나지 않으며 그 운동은 내부의 중요한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자동 기계는 인공적인 심장을 갖고 있다고 말해선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곧 심장은 태엽에 지나지 않고 신경은 수많은 선에 불과하고 관절은 수많은 톱니바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이 창조자가 의도했던 것처럼 전신에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게 아닐까?(Hobbes, 2008: 21)

이러한 홉스의 분해 종합 방법은 국가 구성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리바이어던은 개인의 의지가 한데 모여 하나의 인격으로 격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홉스는 이를 ‘공적 대행자(public minister)’라 부르며 공공선 증진에 대해서만 대리자로 자격을 지닌다. 인위적 인격체인 대리인은 “어떤 말과 행위의 대표자를 의

미”(Hobbes, 2008: 217-218)로 이해, 개개인의 의지를 모은 총합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권리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임하였기에 대리인의 계약은 곧 개인의 계약과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홉스는 개인의 의지와 대리인의 의지가 엇갈렸을 때를 대비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무효로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맞보증(counter-assurance)’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Hobbes, 2008: 219). 공적 대행자인 리바이어던은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며 개인의 의지와 모순되지 않는 한 복종할 의무가 있다(Hobbes, 2008: 317-318). 결국,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인격에 의해서 대표될 때, 만약 그것이 그 군중 개개인 모든 동의에 의해 그렇게 된 경우, 하나의 인격이 된다.”(Hobbes, 2008: 221)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페тит과 리스트에 의하면, 홉스의 논의는 그룹에 대한 논의에 불충분한 설명이다. 비록 개인들이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의 동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담론적 딜레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전히 개인들의 의견을 합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즉,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동체 행위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행위자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환경에서 행위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동기부여가 된 상태이다. 셋째, 동기 부여된 판단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다(List and Pettit, 2012: 20). 페тит과 리스트의 공동체 행위자 특징에서 중요한 측면은 세 번째 특징이다. 이들은 행위자들이 의도적인 목표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페тит과 리스트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행위자 개념을 로봇과 다르게 유기체로 인식하고 있다(List and Pettit, 2012: 27).

로봇은 기본적으로 목표한 바의 목적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프로그래밍이 된 행위를 진행한다. 이러한 해결을 위한 수행은 정확하지만 이를 응용하여 다른 목표까지 나아가진 못한다. 즉, 로봇은 반응적으로 행동할 뿐이지 숙고하여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간은 로봇과 다르게 필연적인 행동이 예측되지 않는 우발적 상황을 초래하는 존재이다. 즉, 로봇은 투입과 산출이라는 정해진 방식대로 움직이지만, 유기체는 환경 변화에 맞게 상호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페тит과 리스트는 그룹의 공동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을 브라트만(Bratman)의 이론을 차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에 이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의 목표(Shared goal):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함께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 ② 개인의 헌신(Individual contribution):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상호 의존(Interdependence):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타인의 믿음과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한다.
- ④ 공통된 의식(Common awareness):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상기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List and Pettit, 2012: 33).

페тит과 리스트는 그룹 행위자 이론과 적합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해변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진다면, 사람들은 구명 튜브나 물에 뜨는 물건들을 그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를 부리거나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위해 응원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의 개인들이 공통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행동을 각자가 알아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List and Pettit, 2012: 34).

그러나 그룹 행위자의 문제는 흠스에서 지적된 바와 비슷하게, 공통의 논의가 행위자들의 비합리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선동 당하기

쉽다. 즉, 소수의 구성원들이 대중을 현혹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독재자(dictatorship)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페тит과 리스트는 ‘이진법적 태도(binary attitude)’를 제시한다. 이진법적 태도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공통의 구성원들에게 네, 아니요를 물어봄으로써 각각의 주제를 분절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List and Pettit, 2012: 38).

상기의 논의를 근거하여, 페тит과 리스트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째, 결집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일관성, 보편적 영역, 집단적 합리성, 익명성 등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List and Pettit, 2012: 49).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민주주의 내에서의 의사결정은 개별 행위자의 태도와 집단의 태도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합리적 선택 이론의 특징은 공동체가 공공적 선택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선호도를 집계한 결과만으로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역부족인 것이다. 페тит과 리스트는 온난화 사례를 들어 좀 더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주장 p: 화석 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연간 6억 5천만톤 이상이다.

주장 q: 향후 30년 동안 지구 온도가 적어도 1.5도 상승할 것이다.

<표 9> 화석연료와 이산화탄소량의 담론적 딜레마(List and Pettit, 2012: 50-51).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가?	만약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한다면, 온도는 증가하는가?	온도는 증가하였는가?
개인1	참	참	참
개인2	참	거짓	거짓
개인3	거짓	참	거짓
다수의 선택	참	참	거짓

p와 q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화석 연료 사용이 이산화탄소량을 증가시켜 지구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과학적 사실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다수의 선택이 p와 q가 참임을 주장하였지만 “온도는 증가하였는가?”의 질문에서는 거짓이 나오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처럼, 다수결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일련의 제안들은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페тит과 리스트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내에서의 의사결정론은 완벽한 일치가 되는 합의를 상정하지 않는다.

둘째, 페тит과 리스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불일치는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 ① 행위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 ② 행위자는 검토된 각각의 의제에 대하여 다수결 투표한다.
- ③ 투표의 결과가 기존의 태도와 일치할 경우 집단적 태도로 간주한다.
- ④ 만약, 기존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한다(List and Pettit, 2012: 62).

이러한 불일치는 절차적 정의와 사회정의라는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시민들 역시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본다. 시민들이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의가 제기된 사항을 다시 논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Pettit, 2018: 256). 이러한 검증 절차를 통하여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이 동조현상에 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구성될 것이다.

페тит과 리스트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룹 행위자 이론을 ‘비공식 여론조사(The straw-vote procedure)’로 체계화하고 있다. 비공식 여론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체와 관련된 논의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수결로 투표하고 이런 기록들을 누적해 놓는다.
- ②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누적된 판단과 부합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 ③ 투표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 ④ 문제가 있는 판단을 파악하고 불일치가 나타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 ⑤ 수정이 필요한 선택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다.
- ⑥ 이러한 방식으로 확정된 제안을 채택하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다시 투표할 수 있다.
- ⑦ 공동체는 이전 단계에서 판단이 반복될 경우 새로운 판단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판단으로 승인한다.
- ⑧ 해당 투표에서 이전 판단이 반복되지 않으면 3단계로 돌아가서 재논의를 시도한다.
- ⑨ 이 과정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수 있다.
- ⑩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기존 선택을 취소한다(Pettit, 2007a: 513).

페тит은 동조현상과 현상유지편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특히,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불일치가 일어난다면 이에 대해서 재투표를 행하는 식의 제도적 반론권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가치에서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경우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한 뒤 합리적 선택을 도출

했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이상주의에 불과한 논의이다. 그러므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의는 없으며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로 새롭게 조명한다(박효중, 2001: 227-230).

협상 및 집약적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합의하지만 그룹 행위자 이론은 타인의 신념 및 믿음에 고려한 반성적 합리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Pettit, 2012: 369). 또한, 페тит과 리스트의 그룹 행위자에 입각한 합의는 갈등을 최대한 부추기고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페тит과 리스트의 그룹 행위자 이론은 개인이 공동체의 전체주의적 사고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그룹 행위자 논의에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룹 행위자 이론은 불일치를 긍정하는 태도로 행위자가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예견하면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비대칭’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한 공동체 자체가 크나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 개개인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List and Pettit, 2012: 183). 이러한 지배적 상황은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 즉, 기업의 독과점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지배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막대한 권력이나 독과점에 의한 지배에 대하여 행위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페тит은 이에 대한 논의를 신로마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신로마 공화주의는 군주와 같이 지배에 대하여 극히 경계하는 이론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하여, 그룹 행위자 이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

던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로마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본 장에서는 기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의 대안인 소극적 동의에 입각한 후견주의와 순리적 동의, 급진 민주주의에 입각한 다중 민주주의와 경합 다원주의, 반성적 합의에 입각한 우선순위규칙과 그룹 행위자 이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페팅과 리스트의 그룹 행위자 이론을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에 가장 적절한 이론으로 이해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신로마 공화주의가 나타난 배경, 기본적 가치로 비지배 자유, 신로마 공화주의가 공동체주의, 시민 공화주의와의 길항 관계를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IV. 신로마 공화주의의 이념

II와 I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자는 민주주의의 의사결정론에 관심을 가졌으며, 페팅과 리스트의 그룹 행위자 이론을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으로 상정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으로서 그룹 행위자 이론의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신로마 공화주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할 것이다. 1절에서는 공화주의의 등장 배경과 역사적 맥락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바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2절에서는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의 기본적 가치인 비지배 자유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3절에서는 반다수결주의 조건 근거로서 저항권과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예로부터 공화주의자들은 권력분산의 방법으로 혼합정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공화주의는 이러한 혼합정을 헌정주의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4절에서는 신로마 공화주의의 범주를 규명하고자 한다. 공동체주의와 시민 공화주의와의 길항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신로마 공화주의만의 특징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1. 민주주의 보완으로서 공화주의

1) 공화주의의 부활

앞선 장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으로서 페팅과 리스트의 그룹 행위자 이론을 선보였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그룹 행위자 이론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신로마 공화주의의 역사 및 이론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우선, 이번 절에서는 공화주의의 역사적 맥

락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현대 사회에 적합한 정체성을 두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에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화주의가 새롭게 조명되기에 이른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화주의는 자유 개념으로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다.

스키너(Quentin Skinner)는 공화주의를 역사적 의미에서 발굴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진리(truth)’가 아닌 ‘합리적 수용 가능성(rational acceptability)’에 입각한 맥락주의(contextualism)를 주장하고 있다(유종선, 1996: 507-508).²⁴⁾ 스키너는 이러한 맥락주의 하에서 서구의 정치사상사에서 공화주의 개념을 발견, 공화주의의 특징을 자유와 저항권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있다.

우선, 스키너는 로마 시대의 키케로(Cicero), 리비우스(Livy), 살루스티우스(Sallust)의 사상가들로부터 공화주의적 자유의 원형을 발굴하였다. 키케로는 “공화정은 인민의 소유물이며 공화국은 단순히 인민의 모임이 아니라, 법에 동의하고 공동의 이익으로 결속한 다수 모임”(Cicero, 2007: 1.39)으로 공화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키케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시민들끼리의 정치적 합의를 위한 방법으로 간주한다(곽준혁, 2007: 144-147).

다음으로, 리비우스는 『로마사』에서 로마인들이 타르퀴니우스(Tarquins)를 축출하는 과정을 공화주의의 원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리비우스에게 자유 국가란 모든 시민이 법의 지배를 받아 운영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리비우스는 국가의 정체성을 일종의 자치

24) 스키너의 맥락주의란 오스틴(J. L. Austin)의 화행이론과 콜링우드의 재연적 역사관을 토대로 하여 정치 이론사를 뜻한다. 그는 과거의 사상가에 대한 해석을 현대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스키너는 현재의 사상가들이 과거의 사상가들을 재단하여 이를 해석하는 방식보다는 과거의 저자들의 주장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현재의 사상가의 의견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Skinner, 2007: 152-156).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Gelderen and Skinner, 2002: 12-13). 마지막으로, 살루티우스는 공화주의 내에서 덕성을 강조한 역사학자이다. 로마 초기 공화정에서의 풍요로움은 결국 개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우려하고 있다(Skinner, 1990: 128-129).

한편, 로마의 공화주의는 중세 시대에 단절되었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그러나 스킨너는 중세 시대에도 로마의 공화주의가 수도원에서 수사학(Rethoric)의 형태로 근근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한다(Skinner, 2004: 144-148). 이 시기에는 중세 시대와는 다른 ‘아욱토레스(auctores)’ 방법이 출현하게 된다.²⁵⁾

이러한 수사학적 전통은 이탈리아, 네덜란드로 넘어가 공화주의는 새롭게 해석되고 발견되며, 공화주의를 집대성한 학자는 마키아벨리이다. 마키아벨리의 가장 핵심 개념은 자유인데, 이를 위협하는 개념으로 운(fortuna)로 이해하였다. 마키아벨리는 인문주의자이었기에 운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였다(Skinner, 2004: 253).

13세기 브락턴(Henry de Bracton)이 노예를 “타인의 지배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도 인간의 지위에 있어 “노예제는 국가의 법에 의한 제도로 타인의 지배하에 종속되는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것이다.”고 설명하였다(Skinner, 2002: 248 재인용). 브락턴의 주장은 잉글랜드 내전 당시의 의회파의 이론적 근거로 자주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포콕(J.G.A. Pocock)은 자유주의 속에 매몰되었던 공화주의를 재발견한다. 포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공화주의의 기본으로 삼는다. 잉글랜드 내전의 의회파에 참여한 제임스 해링턴은 공화주의가 토지분배와 상업의 원리로 발전하고, 미국의 매디슨은 헌법의 원리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유종선, 1996: 13).

25) 아욱토레스 방법이란 기존의 내용을 전달하는 주석(exegesis)의 방법에서 벗어나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론을 뜻한다(Skinner, 2004: 144-148).

그리고 영국 내전에서도 공화주의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영국 내전이란 1642년에서 1649년 사이에 벌어졌으며, 절대왕권과 의회의 대립이 나타난 사건을 뜻한다. 엘리자베스 1세로 마지막으로 튜터 왕조가 끝나고 스튜어트 가문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스코틀랜드 출신의 왕이었기에 기존 세력들과의 권력투쟁의 국면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찰스 1세는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매기고 헌금과 공채를 강제로 거둬들이는 횡포가 심해지자 의회는 1628년 5월, 왕에게 11가지 항목을 요구하는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을 제출하였다.²⁶⁾

공화주의에서는 개인이 자유를 상실하면 이를 노예의 상태로 이해한다. 노예의 상태는 주인의 지배를 받는 관계이기에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여도 이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번덕스럽고, 불분명하고, 알 수 없는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Pettit, 1997: 31).

공화주의자는 의도하지 않은 간섭과 지배 개념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즉, 자유로운 행위자가 타인의 의도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상황을 ‘종속’으로 이해한다(Sellers, 1998: 21-22). 해링턴(James Harrington)은 찰스 1세를 중심으로 하는 왕당파 진영에 속한 홉스의 소극적 자유론을 비판하였다. 자유에 관한 홉스와 해링턴 간의 논쟁은 자유의 반대 개념을 ‘간섭’이나, ‘지배’ 이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홉스의 자유론은 국가가 “군주정 이건 민주정이건 코먼웰스의 자유는 동일한 것이다.” (Hobbes,

26) ① 어느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 함부로 구속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민은 군법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③ 군인이 강제로 민간인의 집에 머무를 수 없다. ④ 평화시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⑤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Skinner, 2002b: 322).

2008: 287)고 주장하였다. 홉스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에 간섭받지 않는다면 자유롭다는 범위의 개념에 국한되었다. 그러므로 홉스가 추구하는 국가는 강력한 주권자 하에서 신민으로 살아도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곧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해링턴은 법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억압하는 기관이기에 국가의 권력과 기능에 대하여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영국 내전은 왕당파의 논리가 우세하여 홉스의 소극적 자유론이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은 계기가 되었다.

공화주의는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독립을 위해 프라이스(Richard Price)는 ‘자유 국가’와 ‘자유가 허용되는 국가’를 구분하며 자유가 허용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조승래, 2001: 56). 미국 독립의 결과, 연방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자유주와 공화주의에 입각하여 체계화한다.

매디슨(James madison) 역시 미국 건국에 있어 그 근간을 공화주의로 선정하는 데, 대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폭정(tyranny of representation)’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선출된 폭정이란 시민들의 의지가 국가 운영에 있어 반영되지 않을 때, 단지 선거라는 제도만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공화주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부터 미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이 함께 존속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이론적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이론으로 재조명받았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서구의 역사 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으며, 존재하더라도 다른 정

치사상과 이질적이어서 공통분모를 발견하기 힘든 이상적인 정치사상으로 간주되었다(Bobbio and Viroli, 2003: 11). 그렇기에 지금까지 공화주의는 다소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2) 공화주의의 유형과 논의

우리 사회에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종의 ‘만병통치약’ 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공화주의는 추상적인 논의에만 그쳐 구체적인 논의로 확장시키는 일은 드물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이러한 개념적 혼동이 다양한 학자에 의해서 각자만의 이론을 정립하게 있기에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 것이다.

서구에서의 공화주의에 대한 접근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정치사상사로서의 공화주의이다(Pocock, Skinner, Held, Honohan). 1960년대 이후 공화주의와 관련한 많은 학자들이 광범위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 공화주의 사상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민적 공화주의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에서 출발하여 마키아벨리, 해링턴, 루소, 매디슨에 이른다. 서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비지배 자유 개념이 수많은 사상가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공화주의적 전통을 발굴하는 연구에 집중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헌법학자들의 연구이다(Michelman, Sellas, Sunstein). 공화주의는 ‘법의 지배’를 중시 여긴다. 법의 지배란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시민에게 지배할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의미한다. 공화주의적 헌법은 국가가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Sellers, 1998: 118-123). 법률학자들은 시민적 공화주의의 중요성을 미국의 헌법적 사고 내에서 공화주의 사상을 재구성을 추구하였다. 미국에서 공화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 중에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중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공화주의적 헌정주의가 제시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법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보는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 법은 자유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주의에서 법을 사회적 삶과 양립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필요악으로 본다면,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이 스스로 법에 참여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적극적인 시민을 뜻한다. 이와 같이, 공화주의자들은 권리 개념에 있어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고, 이해 집단을 규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규범적 정치 이론가들의 연구이다(Oldfield, Sandel, Pettit, Maynor, Viloli). 비롤리(Maurizio Viloli)는 공화주의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공공선을 추구하는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로 설명한다.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지배 자유, 평등, 법의 지배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Viloli, 2006: 12). 신로마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학자들로 이해할 수 있다. 스키너 자신의 사상을 ‘신로마(neo-Roman) 공화주의’로 명칭하며 시민 공화주의와 구분되는 로마적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사파테로(Jose Luis Rodriguez Zapatero) 총리는 임기 중(2004-2011년)에 신로마 공화주의 이념을 채택하여 실제 정치에 반영하였다(Marti and Pettit, 2010). 신로마 공화주의는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착취를 막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어 최저 임금을 인상하거나 비정규직 확산을 저지하였다. 이와 같이 신로마 공화주의는 자본주의 기업에 맞서 노동 투쟁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Marti and Pettit, 2010; Pettit, 2008). 이처럼, 지역공동체, 직장, 학교, 정당 등 다양한 사적 단체 안에서 참여와 심의가 이루어져 비지배 자유

와 자치의 이상이 실현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서구에서의 공화주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정의되고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안적 이데올로기로서 혁신적 사상으로 평가받은 이론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서구의 공화주의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논의이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도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 공화주의는 크게 세 학계에서 관심 대상이다.

우선, 공화주의를 역사적 계보로 이해하고자 하는 역사학계의 입장이 있다. 콰차페는 포콕의 『Machiavellian moment』를 번역하며, 공화주의의 원형에 대한 역사적 토대를 제공해주었다(Pocock, 2011). 박동천은 스키너의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1, 2』를 번역하여 비지배 자유와 저항권의 원형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우리 사회에 제공해주었다(Skinner, 2004; 2013). 조승래는 스키너의 『Liberty before liberalism』를 번역하며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벌린의 이분법적 자유론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나아가 그는 스피노자, 프라이스, 스펜스의 공화주의 및 현대 공화주의자인 그린, 아렌트, 샌델, 코헨의 논의를 상세히 논의하였다(조승래, 2013).

그리고 역사학계에서는 스키너와 포콕의 역사 해석 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스키너와 포콕은 기존의 이념사(history of idea)적 접근과는 다르게 역사가의 시대와 의도를 상세히 이해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맥락주의(contextualism)를 강조하였다(유종선, 1996; 2005). 특히, 독일에서는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사(Begriffsgeschichte)가 중심이 되어 연구가 되었는데 이러한 연장선상하에서 스키너의 연구방법론

을 소개하는 학자들도 다수 존재한다(박근갑 외, 2009; 황정아·김용수, 2013).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법의 근간으로서 공화주의를 강조하는 헌법학계의 입장이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인민의 자기 지배이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심의와 견제를 모두 강조하는 민주공화국을 주장하고 있다(강일신, 2015). 헌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 사상가들마다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하여 면밀히 논의해보기를 권유하고 있다(김비환, 2016). 나아가, 그는 ‘개인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 그 개념을 전환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스키너와 패팅의 자유론을 사회적 자유의 원리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비환, 2018).

또한, 헌법에 있어서 공화주의의 내용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공화주의는 한국 헌법 중 시민권, 기본권, 국민의 의무, 공공판단 등과 같은 권리와 의무 사이 등과 같은 실제 사례에 대하여 재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김동훈, 2011).

다음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혼합정을 살펴봄으로써 권력자들의 권력 독점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공화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그가 주장하고자 한 공화주의는 기득권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한다(김경희, 2007: 114). 그리고 그는 로마 공화주의의 *res publica* 개념이 존 솔즈베리와 마키아벨리에 의해서 근대 국가 개념의 토대가 되었음을 논의하였다. 근대 서구 국가개념을 분석하여 *res privata*와 *res publica*의 개념적 어원을 구분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에 도입되어야 할 개념적 가치를 *res publica*로 상정하고 있다(김경희, 2018).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공화주의를 논하는 정치 및 교육학계의 논의가 있다. 공화주의 개념을 시민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를 통합하여 공공선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신로마 공화주의만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입장은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의 내용상 차이가 없으며 단지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공화주의는 로마에서 기원한 것을 차이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공화주의적 전통은 포용력과 유용성을 지니고 있기에 시민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의 장점을 모두 포괄하는 이론으로 평가한다(유홍립, 2017).

또한, 공화주의는 대의 및 참여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공화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정원규, 2016).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공화주의는 자유와 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적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절충적 방식을 추구한 이론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화주의의 특징을 신로마 공화주의로 한정하여 논의하는 학자는 곽준혁이 대표적이다. 그는 페팅의 주요 저작인 『neo-Republicanism』과 『Just Freedom』을 번역하였다. 그리고 공화주의를 둘러싼 학자들의 논의를 다룬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를 번역하기도 하였으며, 『마키아벨리 다시 읽기』, 『지배와 비지배』 등의 신로마 공화주의와 관련된 저서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페팅, 무페, 구트만 등의 공화주의자들의 인터뷰를 묶은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라는 인터뷰 모음집을 출간하였다. 학술 논문으로는 신로마 공화주의의 중심으로 비지배 자유를 강조하는 키케로와 마키아벨리를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비지배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지배적 상호성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갈등의 긍정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주권 개념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세계시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곽준혁, 2004; 2006).

교육학계에서는 도덕과 교육의 근거로서 공화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공화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인의 공동체로 상정하고 비지배 자유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이론으로 이해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인의 공동체’의 정신을 구현해야 하는데 용서가 없는 복수의 감정만을 키웠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정규칙을 존중하는 정치적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비지배 자유에 입각한 상호적 권리의 관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효중, 2012).

다음으로, 공화주의는 소크라테스와 칼레의 시민과 같이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기에 심의 민주주의의 보완된 이론으로 평가하고 있다(조주현, 2013). 그리고 공화주의는 개인 스스로가 주인으로 살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며 도덕과 교육에서 이와 같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로 설명하고 있다(장준호, 2013). 보다 구체적으로, 공화주의는 애국심에 있어서 보다 나은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조일수, 2016).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윤리에 있어서도 공화주의는 탁월한 설명이 가능하기에 도덕교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직자 윤리에서 확고한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조진호, 2014).

마지막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선만을 강조하고 공동체주의는 공동선만을 강조하여 이분법적 논의에 그쳤다. 도덕 교과서에서 제시한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의 주제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만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 대신에 공화주의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하기에 상기의 논의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박성근, 2017).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공화주의는 다양한 학계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추구하는 방향 역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으로서 페тит과 리스트의 그룹 행위자 이론이 가장 적합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페тит은 신로마 공화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와 접목하여 견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기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으로서 그룹 행위자 이론이 언제 민주주의로 구체적으로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상기의 논의에 입각하여, 본 연구자는 신로마 공화주의의 논의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확인할 것이다.

2. 신로마 공화주의의 기본적 가치: 비지배 자유

1) 소극적 자유 비판

소극적 자유는 홉스와 벌린의 논의를 뜻하며, 홉스는 “자유는 외적인 방해가 없음을 의미하며, 방해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힘의 일부를 종종 앗아가지만, 판단과 이성의 지시에 따라 남겨진 힘의 사용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Hobbes, 2008: 1부 14장)고 하여 자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홉스는 개인은 자연상태의 무질서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리바이어던과 계약을 맺는다. 이에 따라, 자연적 자유는 훼손되었지만 사회적 자유는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홉스는 강력한 주권자의 안전의 보장 하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페팅은 이와 같은 홉스의 자유론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홉스는 시민이건 노예이건 간에 자유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며, 노예도 자유인과 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 10> 외부적 장애와 관련한 변수

외부적 간섭	X	Y
행위자 선택	1. X를 선택	2. X를 선택

	3. Y를 선택	4. Y를 선택
--	----------	----------

행위자는 X와 Y 사이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X를 선택하는 경우에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당신이 Y를 선택한다면, 행위자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자신의 주위 환경에 입각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Y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자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처럼 외부적 장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면, 벌린은 이러한 선택을 피하는 2와 3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기에 자유롭다고 이해한다(Pettit, 2012: 26-34). 벌린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의 결핍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Berlin, 1969: 12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되었는데, 행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조건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만으로 자유로운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당신이 방해와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 ② 이러한 가정에 의해 내가 당신의 선택지인 Y를 방해한다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그러나 당신이 Y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 ④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Y의 선택을 고를 수 있게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유가 획득되는 것처럼 보인다.
- 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리석은데, 당신의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순응한 것만으로는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 ⑥ 따라서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본래의 가정은 모순된 주장이다(Pettit, 2012: 55).

페티트는 X와 Y의 양자 간의 변수에서 Z의 변수를 추가하여 설명한다. 만약, Z가 간섭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페티트는 간섭의 존재를 객관과 주관성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데, Z가 제거 및 대체 되었

다면 객관적으로는 외부적 장애물로 이해하는 반면에 주관적으로는 외부적 장애물이 생긴 척 할 수 있다. 페티트는 이를 기만으로 이해한다. 선택지에 대한 조작 역시 가능하며 이러한 조작은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테니스를 칠지 고민하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A는 단순히 변심에 의하여 테니스를 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테니스를 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또한, 누군가가 고의로 테니스 코트를 닫았기에 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홉스는 자연재해나 누군가가 고의로 테니스 코트를 닫은 상황에 대해서 자유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이는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A를 테니스 코트에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하여, 페티트는 홉스의 소극적 자유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행위자가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행위자가 특정한 선택지인 Y를 선택할 수 없게끔 방해한다면 이는 자유가 훼손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Y를 선택할 수 있다면 행위자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Y를 선택했다는 것은 자유가 있는 상태로 소극적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적 논리에 불과하다(Pettit, 2012: 55). 행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린이 주장한 행위자가 Y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다는 주장은 모순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C라는 행위자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가택연금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C는 소극적 자유에 의하면 간섭받지 않은 것이지만 비지배 자유에 의하면 C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소극적 자유론은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구분하지 않았기에 비판하는

것이다(Pettit, 2012: 244-245).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의 비지배 자유의 개념은 ‘자유가 없는 것(not free)’ 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unfree)’ 을 구분하고 있다. 비지배 자유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타인의 의지에 종속 받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Skinner, 2008: 27). 교사가 돌발 상황으로 예정된 수업시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가정해보자. 학생들은 교사가 들어오지 않은 시간을 만끽하며 자유로운 ‘행동’ 을 누리고 있지만 학생의 신분의 ‘지위’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교사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행동은 언제든지 지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페티트는 자유 개념이 단순히 간섭 및 외부적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질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행위자는 강압이나 조종 없이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가운데 다양한 제약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결국, 자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는 홉스와 벌린의 자유론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오해하게끔 만들었다고 비판한다(Pettit, 1999: 18). 페티트는 기존 자유론은 행위자가 행위를 하는 자유에 대하여 관심 가졌다면,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타인의 외부적 통제(alien control)를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상정하는 것이다(Pettit, 1997a: 103). 이처럼, 자유는 다양한 유형의 제약 요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2) 비지배 자유 체계화

페티트는 자유 개념의 철학적 체계화에 초점을 맞춘다. 페티트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써 비지배 자유 개념을 제안했다(Pettit 1993b, 15-38; Pettit 1996,

576-604; Pettit 1997b). 페티트는 스키너의 소극적 자유론 비판을 넘어서 이에 대항하는 자유론을 철학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페티트는 맥칼럼(G. MacCallum)의 ‘삼가관계로서의 자유 개념(the concept of freedom as a triadic relation)’에 기반하여 비지배 자유를 체계화하고 있다. 그는 주체(X), 제약(Y), 행위가능성(Z)으로 규정한 후, “X가 Z를 하는 데 Y로부터 자유롭다”는 공식으로 자유론을 정의한다.

신로마 공화주의가 소극적 자유와 다른 측면은 ‘제약’에 대한 고려이다. 페티트는 이러한 제약 요인을 통제 개념으로 정립한다. 그는 통제의 유형을 ‘합리적 통제(rational control)’, ‘의지적 통제(volitional control)’, ‘담론적 통제(discursive control)’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합리적 통제란 행위자가 이성애 근거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합리적 통제란 자신의 이익을 타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며 합리적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박효중, 1994: 27). 그러나 합리적 행위에 의한 행동일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이에 반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페티트는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경련 및 반사와 같은 직관적인 반응이다. 생방송 중에 웃음을 참지 못하거나, 평소에 하던 말투나 행동을 공식적인 장소에서도 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둘째, 행위자의 신념과 욕구에 의하여 행위하였지만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틱장애가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셋째,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날 때 비합리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치다가 의도하지 않게 새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극히 드문 우연적 사례이지만 합리적 통제가 나타나지 않은 적합한 사례이다. 넷째, 행위자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스스로 취하게 된다. 합리적이진 않지만, 개인적 신념에 의한 행동이 존재하는 데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성적을 위하여 믿는 징크스와 같은 행

동물이 대표적이다(Pettit, 2001: 17-18).

또한, 페티트는 행동과 책임 가능성을 자유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혹자는 인간이 아닌 동물도 역시 신념과 욕구가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동물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능력이 빠져 있기에 자유로운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²⁷⁾ 즉, 자유는 행위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재귀적 존재이기에 동물과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Pettit, 2001: 25-27). 자유에 따른 책임은 이상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책임이 있어야 방종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페티트는 자유에 있어 행위자의 선택에 대한 책임성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의지적 통제에 대해 알아보자. 의지적 통제란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함을 뜻한다. 페티트는 의지적 통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였지만 그 행동이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마약 중독과 같이 행위자의 자유 의지가 1차원적 의지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문제는 후자인데, 프랭크퍼트(Harry G. Frankfurt)는 자유로운 행위자의 특징을 추상적 목표를 지향하는 2차적 욕구로 나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Frankfurt,

27) 스트로슨은 인간은 일종의 공동체 내 일원으로 상호 간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트로슨의 자유론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행동에는 궁극적인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길동이가 매일 점심에 메로나를 후식으로 먹는다고 해보자. 메로나를 점심시간 후식으로 먹는 특정한 행동에는 길동이가 본래 몸에 열이 많아 차가운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과일 중에 펠론을 가장 좋아해서 메로나를 즐겨 먹을 수도 있다. 혹은 유년 시절 좋았던 추억을 잊지 못해 먹을 수도 있다. 아니면 길동이는 메로나를 그냥 좋아해서 먹을 수도 있다. 즉, 길동이가 메로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규정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스트로슨의 논리는 자유의 책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Pettit, 2001: 20-25). 그러므로 스트로슨의 원인 불가능성은 자유행동에 따른 책임에 관해서 설명할 수 없다.

1988: 15).

그런데, 1차적 욕구에 의해 2차적 욕구가 침해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담배중독에 대하여 연구하는 의사가 대표적이다. 의사는 중독자들이 왜 담배에 끌리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데, 의사가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담배 피우는 중독자들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함이지 담배 그 자체에 대한 욕망은 없었다. 즉, 의사는 ‘중독을 꺼리는 중독자(unwilling addict)’로서,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은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 행동하는 행위자를 일컫는다. 그러나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너무나 강력하여 갖은 노력에도 금연에 실패하게 된다. 결국, 의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니코틴에 중독됨으로써 자유가 훼손되었음을 보여주었다(Frankfurt, 1971: 5-20).

그리고 행위자 의지가 외부적 통제에 의하여 선택이 좌우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어느 한 마을에 차를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행위자는 그 마을에 처음 가본 곳이기에 마을에 대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마을 주민은 그곳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우박으로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행위자는 마을 주민의 조언이 불쾌하지만, 합리적 이성으로 계산한 결과 주차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을 주민의 조언은 행위자의 자유를 간섭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Pettit, 2012: 43-44). 프랭크퍼트 역시 마을 주민들의 사례처럼, 외부적 통제는 행위자를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끔 만들어 마치 ‘동조현상’과 비슷하게 자유의 가능성이 훼손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Frankfurt, 1988, 39-44). 이에 따라, 의지적 통제 역시 자유에 적합하지 않은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론적 통제는 타인의 주장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 능력(ratiocinative capacity)’과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내에서 자유가 형성될 수 있음을 뜻한다. 구성원들은 이성에 근거한 대

화를 통하여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이다(Pettit, 2001: 72-73). 이처럼, 담론적 통제는 자신의 신념 및 욕구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합리적 및 의지적 통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 선택에 중점을 두지만, 담론적 통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유가 선택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로 볼 수 있다(Pettit, 2001: 47).

페티트는 올리시스와 선원을 담론적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선장인 올리시스는 선원들에게 갑자기 자신을 묶어달라고 요구한다. 선원들은 올리시스가 자신을 묶어달라고 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모든 사람이 홀려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을 알고서야 선원들은 올리시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 결국, 선원은 올리시스를 묶어 간섭하였지만 사이렌 소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친절한 간섭이었다. 그러므로 선원은 올리시스에게 가혹한 강압자가 아닌 ‘친절한 강압자’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의 담론적 통제는 타인이 나를 위하여 이익을 권해줄 수 있는 대변자(deputy)의 범주로 간주할 수 있다(Pettit, 2009: 46-47).

페티트는 담론적 통제를 통하여 타인과의 신념과 욕망이 상호적 관계에 놓여 있으며, 조작 및 강압으로 행하지 않고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합의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페티트는 담론적 통제에 근거하여 자유 개념을 ‘간섭’에서 ‘지배’로 전환하고 있다. 자유로운 행위자는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선택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나아가 현실에서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자유에 있어 타인의 간섭은 필연적인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시도한다.

페티트는 비지배 자유를 3가지 ‘공리(Axioms)’와 4가지 ‘정리(Theorems)’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공리 1은 ‘개인의 실질적 선택’이다. 행위자는 자신의 이성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공리 2는 ‘외부적 통제 가능성’이다. 행위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외부적 조건에 의하여 간섭 및 지배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페팅은 세 가지 공리를 바탕으로 네 가지 정리가 도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리 3은 ‘외부적 통제의 위치성’이다.

공리 3은 두 공리와 성격이 많이 다른데, 자유로운 행위자는 자신이 통제받고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대항도 가능한 상태를 일컫는다. 이를테면, ‘속이는 채 하는 통제(pretend control)’가 가능하다. 이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의 5단계인 ‘주인과 노예 관계의 붕괴’에 속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²⁸⁾ 주인의 향유를 위해

28) 1단계, 인정에 대한 요구: 자아에 있어 타자는 처음엔 자아가 소비할 수 있는 일종의 사물로 인식하며, 자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서 타자는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최소한 자기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자이다. 마치 로봇이나 동물처럼 말이다. 2단계, 생사 투쟁: 자아는 타자가 나를 자립적인 개체로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인정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투쟁 상태이다. 헤겔은 이를 ‘생사를 건 투쟁’이라고 부른다. 투쟁이라는 면에서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자연 상태와 비슷하게 보인다. 홉스가 말하는 투쟁 상태는 안전한 생명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면 헤겔에게 있어 투쟁은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헤겔이 보기에 타자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자유를 실현하고 획득하는 것이다. 3단계, 적에 대한 자비: 각자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자기 자신도 그 위협 속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타자를 완전히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나를 인정해 줄 타자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목숨을 걸지 못한 채 자기보존을 위해 비겁하게 후퇴한 자는 인정 투쟁에서 실패하여 ‘노예(der Knecht)’가 되고, 투쟁의 승자는 ‘주인(der Herr)’이 된다. 4단계, 주인 대 노예 성립: 결국, 주인은 노예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노예는 주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노예는 인정 투쟁에서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선택했고, 따라서 자신이 주인과 같은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이성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증명에 실패한 존재이다. 5단계, 주인과 노예 관계의 붕괴: 주인이 향유하고 있을 때, 노예는 사물을 가공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관계가 역전된다. 주인은 사물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관계가 맺어진다. 따라서 주인은 노예가 획득했던 의식을 초월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예는 자기가 직접 처해 있기에 자립성을 지니게 된다. 6단계, 노예의 해방: 이 지점에서 주인은 역설적이게도 노예를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Beiser, 2012, 242-251).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노동하고 전문적인 일을 습득하기에 이르며, 역설적이게도 주인은 노예의 전문적인 일 없이는 향유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공리 3은 통제 당하는 행위자가 통제를 가하는 자에게 거꾸로 견제할 수 있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즉, 통제 당하는 자들이 통제를 가하는 자에게 ‘역 통제(counter-control)’가 나타날 것이다(Pettit, 2008: 108-110).

정리 1은 “간섭은 외부적 통제를 가져온다.”이다. 이는 간섭자가 간섭받는 자에게 유도 및 조종 등으로 간섭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게끔 만드는 방법이다. 정리 1은 자유가 될 수 없는데, 행위자는 타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리 2는 “간섭 없는 상황에서도 외부적 통제가 일어날 수 있다.”이다. 정리 1이 직접적 간섭이라면 정리 2는 무의식적인 습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간접적 방식의 간섭을 의미한다. 행위자 A는 자신의 집에 가기 위하여 보통 2번 버스를 타고 간다. 2번 버스 외에도 다른 노선의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수단이 있는데도 2번 버스를 택한 이유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타왔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정리 2와 관련한 또 하나의 사례로 자유로운 행위자인 A에게 B가 특정한 선택지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간섭이 나타날 수 있다. A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y를 선택하려고 하자, B는 은연중에 자신이 원하는 선택지를 A에게 간섭하고 있다. 이러한 간섭은 ‘감시’와 ‘협박’과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A가 B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B의 간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앞서, 렉이 제시한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전근 갈 것을 종용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리 2는 타인의 간섭에 의하여 지배받는 상황이 다수 나타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그러므로 정리 2는 비지배 자유 개념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Pettit, 2008: 104-114).

정리 3은 “간섭 없는 상태에서 비외부적 통제가 가능하다.” 이다. 정리 3에서의 행위자는 스승과 제자와 같이 조언해주는 관계이다. 행위자는 선택지 x, y, z 중 x 를 선택하게 되면, 특별한 보상을 주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B는 x 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A에게 조언하고 있다. 만약, A가 B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외부적인 통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B는 행위자에게 이로운 선택하게끔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에 불과할 뿐 강압적인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Pettit, 2008: 114-116). 즉, 자유로운 행위자인 A는 B의 강압에 의하여 선택지를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페티트는 이러한 확실한 근거와 정보가 제공된다면 개인의 선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4는 “간섭이 있는 상태에서도 비외부적 통제가 가능하다.”이다. 정리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간섭받는 자는 간섭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간섭자가 통제하려 하지만 간섭받는 자는 단지 간섭자의 간섭을 받아들이고 ‘속이는 채 하는 통제’를 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Pettit, 2008: 116-118). 페티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간섭받는 자는 간섭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 상호 간의 견제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11> 간섭과 지배에 관한 네 가지 유형(Pettit, 2008: 118)

	간섭 있음	간섭 없음
외부적 통제	대항력이 없는 간섭(정리 1)	감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정리 2)
비-외부적 통제	상호 견제하는 간섭(정리 4)	상호 합의하에 통제: 매력적인 제안(정리3)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행위자의 자유가 실현되려면 서로 간에 외부적 통제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외부적 통제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항상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있다. 전자가 공리 3과 정리 3이라면, 후자는 공리4에 해당할 것이다. 즉, 자유는 외부적이건 비외부적이건 간에 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페티가 3공리, 4정리에서 이해하고자 한 바는 ‘간섭’과 ‘지배’의 개념 구분이다. 소극적 자유론은 현실의 간섭만을 회피하기 때문에 미래의 간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지배 자유는 미래에도 제약할 수 있는 자의적 권력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페티는 ‘간섭 없는 지배’보다 ‘지배 없는 간섭’이 비지배 자유에 어울리는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다.

페티는 지배 없는 간섭의 대표적 사례를 ‘울리시스와 사이렌’의 사례에서 이미 논한바 있다. 나아가, ‘알콜 중독자와 열쇠’의 사례를 들어 지배 없는 간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A가 알콜 중독자여서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해보자. 이에 따라, A는 술을 억제하기 위하여 술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의 열쇠를 B에게 주면서 A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하자. 약속한 기간 동안 A는 마음이 변심하여 B에게 열쇠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B가 돌려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의 자유는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B는 A와 사전에 합의한 기간 동안 A가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여도 B가 열쇠를 주지 않았다 해도 이는 자유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서로 간의 합의한 사항을 지킨 것이기 때문이다 (Pettit, 2012: 87-100).

이와 같은 알콜 중독자와 열쇠 사례는 앞서 제시된 후견주의의 암묵적 동의를 논파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후견주의

는 좋은 결과를 상정이 가능하다면 간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를 돕는 의사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은 근본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비지배 자유는 담론적 통제 개념으로 공동체를 선천적으로 상정하지 않으면서도 타인들과의 상호적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간섭의 유무’가 아니라 ‘지배 가능성’이다. 이처럼, 페팅은 자유 개념이 단순히 간섭 및 외부적 방해 관점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질 능력에 관심 가진다. 즉, 행위자는 강압이나 조종 없이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가운데 다양한 제약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국가가 시민들에게 통제하는 것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간섭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배 없는 간섭의 자유 개념을 체계화하는데 성공하였다.

3. 신로마 공화주의의 특징

1) 반다수결주의 조건: 위그노 혁명과 저항권

신로마 공화주의의 반다수결주의 조건은 담론적 딜레마에서 제시된 바 있다. 페팅은 담론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을 재판 사례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세 명의 재판관은 계약 위반에 의한 원고(defendant)의 손해배상 여부를 판결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법정은 계약의 유효성, 원고의 계약 위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입증되어야만 원고에게 실행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세 명의 재판관 A, B, C가 판결내리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12> 재판관들의 담론적 딜레마(Pettit, 2001: 109)

	계약이 유효한가?	계약을 위반하였는가?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가?
재판관 A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재판관 B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재판관 C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재판관들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판결하게 된다. 첫째, 재판관들은 추론으로 각자의 결론을 도출하게 한 후, 다수결 방식에 근거하여 도출된 결론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개인화 추론(individualizing reason)’라고 뜻한다. 다음으로, 문제의 계약이 유효하였는지 혹은 원고가 계약 위반하였는지 두 가지 전제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 종합한 후, 최종적인 견해를 결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종합적 추론(collectivizing reason)’이 있다(Pettit, 2001: 109). 개인적 추론에 근거하게 되면,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게 된다. 반면에 비합리적 결정은 무시 될 것이다. 거꾸로, 종합적 추론은 공공선에 이익이 되는 대신에 개인적 추론 결과를 경시하는 문제가 있다. 즉, 개인과 집단 사이에 불연속적인 딜레마가 나타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페тит의 담론적 딜레마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절차적 공정성, 대화를 통한 합의와 같이 형식적 제도가 완비된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는다. 페тит의 담론적 딜레마는 합리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제하였던 기존의 민주주의 논의를 논파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합리적 행위자로 상정하는 전제는 잘못되었으며 다른 개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담론적 딜레마에서 더욱 큰 문제는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개인들이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다.

담론적 딜레마로부터 상정된 반다수결주의 조건은 저항권 개념으로 체계화된다. 이번 절에서는 저항권의 역사적인 맥락과 저항권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할 것이다. 신로마 공화주의 저항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학자는 스키너이다. 스키너는 앞서 비지배 자유의 개념을 르네상스 시대 수사학과 정치영역에서 발굴하였다면, 저항권은 종교 전쟁의 역사에서 발굴한다. 저항권은 중세 시대 관용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으로서 종교 전쟁시기부터 시작된 논의이다. 15세기 유럽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인문주의를 추구하였으며, 에라스무스(Erasmus)는 기존 기독교 사상을 적대시 하던 대표적인 사상가였다.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95개 조의 ‘반박문’으로 교황을 전면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들은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불리었으며, 오직 성서만으로(sola scriptura) 오직 믿음에 의해(sola fide)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universal priesthood)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교황의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간이 계급적 구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한 정치적 사상으로 볼 수 있다.

루터의 영향을 받은 칼뱅은 현실의 문제에 관심 기울인다. 이른바 가톨릭과의 ‘단절의 신학’을 주창하며 단절이 없으면 진정한 개혁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토대에 기반하여 칼뱅의 개신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북유럽 지역의 상공업 계층 중심으로 퍼져나갔으며, 가톨릭과의 종교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위그노 전쟁’이라 불린다.

문제는 종교로 인한 전쟁은 종교의 신념이 다르기에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이며, 승리 아니면 죽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통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종교적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관용칙령(Edict of Tolerance)’이 도출되기에 이른다. 관용칙령은 가톨릭과 위그노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칙서이며,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종교적 차이로 인한 폭력을 막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이용재, 2010: 5).

관용칙령을 분기점으로 하여 관용론은 도덕적 명령으로 확장된다. 관용론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16세기 이후 몽테뉴(Michel Eyquem de Montaigne)에서 시작하고 있다. 몽테뉴는 경험에 기반 한 지식을 추구하여 모든 철학적 탐구는 현재 진리를 발견했거나 혹은 계속 탐색 중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진리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영역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몽테뉴에게 있어 이성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이해하여 모든 철학적 탐구는 진리를 발견했다거나 계속 탐색 중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김상범, 2013: 29-31).

로크는 몽테뉴의 주장을 더욱 발전시킨다. 로크는 인간 생활을 종교, 도덕, 사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사람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해한다. 이에 따라, 로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주장한다(Locke, 1999: 138). 국가는 어떠한 도덕적 규칙도 제정하지 않고 단지 규칙을 보완하는데 그 기능을 한정해야 한다. 나아가, 로크는 개인에게 집단 구성 및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 구성과 결사의 자유는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Sabine, 1994: 67). 로크의 주장은 자유주의 및 다원주의에서 추구하는 자비로운 무관심 원칙을 발전시킨 것이다(Walzer, 2005: 27-28, 변순용, 2010: 136).

관용론은 필요요청에 의해 요구되는 실천적 덕목이며, 대등한 관계 내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관용론은 가치관의 충돌을 필연적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처방책을 찾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용론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추구할만한 태도이자 중요한 가치로 상정할 수 있다(김용환, 2005: 94).

그러나 관용론의 한계는 뚜렷하게 제시된다. 차이를 관용한다는 것은 차이를 지지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적 다양성은 오랜 기간 동안 특정한 사람들이 함께 누려온 문화 양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모든 독자적 문화들이 동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타자와의 공존은 가능하지만 타자와의 진정한 이해는 불가능한 채로 여전히 남아있다. 보댕은 “이후로 각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신성하게 자신의 종교를 옹호할 뿐 종교에 관해 다시는 대화하지 않았다.” (Bodin, 1975: 471)고 하여 종교 영역에서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Skinner, 2012: 474; Walzer, 2005: 27-28; 변순용, 2010: 136).

종교전쟁을 거치고 난 후, 유럽 사람들은 ‘믿음 아니면 죽음’ 식의 이분법적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을 몸소 체험하였다. 자신이 믿는 종교 강요는 타인과의 불화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종교는 신념의 문제이기에 종교를 이성적으로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인의 신념을 바꾸는 것 역시 요원한 일이다. 결국, 상대방의 종교를 어쩔 수 없이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여 관용론이 대두된 것이다(김용환, 2005, 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전쟁 당시 종교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던 이들 역시 관용에 대하여 진정한 타협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방으로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Skinner, 2012: 466).

이러한 관용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저항권 이론이 대두되었다. 베자(Theodore Bezark)는 1554년에 군주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하위 행정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저항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Skinner, 2014: 412-413). 기독교인들에게 순종의 의무는 신의 대리인인 ‘바울’ 에게만 가능하다. 즉, 신의 서임을 받은 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이러한 참주에 대하여 시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상정되었다.

시민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대리인이 행하는 정책에 대한 해명의 요구할 수 있는 ‘인민의 권리(les droit du peuple)’가 있다. 이러한 권리 요구는 주권자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시민의 대리인 직무를 성실히 행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Skinner, 2014: 619-620).

그러므로, 통치자는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시민들을 안전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키잡이(gubernator)’ 및 ‘안내자(rector)’로 이해해야 한다. 만약, 통치자가 권력을 휘두른다면, 이에 시민은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Skinner, 2014: 639). 이와 같은 저항권을 모나르코마크(Monarchomaques)’ 개념으로 명명한다.

모나르코마크란 군주가 폭군으로 변질되면 이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거부권이 아니며, 이러한 저항권은 필수 조건으로 여긴다. 일련의 저항권 이론을 스키너는 ‘위그노 혁명(Huguenot revolution)’이라 칭하며, 헌정주의에 기초한 저항이론을 최초로 선보인 사례로 간주한다. 이처럼, 반다수결주의 조건은 저항권 이론으로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공화주의의 세 번째 조건인 권력분산의 조건으로서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할 것이다.

2) 권력분산의 조건: 공화주의적 헌정주의

비지배 자유는 임의적 지배를 막기 위한 이론적 체계화를 선보였다. 행위자들은 권력자를 항상 견제하는 권한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시민은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즉, 비지배 자유에 입각한 신로마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혼합정은 국가가 권력의

통제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Pettit, 2013: 170). 그리고 권력분산을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엄격한 3권 분립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분립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여 공동체의 덕성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혼합정은 참주 출현을 막는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이러한 권력 분립 정책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여 공동체의 덕성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권력 분립 정책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의 혼합정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혼합정은 중용을 추구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군림하지 않기에 상호 균형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정 형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지만 사람이 모이면 전체적 판단력은 훌륭해지며, 비전문가가 법률에 근거하게 된다면 전문가 못지않게 판단력이 뛰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선의 국가는 매우 부유한 자들, 중간 계급, 매우 가난한 자들의 계급으로 분류하면 이중에서 중간 계급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 계급은 적정한 재산을 가졌기에 빈민들에게 나타나는 탐욕이 없으며 부자에게 나타나는 권력추구가 덜 하기에 당파적 갈등이나 분열이 최소화 될 것이다(Aristoteles, 2009: 3권 17장).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은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로마에서는 아테네와는 다른 혼합정을 선보였다. 로마의 혼합정은 어느 한 계층이 과도한 권력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 혼합정을 이상적인 정치체로 여기며, “모든 공화국에는 두 개의 대립하는 파벌인 평민과 부자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만약, 두 파벌 중 어느 하나만 권력을 가지게 되면, 공화국의 자유는 급속히 무너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로마의 정치 체계는 “상원이 정치적 의견을 제안하면, 시민이 결정하고, 판사들이 집행하는” (Crick, 2002: 24) 혼합정의

로 규정하였다. 마키아벨리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갈등은 공화국을 유지하는 원동력이기에 부자와 평민들 간 파벌은 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Skinner, 2004: 197-203).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도 있지만 혼합 정체의 마비 때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그라쿠스 형제 시기의 토지법이 실패한 이유를 지도자들의 신중함의 결여로 보고 있다. 시민들은 그라쿠스 형제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냈으며, 이에 귀족들은 불안을 느껴 그들을 살해한다. 그라쿠스의 살해는 계급의 질서를 파괴하는 관례가 되어 로마의 멸망이 가속화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마키아벨리는 귀족과 평민간의 상호 견제에 있어 부족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10인회가 있다. 로마의 귀족들은 시민들의 견제 세력인 호민관을 폐지하려는 지나친 욕망 때문에 10인회라는 참주의 출현을 가져왔다. 시민들이 귀족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회하고 10인회에 절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예종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Machiavelli, 2003: 200-207).

마키아벨리는 법을 제정할 때 어느 세력이 통제권을 장악하도록 구성한다면, 공화국은 쉽게 타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득권층들이 귀족정으로 정치형태를 구성하게 되면 그들의 이익에 따라 통치하기 마련이다. 민주정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파벌에 의해 국정운영이 좌지우지될 것은 마찬가지이다(Skinner, 1993: 115). 이와 같이, 마키아벨리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치 체제가 아닌 비당파적 갈등을 권고하고 있다. 비당파적 갈등이란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계급들이 일정한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스키피오가 포에니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아프리카로 건너가려고 했을 때, 파비우스는 자신의 습관과 관례적 행동을 포기하지 못해 그 작전에 몹시 반대했다. 따라서 만약 파비우스가 계속해서

우두머리로 남아 있었더라면 한니발은 이탈리아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파비우스는 상황이 전쟁의 방법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파비우스가 로마의 왕이었더라면, 그는 전쟁에서 쉽사리 패배하였을 것인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신의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그가 태어난 공화국은 다양한 시민들과 의견들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로마에는 지구전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최선의 인물인 파비우스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일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어야 할 시기에 적합한 스키피오가 있었다. 그러므로 군주국에 비교할 때, 공화국은 시민들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시대의 요구에 훨씬 잘 적응할 수 있다. 따라서 군주국보다 훨씬 더 오래 유지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Machiavelli, 2003: 464).

그리고 로마에는 선출된 원로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인 법률 승인 제도가 선정되었다. 원로원의 권위는 단순히 지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의 군사적 경험과 행정적 직무를 거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곽준혁, 2006: 100). 원로원의 탁월한 판단과 호민관 다수 동의의 원칙이 결합하여 공화주의의 대표와 견제 두 원칙이 형성되었다.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식견에서 나오는 원로원들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분명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원로원들은 귀족의 신분이었기에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기에 평민의 처지를 대변하는 ‘호민관(tribunus)’이 출현하였다.

혼합정은 헌정주의로 발전된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시민에게 있고 시민을 위하여 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이론이라면,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는 ‘법의 지배’를 토대로 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²⁹⁾

29) 보통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데, 이 둘의 개념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최근의 미국 대선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힐러리 클린턴이 전국 득표수가 트럼프보다 2백만 표의 차이로 이겼다.

공화주의적 헌정주의는 영국의 잉글랜드 내전 당시에 찰스 1세의 왕위를 둘러싸고 왕당파와 의회파가 나뉘어져 내분이 일어나면서 구체화되었다. 의회파들은 왕을 반역죄로 처형하기 위해 헌정주의와 공화주의 이론을 끌어온다. 헌정주의는 모든 정치권력은 인민(people)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왕의 권력은 인민에게 나온 부차적인 산물이다”고 왕당파에 대하여 반박한다. 이처럼, 헌정주의는 정치의 목표는 인민을 보호하고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왕에 대해서 저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헌정주의는 군주의 독점적 권력에 대하여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군주가 법적 제한 없이 사익을 추구하면 독재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인민은 군주에게 죄를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헌정주의는 모든 정치권력이 인민에게 있으며 왕의 권력은 부차적인 산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기존의 헌정주의는 ‘천부 인권’으로 권리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권 개념은 ‘인권 보호’ 내지는 ‘인권 존중’과 같이 선(good)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권 개념에 대한 정의는 인간이 가진 고유한 권리로서 비양도적이고, 소멸불가능하며, 불가침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박정순, 2006: 38-40). 그러므로 기존 보편적 인권 개념은 법적 권리임과 동시에 도덕적 권리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인권 개념을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구성원”(조국, 2010: 10)으로 해석해야 하는 데 개인의 인권에만 치중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다수결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이해한다면, 힐러리가 대통령으로 임명되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대통령 선거법은 각 주마다 선거인단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헌정주의가 가미되어 있는 선거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박성우, 2006: 120). 이러한 미국 특유의 선거법으로 인하여 트럼프는 총 득표수에서 힐러리에겐 졌지만 각 주의 대표 인단에서 이겨 306대 232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민주주의와 헌법은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재호, 2006: 210).

반면에 모든 권리를 승인하기란 현실에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권리는 바꿀 수 없는 불변의 가치이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보편적 성향을 지녀야 함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문화의 미명하에 남아있는 부조리한 관습까지 권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문화 및 관습을 인정하게 되는 상대주의로 귀착되기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화주의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하며, 권리 개념이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그치지 않고 왜 권리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 복무의 개념은 각 국가에 처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Bellamy, 2011: 27).

이러한 논의에 입각하여 공화주의에 입각한 권리는 ‘의견 불일치’의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뜻하는 불일치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정당에 대하여 경쟁적이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 등을 뜻한다(Bellamy, 2007: 83). 이와 같이, 공화주의적 헌정주의는 갈등의 긍정을 기반으로 하여 민주주의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서로 간의 불일치가 존재함에도 공정한 절차가 담보되고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 불일치가 나타난다면 불평등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페팅에 따르면, 공화주의적 헌정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① 정치적 통제는 헌법상의 절차와 제약 하에 실행되어야 한다.
- ② 정치적 통제는 법의 지배를 준수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곳에 적용된다.
- ③ 정치적 통제는 공개적인 의회의 심의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 ④ 각국의 의회는 정치적 통제가 서로 이루어지는 쌍방향적이어야 한다.

⑤ 사법 기능은 입법이나 행정상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부의 의사 결정은 선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법에 임명된 기관에 속한 의사 결정은 일반적으로 공식화된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하고, 항소 시에는 법원 또는 특정 법적 기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Pettit, 2001: 16-17).

공화주의적 국가는 법의 지배에 따라 움직이기에 자의적 간섭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적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곽준혁, 2009b: 122)고 주장하고 있다. 페티트는 정치가 법의 지배에 입각하여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시민이 주권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권적 시민은 루소와는 다르다. 루소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화주의에서의 시민은 구성원들의 정상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대리인을 긍정한다. 그리고 헌정적 시민들은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시민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이다(Pettit, 2012: 288-292).

정의의 역할이 수평적 차원에서 자유인이 누려야 할 삶의 조건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의 역할은 수직적 차원에서 그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Pettit, 2019: 186).

정리하면, 자유주의적 헌정주의는 현대 사회를 다원주의로 상정하고 천부인권적 권리를 지니고 태어났기에 국가는 모든 인간을 존중하게끔 규정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종교 및 문화와 같이 화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였다. 반면에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권리 개념을 하늘에서 주어진 천부 인권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치 과정의 결과물로 간주한다. 신로마 공화주의는 “불일치가 해결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평등을 보존하는 데 있다.” (Bellamy, 2008: 253)고 주장하고 있다.

4. 신로마 공화주의의 범주 규명

1) 공동체주의와의 길항관계

자유주의적 시민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권리를 요구하며, 이러한 자유주의적 권리는 국가보다 앞서는 천부인권으로 간주한다. 하이에크(Frederick Hayek)는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간섭은 단기적 목적을 이루이기에는 적합하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이에크는 인위적인 사회질서 대신에 ‘자생적인 질서(spontaneous order)’를 제시함으로써 ‘최소 민주주의’를 주장한다(Hayek, 1960: 216-218). 이와 같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국가에서의 개인에 대한 개입은 축소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자유주의의 특성으로 인하여 도덕적 공동체가 와해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80년대 서구에서는 자유주의의 지나친 확대를 우려하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주의는 인간의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인 공동체를 간과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소극적 자유만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적인 성취에만 몰입하게 되어 시민적 자유가 상실되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테일러(Charles Taylor)는 현대 사회를 세속화, 중립적 이성에 대한 맹신, 자유의 손실을 특징으로 꼽는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사적 관심사에만 몰입하는 생활 태도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상실되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개인은 국가의 적절한 경제적 배분에 만족하여 개인들은 정치에 더욱 무관심해진다. 테일러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개인들은 권력자들이 통제하여도 개의치 않는 ‘온건한

독재'가 지배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비판한다(Taylor, 2003a: 19-20).

둘째, 자유주의는 합리적 행위자를 기반으로 하기에 비계약적 의무인 가족 및 공동체적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샌델에 따르면, 롤즈 이론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중립성을 지적하고 있다(Sandel, 2014: 388-389).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공공선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덕스러운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의 운명을 동료들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자 좋은 삶의 요소이다.

만약, 국가가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비도덕적인 가치를 지닌 결사체에 반대하기 어렵다. 국가의 중립성은 일요일이 아닌 날을 종교적 의무일로 지키고자 하는 특정 종교인들의 권리까지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를 인정해주게 되면, 축구광이 자신이 기다려 온 축구경기가 열리는 날을 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까지 인정해주어야 하는 경사면의 오류가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샌델은 공적 토론장에서 종교적, 도덕적 담론은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가가 중립적이라면 나치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도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Sandel, 1996: 65-68).

이와 같이, 롤즈의 중첩적 합의는 근본적인 이념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 사례이다(Habermas, 2000: 122). 낙태 금지를 주장하는 종교계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중첩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며, 이에 관련한 법적 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샌델은 우리는 가족의 한 성원, 어떤 공동체, 민족의 성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특수한 존재들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 자유주의는 정의 개념을 최우선적 덕목으로 인식하고 다른 가치들을 중시하지 않았다. 왈저에게 현대 사회에서 지배 관계가 발

생하는 이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가 무너진 데서 비롯된다. 현대 사회는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다원성의 파괴라는 새로운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라는 하나의 지배적 재화로 인하여 타인을 전략적 대상으로 취급할 때 공동체의 붕괴는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 간의 경계를 구분하고 분배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Walzer, 1999: 206-209). 지금까지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는 인간을 분리, 고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는 개인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 상정된다. 반면에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사회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의의를 두는 정치 이론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간극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할 수 없는 평행선을 긋는다(곽준혁, 2007: 137).

공동체주의에는 통합적 공동체주의와 다원적 공동체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적 공동체주의는 어떤 가치를 전체를 통해서 고차적인 삶의 방식으로 통합을 뜻한다. 반면에 다원주의적 공동체주의는 민족, 종교, 문화, 지역적 공동체 등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Walzer, 2001: 241).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공동체주의를 시민 공화주의와 등치시켜 간주할 것이기에 본 절에서는 다원주의적 공동체주의와의 길항 관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다원주의적 공동체주의의 특징은 테일러의 ‘인정의 정치(recognition of politics)’와 왈저의 ‘복합적 평등’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왈저는 다원적 정의가 개념화되어 단순 평등을 넘어서는 다원적 평등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하며, 관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용이 꼭 필요하며, 관용 개념은 여러 공동체들을 지켜주기 위해 차이

를 용납하는 덕목으로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Walzer, 2005: 8).

다음으로, 테일러는 인정윤리에 기반하여 다문화주의를 구성하고 있다. 테일러는 사회구성원들의 공유된 이해를 가능케 하는 공동체의 도덕적 지평이 존재하며, 개개인의 정체성은 도덕적 지평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 특수한 공동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Taylor, 1992: 36).

그리고 헤겔의 인정 이론과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는 타인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상호 인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페티에 따르면, 자유로운 시민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타인의 호의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공화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인정(recognition)은 시민 자신이 독립적인 사고를 토대로 하여 타인을 존중하는 상호 인정의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즉, 공화주의자들은 과거의 위계적 질서가 존재하는 사회가 아닌 공동체의 시민들의 평등을 추구한다(Honohan, 2002: 257-259; Pettit, 2019: 124).

이러한 타인의 존중의 측면은 테일러의 인정 개념과 동일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헤겔의 ‘인륜성(Sittlichkeit)’을 토대로 하여 인정(recognition)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⁰⁾ 인정은 인간의 공동적, 상호적 존재를 특징짓는 개념이다. 자유는 “타자존재에게 있으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에 있지만, 특히 이 경우의 타자존재는 타인이다. 개인은 타인 속에서 자기를 직관함으로써 자유이며, 이 경우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되는 것이다(Taylor, 2003b: 68).

30) 헤겔에게 인식은 대상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의 내용을 대상화하여 의식으로 정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립된 의식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지식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부가(Zutat)’로 부른다. 외부적 대상에 대한 인식은 부가를 통하여 가능하며 자아가 확립한 지식은 타인의 승인을 통할 때만 이성적 존재로 확립하는 ‘인정(Anerkennung)’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헤겔은 이러한 인정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Hegel, 2005: 190).

진정성의 윤리는 두 가지 차원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내면에 대한 충실성이 자기 규정적 자유라는 이념으로 승화되면서 도덕 철학적이고 정치철학적인 방식으로 형상화 된다. (중략) 두 번째로 진정성의 윤리는 역사적 지평에 대한 실천적 책임감과 부분/전체의 유기적 통합을 지향하는 문화적 특성도 있다. 이를 우리는 상호 주관적 검증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표현적 통합에의 열망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두 차원의 진정성의 윤리 이념이 서양의 경우에 가장 명시적이고 풍부한 형태로 출현한다고 볼 수 있다(Taylor, 1992: 29).

테일러에게 인정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인정은 ‘존엄의 정치’를 가능하게 해준다. 테일러는 인정 개념이 ‘명예’를 현대사회로 확장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Lord’, ‘Lady’와 같은 명칭들이 ‘Mr’, ‘Miss’ 등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과거의 명예(honor)가 지금의 존엄(dignity)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고 이해한다(Taylor, 1997: 26-27).

테일러는 사회구성원들의 공유된 이해를 가능케 하는 공동체의 도덕적 지평이 존재하며, 개개인의 정체성은 도덕적 지평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 특수한 공동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특수주의를 강조하는 ‘차이의 정치학’으로 나아가게 된다(Taylor, 1992: 36). 결국, 테일러가 지향하는 사회는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녔지만 이는 공동체의 역사, 문화, 언어, 윤리 등을 공유하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의 정치학은 각 문화마다의 옳음을 주장하게 되면 문화 상대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 상대주의란 타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의 시각에서 평가함을 뜻하고 있다. 한국인이 아랍 여인의 차도르를 문화적인 형태로 인정하듯이 아랍인이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문화적 상대주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슬람 사회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도 문화로 존중해야하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즉, 관용은 모든 문화를 관용해야 하는 ‘관용의 역설’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다양성은 오랜 기간 동안 특정한 사람들이 함께 누려온 문화 양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모든 독자적 문화들이 동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면에, 공화주의적 인정은 공화주의 이전의 기존 문화 공동체의 가치관과 문화와 구별된다. 공화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인정은 자기 지배가 실현되는 공동체에서 다양한 가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인정의 과정은 시민들 사이의 연대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즉, 공화주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평등에 관심 가진다(Pettit, 1997a: 259).

그리고 다원적 공동체주의가 헤겔의 인정이론에 입각한 다문화주의를 표방한다면,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유에 입각한 세계시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다. 신로마 공화주의는 다문화주의를 옹호하지 않고 세계 시민주의의 이론적 토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관은 베스트팔렌(Wesfalen)조약에서 정립되었으며, 이 조약에서 국가의 정의는 영토 내에 있는 시민, 자원, 종교까지도 최종 결정할 수 있었으며, 다른 나라에 간섭할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유와 물질적 평등 사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에 입각한 국가는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국가의 억압적인 지배가 지속된다면 이에 대하여 세계 시민들은 함께 연대해야 한다. 즉, 공화주의 국가는 비지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존재하며, 이와 동시에, 시민은 지배에 맞서기 위하여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비지배 자유가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국제연합(United Nations)만이 아닌 국제 비정부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 국경없는 의사사회(Doctors without Borders) 등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곽준혁, 2004; Pettit, 2019).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공화주의가 언뜻 생각하면 공동체주의의 한 줄기로 이해하기 십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유주의가 공화주의에서 파생된 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최고 통치권이 제한될 필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유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Viroli, 2006: 127). 즉, 자유주의는 공화주의의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오히려 내용이 빈약해져버린 변질된 공화주의이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철저한 자유주의 사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Viroli, 2006: 132).

2) 시민 공화주의와의 길항관계

공화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공화주의’와 키케로, 마키아벨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로마 공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시민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의 공통된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공동체 내에서의 공유된 가치관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Oldfield, 1990 : 145). 공화주의가 상정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부패 방지를 가장 큰 덕목으로 이해하였다(Pocock, 2011: 35).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운영이 운(fortuna)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부패를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오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부패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법을 사용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 공화국에게 본래의 의도대로 돌리게끔 해주는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Machiavelli, 2003: 1, 24).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시민들의 자유는 통치자들의 변덕과 간섭에서 벗어난 공공의 것(res publica)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는 자유 개념을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Schuppert, 2013: 6-7). 공화주의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헤겔 (G.W.F.Hegel)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과도 동일한 논의로 간주할 수 있다.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나와 타인 간의 주인과 노예의 형태가 유지되려면, 서로의 존재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주인은 노예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일종의 동물로서 취급하고, 노예는 주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도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노예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가능하다는 역설이 도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는 둘 다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정 행위 속에서 나는 개별자가 아니다. 나는 당연히 인정 행위 속에서 존재하며, 더 이상 매개 없는 현존재가 아니다. 인정된 자는 이 존재를 통해 직접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된 것이지만, 바로 이 존재는 개념상 산출된 것이며 이 존재도 인정된 존재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인정받으며, 필연적으로 인정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필연성은 인간 본유의 것이며, 내용과 대립하는 우리 사고의 필연성이 아니다. 인간 자체는 인정 행위로서의 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이 바로 인간의 자연 상태를 극복하고 있다. 즉 인간은 인정 행위다(Honneth, 2011: 97).

헤겔은 주인과 노예 관계가 고착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노예가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홀로 주체’가 아니

라 ‘상호 주체’이며, 이는 상호 인정으로 공존 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加藤, 2009: 330). 그리고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주인의 ‘지배’에 노예가 ‘종속’되지 않게끔 투쟁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술탄의 선의에 달려 있다면 술탄의 신민은 당연히 루카의 시민보다 자유롭지 못하다(Harrington, 1992: 20).

해링턴은 자유를 예속이 없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 즉, 술탄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노예들이 주인의 관대한 처분 안에서 편안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지,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를 누렸다 할 수 없다고 해링턴은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술탄이라는 군주가 있는 한 시민은 여전히 노예상태의 종속관계로 간주하고 있다(Skinner, 2007: 135-138).

이에 대하여, 신로마 공화주의는 “법을 넘어서 특권이나 자유재량의 행사를 허용하는 정부에 살고 있다면, 이미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다.” (Skinner, 1988: 70)고 하여 자유 개념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인이 노예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해도 노예는 여전히 자유인이 아니다. 현재는 친절하지만, 주인이 언제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헤겔과 공화주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관습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공통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화주의는 ‘권리’ 개념에서 동등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개인적 권리만을 강조하고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Donally, 2002: 56-62). 반면에 공화

주의적 권리는 정치에 대한 시민 참여를 개인적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 조건으로 간주한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따라 규범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규정이나 제도가 특별히 높은 지위와 권력을 지닌 개인과 집단들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치와 요구를 공정하게 존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 내의 구성원들은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체에 대한 관점이다. 시민 공화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우애(civic friendship)’를 중심으로 하여 고대 폴리스적 인간관을 부활시켰다. 그는 폴리스가 단순히 개인의 안위, 경제, 안보에 그치지 않고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졌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애(philía)는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음의 일치는 폴리스 시민들 사이의 친애로 보이며, 또 실제로도 그렇게 이야기된다. 그것은 유익과 관련하여 삶을 위한 것들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Arisotele, 2006: 1167b)고 하여, 시민들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유된 정체성과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Oldfield, 1990 : 145).

이와 같이, 시민 공화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인간관이 전제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정치참여는 좋은 삶의 필수적인 측면을 이룬다는 점에서 인간을 정치적인 동물로 간주하고 있기에 그의 인간관은 사실상 공동체주의의 특성과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Oldfield 1990: 20-24; Pocock, 1981: 49-72; 박준혁, 2007: 137-142).

상기의 논의에 입각하여 볼 때, 시민 공화주의에서의 시민들은 혈연과 지연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에 기초한 ‘자기애(self-love)’로 간주하고 있다. 시민 공화주의에서 개인들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시민은 공동체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로마 공화주의는 공동체의 특성을 개인의 이타적인 ‘이기심(selfishness)’을 발현하는 ‘도구적 공화주의(instrumental republicans)’로 이해하고 있다. 공화주의에서 시민은 지위가 아니며 정치적 참여를 통해 획득하는 후천적인 속성이다. 이에 따라, 신로마 공화주의에서는 정치적 삶을 개인의 삶보다 더 중요한 가장 높은 차원에 해당하는 의무이자 헌신으로 해석한다(Kymlica, 2005: 415; Oldfield, 1990: 1-8).

나아가,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조국에는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caritas reipublicae)이다. 그리고 공화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생활은 공동체 생활 가운데 ‘최고의 선’이다. 개인들은 사적 생활을 포기하고 정치 생활에 전적으로 헌신할 필요와 당위가 있다.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애국심은 ‘인위적’ 감정의 산물이다.

신로마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인위적 감정의 산물의 사례는 애국심이다. 신로마 공화주의에서의 애국심은 하나의 문화로서 의미를 가지고 지역, 종족, 언어, 풍습, 종교와 같은 요인보다 공화주의적 평등과 어떤 독특한 문화에 대한 애정에 가치를 두는 정치적 열정이라 할 수 있다(Viroli, 2006: 181). 이처럼, 신로마 공화주의에서의 애국심은 공화국의 법, 정치체제, 생활방식에 스스로 충성하며 우리나라를 진정한 시민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열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Pettit, 1997a 257).

한편, 시민 공화주의는 최근 서구의 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방향 성과는 상이하다고 지적한다. 시민 공화주의는 내재적 공화주의에 입각한 선천적인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시민들에게 ‘책임’을 가르칠 수 없다. 시민들이 자신의 후천적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시민 공화주의의 입장은 공동체의 윤리가 자신을 특정 인물로 볼 수 없는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의 윤리가 부도덕할지라도 이를 일종의 관

습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다(Peterson, 2011: 122-123).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시민들에게 책임감과 의무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관계를 중시여기는 신로마 공화주의가 최근의 시민교육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공동체주의를 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정치 이론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내에서의 공유된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시민 공화주의에서도 공동체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민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속성을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수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연대감으로 전제하고 있다.

반면에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공동체는 인위적인 사랑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공동체주의와 시민 공화주의는 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이데올로기로 그 역할을 자임한다면, 신로마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의 특성을 수반하여 맹점을 보완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정치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신로마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 및 시민 공화주의와는 구분되는 정치 이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신로마 공화주의 특징과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신로마 공화주의의 이론이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견제 민주주의로 형성되고 있다. 신로마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유에 입각한 시민들의 지배 없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의제기능력과 관계 회복적 정의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V. 신로마 공화주의의 민주주의에의 적용: 견제 민주주의.

본 장에서는 견제 민주주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신로마 공화주의의 특징이 견제 민주주의로 확장되는 논리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2절에서는 시민들이 국가 권력의 견제에 맞서는 ‘이의제기능력’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3절에서는 공화주의적 정의 정립과 그리고 순응자 중심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관계 회복적 정의를 논할 것이다.

1. 신로마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접목

1) 기존 민주주의 비판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의, 결집, 심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론의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페티트와 리스트의 그룹 행위자 이론이 제시되었다. 그룹 행위자 이론은 불일치를 긍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룹 행위자 이론은 신로마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에 입각하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페티트의 신로마 공화주의는 담론적 통제에 기반하여 있기에 타인의 간섭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간섭 하에 지배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비지배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 필연적인 담론적 통제가 존재하며 간섭은 있지만 지배는 없는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신로마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는 자유의 개념을 확립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 자유의 개

념을 철학적 논증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영역인 정치로까지 확장을 꾀하고자 한다.

페тит은 신로마 공화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인 견제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는 기존의 민주주의의 개념을 다섯 가지의 특징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첫째, 기존 민주주의는 도덕주의(moralism)적 성향이 나타난다. 페тит은 롤즈나 드워킨의 연역적 사고에 의해 도출된 정의론을 비판하고 있다. 롤즈는 순수한 절차로서의 원초적 입장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도덕적 가치관과 능력을 갖춘 대표들이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모여, 자신과 집단의 이해관계와 우연적 조건을 배제한 상태에서 분배원칙을 결정하는 최초의 계약상태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제시한다.³¹⁾

이와 같은 관점을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라고 하며,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가상 상황이며, 이는 경험적 우연성을 배제하여 만장일치의 합의를 가능케 하기 위한 가상적 상황이다(Ralws, 2003: 45-47). 이들은 철학적 사고에 의하여 개인들이 도덕적인 이타주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페тит은 이러한 롤즈의 가상에 의한 합의는 정의가 마치 이타적인 인간만이 가능한 합의로 상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롤즈의 정의론은 민주주의에 필요한 규범적 가치에 불과하지 민주주의를 발명한 이론이 아님을 역설한다(Pettit, 2017: 334).

둘째, 민주주의는 독단주의(deontologism)가 나타난다. 페тит은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서 시작된 정의론의 도출을 의무론적인 접근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연역적으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현실에 그

31) 무지의 베일이란 원초적 입장의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하는 사회에 대해 무지하다고 가정하여, 자신에게만 유리한 분배의 원칙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분배의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롤스는 상호 무관심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관심을 두어 자신의 위험 부담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한다(Ralws, 2003).

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데, 이는 현실에서 원칙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는 인과관계의 오류에 빠졌음을 지적한다(Pettit, 2017: 336-337).

신로마 공화주의는 반본질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의사결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더불어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를 추구한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체제를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인공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도 이전의 정치 철학과는 구분된다. 고대 정치 철학에서 추구하고자 한 보편적 지식의 추구는 단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진리의 추구하고 습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치공동체에서 삶을 효과적으로 영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개인의 형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Galston, 1989: 90).

셋째, 민주주의는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센과 롤즈는 완벽한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초월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롤즈의 정의론이 분배 정의에 관심 가졌다면, 센(Amartya Sen)은 역량(capability) 개념을 정의론을 보완하고자 한다. 센에 의하면, 정의론은 ‘윤리학’과 ‘공학’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학’으로서의 정의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반하여 경제학의 주제를 인간의 목적(telos)과 연결하고 있다. 한편, 센은 현재의 경제학이 합리적 선택 이론만을 맹신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너무 협소하게 합리적 선택 행위를 파악하였기에 그들이 계산하지 못했었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윤리적 성찰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센은 윤리적 성찰을 현대의 경제학에서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en, 1999: 23).

상기의 논의에 입각하여, 센은 자유 기반의 역량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역량이란 개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데 있어 기회의 평등이 구현되어야 함을 뜻한다. 센은 다음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행위자인 김(Kim)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A, 폭력배가 김의 집에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B, 폭력배가 김에게 집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C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A는 자유로운 상태이고 B는 자유가 훼손된 상태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C인데, 소극적 자유론에 의하면 C는 자유가 훼손된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센은 이러한 경우는 집에 머무를 기회가 있었지만 협박에 의한 것이기에 자유가 훼손되었다고 간주한다(Sen, 2019: 259-260). 이처럼, 센이 주장하는 역량이란 개인의 목표한 바를 실제적으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유와 물질적 평등 사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정의론은 센의 역량 이론과 궤를 같이한다(Pettit, 2019: 147-149). 그러나 페티트는 센의 역량에 입각한 정의론이 객관적 지표를 제공해주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다. 즉, 센은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가 실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역량을 제시할 수 없는 역설에 빠지고 만다. 즉, 칸트가 주장한 것처럼, 역량이라는 개념에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기에 공허한 주장이다(Pettit, 2017: 338).

넷째, 민주주의는 이상주의(utopianism)적 성향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롤즈와 센의 이론은 실현할 수 없는 추상적인 논의에 그친다. 따라서 페티트는 현실주의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상주의에 대한 경계는 자연스럽게 혼합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혼합정이 지닌 특징만이 이상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개인과 국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일 것이다(Pettit, 2017: 340-341).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선이라고 가정하는 선봉주의(vanguardism)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³²⁾ 이러한 선봉주의적인 민

주주의는 마치 이론이 교리화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치 이념이 신성시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국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에 기존과는 다르게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에게만 투표권을 준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사회는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불평등한 법을 제정하였지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하버마스가 추구한 민주주의는 평등한 민주적 통제 혹은 보편적 정당성 구축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견해는 롤즈가 제시한 이상적 정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들은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모든 논의를 합의할 수 있다는 상대주의의 문제점을 야기하였기 때문이다(Pettit, 2017: 342-343).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진리적 가치 유무에 대하여 집중하여 도덕주의, 연역주의, 초월주의, 이상주의, 선봉주의와 같은 잘못된 교리로 변질되었다. 모든 시민들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지만 일련의 합의가 영속적이지 않고 상호적인 측면을 지니며 합의를 위해서는 시민들끼리 지난한 투쟁을 거쳐 나오는 귀납주의적 성향을 지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페тит은 결과주의, 상호주의 등의 이론에 입각하여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페тит이 제시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토대로 하여 신로마 공화주의의 특징과 접목하여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시

32) 계급투쟁이 역사발전의 으뜸가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주된 교훈으로 삼는다. 정치투쟁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정당화 가능함. 레닌은 “계란을 깨지 않고서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고 하여 권력의 정점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의 역할은 노동자들을 선동, 조직, 교육하여 그들의 진정한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Ball and Dagger, 2007: 294-303).

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2) 새로운 민주주의 구축

기존의 민주주의는 본질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있기에 페팅이 지향하는 상호주의적이며 결과주의적인 반본질주의와는 구분되는 지점이었다. 따라서 페팅은 기존의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로서 견제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것이다. 페팅은 신로마 공화주의의 개념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접목시키고자 한다. 견제 민주주의는 비지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공간에서 시민과 국가는 대립되는 계급으로 이해, 마치 로마 시대의 귀족과 평민처럼 둘 간의 갈등의 정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우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공통된 특징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가치관이 동등하다.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어떻게 상정될 수 있을까. 우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자유’의 실현이라는 목적에서 서로 상응한다(Pocock, 1975: 197; 광준혁, 2004: 45-46).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그러나 민주주의는 만인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화주의는 만인의 지배를 주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 간에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지향점이 다르다. 기존 민주주의는 선거에 입각한 민주주의이다. 선거는 시민들에게

33) 신로마 공화주의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중시여기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자유, ②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자유, ③ 종교의 자유, ④ 모든 사람들과 자유롭게 연락할 자유, ⑤ 특정 상품을 소유하고 거래할 자유, ⑥ 직업과 고용의 자유, ⑦ 자유롭게 여행하고 정착할 자유(Pettit, 2012: 103).

절차적인 공정성에 입각하여 대리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선거 방법은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제한적이다. 페팅은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를 “정부 행위자들이 정기적으로 바뀌는 선거라는 도박을 시행함으로써 왕조적 통치를 방지한다는 매력 이 있다.” (Pettit, 2019: 223)고 하여 지배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지가 과도하여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이는 루소의 일반 의지와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민주주의에서 논의한 바와 비슷하다. 이들은 시민들의 의지를 너무 중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다수 시민의 선택이 꼭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보이지 않는 권력 및 강압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시민들의 의지를 확보해줄 수 있는 제도이나 이는 애로우의 역설, 당파적 이해관계, 로비 문제 때문에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Pettit, 2019: 204).

그러므로 공화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선거 제도와 신로마 공화주의의 견제를 모두 강조하는 ‘두 가지 측면의 모델(dual-aspect model of democracy)’에 입각한 견제 민주주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신로마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국가는 서로 간의 견제가 가능한 상황을 이상적인 모델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페팅은 두 번째 모델의 민주주의로 ‘이의제기능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두 가지 제도적 요건을 강조한다. 첫째, 개별적 권력 중추들을 포괄적인 법의 지배의 틀 안에서 조정하는 헌정체제가 있어야 한다. 둘째, 시민은 통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직에 출마하거나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정부의 행위를 감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가 수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인민들이 주장하는 규정과 맞지 않는 정책 및 제안에 대해서는 견제할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곽준혁, 2009b: 121).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같이 대표자를 선임하고 소극적인 참여에 그친다면, 공화주의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이 선거와 경연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선출된 대표자들의 임의적인 지배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투표로 동의를 이루어냈다고 해도 거부 혹은 견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페팅은 견제 민주주의의 특징을 ‘공동소유 모델’로 체계화하여 설명한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가 요구하는 일련의 제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공동소유 모델은 숙박 시설의 새로운 경영방식의 하나로 호텔을 객실 단위로 분양하여 구입자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중 관리 회사에 객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법을 일컫는다.

공동 소유 통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나타난다. 첫째, 공동으로 소유한 회원들은 아파트가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을 정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회원들 자신의 목적이 곧 모두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셋째, 회원들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동등하게 지닌다. 공동소유 모델은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 ① 회원들은 엘리베이터 정비, 공동 구역 관리 등에 노력해야 한다.
- ② 회원들은 개방성, 협의, 심의, 효율성 등의 기준으로 종합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 ③ 회원들은 단체 비용, 위원회 참여, 시민 의식 등과 같이 공동체와 관련된 의무가 존재한다.
- ④ 회원들은 세들어 사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집단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 평등해야 한다.

⑤ 회원들은 자신의 공간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꾸밀 권리가 있다.

⑥ 회원들은 홍수와 같은 특정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⑦ 공동으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존재한다.

⑧ 회원들은 선출된 위원회에게 위임된 권한을 부여해주며 합의된 결정에 언제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⑨ 회원들끼리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경우, 외부의 조언 및 감사를 통하여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Pettit, 2012: 424).

페티트의 공동 소유이론은 다음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공의 회원들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들이 계약한 장소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위원회(committee)는 간섭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법으로 제정되어 회원들에게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조항에 따라 적용하지만, 회원들이 위원회의 권리에 대해 이의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감시한다. 위원회와 회원들 간 이익이 상충하는 사안은 회원들이 독립적인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권력 남용을 차단한다. 감사를 통하여 법 조항 위반이 확인되면 위원회를 조정하고 징계할 수 있다.

토론에 참여하거나 의견 차이가 나타날 때, 회원들은 자신이 속한 이익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어떤 방안을 토론하거나 서로 의사소통할 때, 회원들은 적합한 방식으로 대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콘도의 회원들은 타협과 양보로 공동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수정할 것이다. 콘도 회원들은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공동체를 추구하기보다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콘도 회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콘도를 넘어서 국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공동소유 이론은 자신이 속한 거주

지역에서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문제들이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이는 공동체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Pettit, 2012: 438).

이러한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대항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견제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는 시민들의 삶에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간섭은 지배하지 않지만 통제는 가능한 상황으로 목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치적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자산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리하면, 신로마 공화주의는 상호주의, 결과주의에 입각한 반성적 행위자로 상정하였다. 즉, 개인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데 있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개인들의 동조현상과 현상유지편향과 같은 비대칭 상황을 제거하기 힘들다.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소극적인 참여에 그친다면, 신로마 공화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타락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사법 심사, 분리 대표, 견제와 균형의 방법으로 다수결주의의 쏠림 현상을 방지할 것으로 내다본다(김비환, 2016: 203).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견제 방법으로서 이의제기능력과 국가가 시민에게 견제하는 방법으로서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와 관계 회복적 정의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2. 지배에 대한 시민의 견제: 이의제기능력

1) 이의제기능력을 활용한 시민들의 참여

앞 절의 논의를 되짚어보면, 견제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국가는 선험적인 견제 없이 개인들 간 상호적 관계로 정치적 인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국가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 국가의 통제를 견제할 수 있는 쌍방향적인 견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내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데, 선출된 대표자들이 위임된 대리자가 수탁자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신로마 공화주의는 의사결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더불어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이 선거와 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선출된 대표자들의 임의적인 지배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투표로 동의를 이루어냈다고 해도 거부 혹은 견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Pettit, 2017: 336-337). 이에 따라, 시민은 대리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의제기능력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이의제기능력의 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의제기능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의제기능력에 입각한 의사결정 방식은 ‘협상 중심(bargain-based)’이 아니라 ‘토론 중심(debate-based)’이다. 토론 중심적 의사결정은 합의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담론윤리와 유사하게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논리적 타당성만 존재한다면 상호 간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신로마 공화주의는 담론윤리와는 다르게 초월적 규범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신로마 공화주의는 결과주의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추구한다(Honohan, 2002: 11). 공화주의는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공화주의는 의사결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더불어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결과주의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제도이다. 페티트는 이의제기능력의 저변에 ‘제한적 결과주의(restricted consequentialism)’가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① 이성적 판단으로 추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은 판례로 남아 있다.
- ② 예견하지 못한 비슷한 상황에서 과거의 판결이 그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
- ③ 따라서 그룹은 기존 판단과 특수한 상황에서의 판단 사이에 담론적 딜레마에 빠진다.
- ④ 판단이 일관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
- ⑤ 이에 따라, 공동체에서는 효과적인 촉진자(effective promoter)를 필요로 한다.
- ⑥ 공동체에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Pettit, 2001: 206).

신로마 공화주의는 개인과 타인 간의 관계에서 지배 없는 간섭 개념에 근거한 비지배 자유를 선보였다. 비지배 자유는 임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이론적 체계화하였다. 한편,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타인에 의하여 행위자의 선호가 바뀌는 현상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선택의 자유는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열려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 통제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협상적 행위자처럼 항상 최적의 결과를 내는 것을 담보하지 않아도 근거가 타당하다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울 것이다(Pettit, 1997a, 190). 그러므로 협상 중심에서 토론 중심적 의사결정론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의제기능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는 포용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의 슬로건은 항상 다른 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어야 한다.” (Skinner, 1996: 15-16)고 말한 것처럼, 시민들은 소수의 목소리에도 경청해야 한다(Pettit, 1997a: 354-355). 앞서 보았듯, 민주주의에서 동조현상과 현상유지편향성이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기보다는 행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당장은 실패일 수도 있으나 행위자 자유에 대한 존중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Maynor, 2003: 203-205).

예를 들어, 신로마 공화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는 국가 정책이 동성혼에 반대한다고 해도 성 소수자들의 신념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 소수자들의 집회나 결사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공적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가 항상 존재해야 하는 반응적(responsive)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Pettit, 1997a: 361). 갈등을 활용한 정치는 성숙된 시민들과 원활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생각, 갈등은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갈등에 대한 인식 없이 조화와 소통만을 내세운다면 심의와 토론은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과정에 머문다.

마키아벨리는 갈등적 정치야말로 기득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마키아벨리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면 필히 타락할 것이라고 예견하여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둘의 계층의 갈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을 견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시민이 국가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 시민은 어떤 정책에 대하여 선택과 교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Chung, 2003: 135-154). 페티트는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시민은 '공동 저자' 보다 공공 정책의 '편집자(editor)' 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의제기능력은 개인적 거부권이 아니다(Pettit, 1999 : 148). 만약,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거부권을 지닌다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과 같이 민주

주의는 중우정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정치를 담당하고 시민들은 이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승낙 여부로 그 능력을 한정한다.

마키아벨리가 로마 공화국을 존경한 이유는 계급 갈등이 사적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당파주의의 융성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적 이익 자체도 공공선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호민관 제도를 만들어 시민의 자유는 물론 국가의 위대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우수성은 계급 갈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갈등이 단순히 내부의 힘을 소진하지 않고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게 했다. 또한 집정관 및 정무관들로 대표되는 권력자들의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졌다. ‘심의회는 귀족, 의결은 평민’ 정책으로 귀족과 시민들과의 갈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섯째, 이의제기능력에 대한 정책적 특징이다. 이의제기능력은 국가 정책으로 확장되는데, ‘항소적 이의제기능력(appellate contestation)’의 특징에 해당한다. 국가 권력이 범죄 및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심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Pettit, 2001: 167-172). 이 중에서 이의제기능력은 ‘항소적 이의제기능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권력의 지배에 맞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³⁴⁾ 페тит은 견제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선보인다.

34) 페тит에 따르면, 이의제기능력에는 항소적 이의제기능력 외에도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우선, ‘절차적 이의제기능력(procedural contestation)’으로 정부의 권한에 제한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 분립, 심의 민주주의와 같은 제도들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절차적 반론권은 헌정주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이다(Pettit, 2001: 167-172). 다음으로, ‘자문적 이의제기능력(consultative contestation)’으로 정부 정책을 의회나 공청회 같은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담론윤리와 같은 방법에서 활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로마 공화주의는 항소적 이의제기능력이 가장 적합함을 논증하고 있다.

- ① 주장과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확립할 수 있다.
- ② 설득력 있는 판단을 위해서 다양한 주장에 대한 공론화를 공정한 기관에서 제공한다.
- ③ 이러한 기관에서의 판단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소수의견을 지닌 자들이 1~3항에 대해 불신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Pettit, 2001: 300).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정책은 기존의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심의 형태를 요구한다(Pettit 1999 : 295; Honohan, 2002 : 236).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공화국은 예외 없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범에 따라 상벌을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 이처럼, 신로마 공화주의에서의 시민은 공공선이 목표한 바가 정당하다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이 그들의 심의 과정이 절차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공정했다는 것에 만족한다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공공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Maynor, 2003: 156-157). 이러한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대항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견제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는 시민들의 삶에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간섭은 지배하지 않지만 통제는 가능한 상황으로 목표하기 때문이다.

2) 긍정적 저항권으로의 전환

기존 민주주의의 저항권 개념은 ‘시민불복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⁵⁾ 기존의 시민불복종주의자들은 법 자체도 문제가 있음을 인

35) 시민불복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정당성의 관점에서 시민불복종하는 경우이다. 소로(H. D. Thoreau)는 법은 정의와는 다른 것이며 정의는 인간의 양심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것이다(Thoreau, 2003:

정, 오류를 수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다, 시민불복종은 기본적으로 헌정주의를 기반하기에 국가에 대한 시민의 저항을 일종의 불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은 일정 부분의 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데, 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지닌다. 시민들의 권리와 부정의에 맞서기 위한 논리는 정당화 되지만 기본적으로 불법의 이미지가 강하기에 낙인효과처럼, 저항을 터부시하는 경우가 우려될 수 있다(손철성, 2010: 222). 즉, 시민불복종은 정당성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데 헌법이 정당하지 않아도 헌법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기존의 시민불복종의 개념이 아닌 갈등의 긍정으로서 불복종하는 저항권의 형태인 신로마 공화주의의 이의제기능력이 제시된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의제기능력은 시민들의 이익

13-14). 이에 따라, 소로는 자신의 불복종을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majority of one)’으로 표현, 사회에서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Thoreau, 2003: 30). 둘째, 법적 합당성에 대해 의문시하는 경우이다. 롤즈에게 시민불복종이란 “저항이 가해지는 조처들을 재고하게끔 촉구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 협동 체제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불복종자의 확고한 신념임을 경고하기 위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정당화”(Rawls, 1988: 201-202)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신념 및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개인들이 시민불복종해야 한다면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체포나 처벌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복종이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심과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도된 불복종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awls, 1988: 210). 셋째, 도덕적 정당성과 법적 합당성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이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한 시민불복종을 주장하고 있다. 담론윤리가 추구하는 상호 보편적 윤리란 모든 참여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Habermas, 1997a: 187-188). “의회 기구들에서의 협의라는 제도화 된 형태로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공론장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안에서 진행되는 협의 과정에서 보다 높은 단계의 간주체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Habermas, 2000 :289). 그러므로 도덕적 규범과 법의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불복종이 나타날 수 있다(Habermas, 2010: 399-400).

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선출된 대표자들로부터 임의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의제기능력을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가 된 시민은 정치인이 하는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행하는 정책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시민들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으로 이의제기능력을 제시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메이너는 이의제기능력을 의사결정 과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주제를 선정한다. 영국의 그린 페이퍼(Green Paper)가 이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그린 페이퍼란 1998년 3월에 복지 개혁을 위해 만든 제도이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식의 복지는 결국 국가가 시민들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되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유지할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로 합리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들의 대응이다. 앞서, 견제 민주주의에서의 시민은 모두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을 밝혔다. 견제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부는 시민들의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을 시민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정도에 근거해야 한다. 이의제기능력에서 강조하는 바는 시민이 권력자와 동등한 지위는 주어지지만 그 권한에서는 차이가 남을 강조한다. 즉, 시민은 편집자로서의 역할로 한정되며 그들이 행하는 정책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정된다.³⁶⁾ 이러한 이

36) 경기도 시흥시에서 2013년도에 시민 호민관 제도를 만들어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 호민관은 시민이 발의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시정 비리 감시, 시민들을 위한 민원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시민 호민관은 공무원 직위가 아니기에 견제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시민 호민관의 권한에는 자료 제출 요구권, 조치 결과 통보 요구권, 시정 권고 공표권 등이 있으며, 특히 집단 민원 조정, 중재권으로 시민과 공무원 사이의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김광모, 2013: 71).

의제기능력은 선출된 대리인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옴부즈만(Ombudsman), 감사원 같은 방법으로 대항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시민들에게 편집자로서의 반론권만을 주어지게 하는 것이다(Pettit, 1999: 295). 이를테면,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내용이 도출되더라도 절차적 공정성과 합의에 근거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신에 시민은 실질적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을 시행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Pettit, 2012: 177). 따라서 의제기능력은 아무 때나 시민들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은 투표로 대표 선출, 공익 단체나 시민 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 언론을 통한 국가 권력 견제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 있다.

세 번째 단계로 이해 당사자들이 제안된 정책을 공개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검토 기간을 허용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탈원전 공론화나 공청회가 대표적 사례이다.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견제 민주주의는 갈등 상황을 독려하면 사회가 분열될 우려보다 기존의 관행과 규범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숙고할 수 있는 측면이 중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갈등을 독려하는 교육은 사회를 분열로 이끌 수 있지만 기존의 관행과 규범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과 숙려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소위, 신로마 공화주의적 교육에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사회를 더 건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메이너는 이에 대한 사례로 미국의 동성혼이 불법으로 간주, 사회적으로 승인받지 못함으로써 건강보험, 세제혜택 등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일례로 든다. 동성혼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각자가 추구하는 입장에서 활발한 토론을 하여 시민 자신의 이익을 추적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Maynor, 2003: 193-194).

네 번째 단계로 국가와 시민들에 의하여 합의된 정책이 본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합의한 정책을 시민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혹은 정책 시행에 따른 예견치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로 참여를 강화하려는 방법으로 ‘의무 투표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의무 투표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제도이지만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Maynor, 2003: 158-159). 이를 통하여, 견제 민주주의의 시민은 공정한 절차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합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가정하지 않으며 합의된 결정 역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

메이너가 제시한 이의제기능력의 중 3-4 단계가 도덕과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하여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로마 공화주의에 근거한 심의는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토론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어야 하기에 시민단체와 같은 결사 행위, 대중 집회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치영역에 참여할 것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견제 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이의제기능력은 시민불복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의제기능력은 시민들이 사안마다 들고 일어나는 ‘떼 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의제기능력은 불편부당한 판단내릴 수 있는 공정한 관망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셈이다(Pettit, 1997a: 296). 그러므로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견제 민주주의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방법과 수단의 제도적 마련을 중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의제기능력은 시민들의 최후 항거 수단이다.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정책은 기존의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심의 형태를 요구한다(Pettit 1999, 295; Honohan, 2002: 236). 예를 들어, 소비자 문제, 근로 조건, 여성의 권리, 환경 지속 가능성, 인종 평등, 장애인의 기회, 수감자의 권리, 동성애자 권리, 보건 및 공공 교육 등을 다루는 전문 단체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Pettit, 2011: 372). 이처럼, 견제 민주주의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이의제기능력은 기존 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제 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이의제기능력은 능동적인 저항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배에 대한 국가의 견제: 관계 회복적 정의

1) 공화주의적 정의 정립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는 자유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표가 동일하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자유 개념이 개인의 이상적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정의로 나아가길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국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국가는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며, 정의를 구현하는 국가가 현재 사회에서 추구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롤즈는 정의론과 관련한 대표적인 학자로 그의 정의론은 완전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 당사자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되는 정도의 불평등은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 분배를 전제로 한 차등분배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이의 원칙으로 도출되며, 전자가 후자에 우선하고 있다. 차이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이익이라는 좁은 의미의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포함

하고 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회의 협동 체제 내에서라야만 자질의 발휘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벌어들인 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Ralws, 2003: 45-46).

한편, 롤즈는 분배적 정의에 관심 가질 뿐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는 사회적 정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화주의적 정의는 ‘사회기반(infrastucture)’을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평등한 자유는 물질적 평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만약 부자인 사람이 권력층과는 연줄로 더 큰 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는 불평등한 사회로 간주할 수 있다(Pettit, 2019: 149). 따라서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정의는 모든 시민들이 최소한의 물질적 평등을 지닐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경제적 영역에 종속되지 않고 살 수 있을만한 경제적 여건은 국가에서 마련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 평등은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공화주의에서의 시민은 물질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정치 및 존엄성의 불평등을 경계하는 것이다. 페티트는 밀턴(John Milton)의 말을 빌려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들조차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과 수수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걸으며, 공손함을 표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고 친근하게 친구같이 말을 건넌 수 있다.” (Pettit, 2019: 121)고 하여 공화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동시에 타인의 인격과 사고를 존중해주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화주의적 정의는 모든 시민들에게 경제, 문화, 교육의 기회에 있어 ‘보험(insurance)’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를 제공해야 하며, 최소한의 공공재(common good)와 빈곤에 대하여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만약, 빈곤한 시민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비지배 자유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로 간주한다. 또한, 시민들 사이에서 학연·지연·직업·소득 따위의 조건 등에 의하여 특정 계급이 형성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보험은 박애주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박애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부’가 있다. 기부는 그 자체로 숭고한 방법이기도 하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에 입각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상정하는 자유는 재산의 소유이다. 개인의 재산권 소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Nozick, 2000: 54-55).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획득된 개인의 재산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권리 역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소유가 많은 개인이 가지지 못한 개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 역시 자유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상기의 논의에 따르면, 기부는 부자인 자가 가난한 자에게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 및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을 도와주는 것은 이들의 자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종속적인 지배를 가지고 올 것이다(Pettit, 2019: 156). 오히려, 소외계층들은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국가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화주의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지배 자유가 근간이 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들 사에서도 동등한 관계일 때만이 구현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눈싸움(eyeball test)’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페티에 의하면, “눈싸움은 시민들이 소심하거나 비겁함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시에도 여전히 지니고 있어야 하는 필연적인 조건이다.” (Pettit, 2012: 86) 고 하며 눈싸움을 기본적인 자유의 조건과 동등하게 간주한다. 개인은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를 제공받으면서도 국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즉,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사회적, 법적, 의료적 혜택을 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를 시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도로 인하여 개인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계층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국가가 소외계층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순간 빈곤을 자신의 탓으로 여겨 주눅들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행위자는 정치적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갈 권리가 있다. 만약, 당신이 다쳐 투표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의지에 의하여 못가는 것이어야 하지 타인의 간섭 및 외부적 제약에 의하여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자유가 훼손된 것으로 간주한다(Pettit, 2019: 91-106).

또 다른 사례로, 공공건물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경사로를 만드는 게 이에 해당한다(Pettit, 2013: 107-110). 이처럼, 눈싸움은 각 개인이 국가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기에 알게 모르게 간섭 및 지배받고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시민이 국가 복지의 시혜를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님을 일깨움으로써 시민들의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입각하여, 신로마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정의란 ‘정치적 합법성(political legitimacy)’을 뜻한다. 정치적 합법성이란 국가가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Pettit, 2012: 78). 그리고 공화주의에서 다루는 평등은 동등한 노동에 대한 임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그룹 행위자의 이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가 부과하는 법이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공화주의적 평등은 삶의 가치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치에서는 일원론적인 가치를 지향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곽준혁, 2009b: 123).

2) 관계 회복적 정의를 통한 공공선 추구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공공선을 위해서 간섭받을 여지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간섭은 있지만 지배가 없는 ‘온전한 민주적 통제(full democratic control)’를 추구하고 있다. 비지배 자유는 지배 없는 간섭을 추구하기에 국가의 간섭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가 지배 혹은 간섭인지 여부를 가리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국가는 합의에 입각한 개입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묵시적 동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부 역시 과거 정보가 완전치 못하여 미래에 대한 판단의 오류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국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국가는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며, 정의를 구현하는 국가가 현재 사회에서 추구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정의론이 구성되어야 하는가. 공화주의자들은 롤즈의 정의론이 ‘정의의 환경’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그가 추구한 정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Bellamy, 2007: 19, 141).

정의의 환경이란 법에 따라 심판하는 사람 역시 정치적 환경에 노출되어 외부 조건에 영향 받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의 지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 판결하는 판사가 ‘공정한 관망자’일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의 지배는 다수의 동의에 기대는 것이 더 안전하다.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환경’이 필요하다. 정치의 환경이란 법에 따라 심판하는 사람 역시 정치적 환경에 노출되어 외부 조건에 영향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페티트는 정치의 환경을 구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시민이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인 ‘시민적 교양’을 제시한다. 시민적 교양은 시민들이 공화국의 역사와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이 지배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재(sanction)’와 ‘선별(screen)’을 주장한다(Pettit, 2012: 390-391). 제재는 지배자가 법에 따라 규정된 규칙을 어겼을 시에 처벌하는 방법을 말한다면, 선별은 규칙들을 추가 혹은 배제하여 기회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페티트는 선별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공화주의적 시민은 어떠한 도덕적 가치에 대하여 시비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에서 시민들을 제재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선에 대하여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Pettit, 2012: 440-448).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적 교양은 일탈자 중심 제재가 아닌 순응자 중심 제재로 그 의미를 전환하고 있다.

상기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페티트는 브레이스웨이트의 개념을 차용하여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국가의 정의관을 ‘관계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다. 관계 회복적 정의는 특수 예방주의를 표방한다. 일반 예방주의는 사형은 강력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계급과 관련 없이 평등한 법의 집행을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반면에 특수 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를 교육하거나 계도하여 공동체에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강조한 이론이다. 특수 예방주의와 관계 회복적 정의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일탈자 중심 전략과 순응자 중심 전략 중에서 후자를 강조하고 있다. 일탈자 중심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밝은 협상적 행위자의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로 배신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반면에 순응자 중심 전략은 이미 약속한 내용에 순응했을 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제공하기에 일탈자 중심보다 배신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표 13>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비교(이보영, 2015: 62)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유죄 확정 중심	문제 해결 중심
과거에 초점	미래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는 이차적	당사자의 요구가 일차적
경쟁적 개인주의 모델 당사자 주의	상호성과 대화를 통한 협의 해결
죄 값은 처벌을 통해 갚아짐	죄의 대가는 바르게 회복함으로 갚아짐
가해자 초점, 피해자 무시	피해자 요구 중심
국가와 가해자가 주요 당사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핵심 당사자
피해자는 정보 결여	피해자의 정보제공
손해배상 결여	손해배상 일방적
피해자의 고통 표현 제한적	피해자의 고통 인식, 슬픔을 나눔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조치 중심	당사자 모두가 해결할 책임 있음
가해자의 책임회피 조장	가해자의 책임 있는 행동 요구
개인적 감정은 부차적 요소	슬픔 등 감정 표현 및 인식 권장
공동체에 대한 가해자의 결속 약화	가해자의 공동체 통합 강화
가해자를 단면적으로 인식	가해자를 전체적 맥락에서 인식
올바른 규칙으로서 정의	올바른 관계로서 정의
반성과 용서가 권장되지 않음	반성과 용서 장려
전문 대리인이 핵심적 역할	당사자 중심, 전문가의 도움 제공

위의 표에 나타난 바처럼,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방법은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죄값에 따른 처벌에 분노하고 억울해 할 것이다. 이러한 처벌은 개인들에게 의무와 요구를 강조하는 일종의 엄벌주의에 해당할 것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처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 자체를 비난하거나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결국에는 처벌이 중심인 응보주의는 피해자의 행동을 교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만 키우게 만든다. 이처럼, 처벌 중심의 응보주의는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며, 건강한 공동체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Braithwaite and Pettit, 1993: 5).

상기의 논의에 입각하여, 공화주의적 형법 이론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 절감성(parsimony)이다. 페тит과 브레이스웨트는 형법 이론에 있어 응보주의보다 결과주의가 더 나은 이유는 ‘단순성(simplicity)’ 관점에서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응보주의는 ‘포괄적 이론’에 근거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Braithwaite and Pettit, 1993: 37-39). 만약, 응보주의적 방식으로 처벌하면 ‘도구적 합리성’에 입각한 형법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아닌 임기응변으로 처리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과주의에 입각한 관계 회복적 정의는 응보주의보다 나은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페тит과 브레이스웨이트가 주장하는 관계 회복적 정의는 시민들은 보통 범죄자가 아니며 오히려 공공질서를 준수하는 행위자이기에 이들에 대해서는 법보다는 시민교육으로 다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특수적 예방주의와 비슷하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하여 시민들 간의 관계 회복에 그 중심을 둔다. 공화주의에서 형벌은 죄값을 치르게 하는(pay-back) 응보주의가 아닌 죄값을 갚는 데(pay-up) 더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Pettit, 2014a: 72).

둘째, 관계 회복적 정의는 권력의 견제(checking of power) 역할이 가능하다. 신로마 공화주의 형법 이론은 비지배 자유에 입각한 자기 통치를 중시하고 있다. 신로마 공화주의적 시민은 스스로 통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지배받는 것이 가능하다(Braithwaite and Pettit, 1990: 60). 즉, 공화주의에서의 시민은 자기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행하는 사법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게 된다. 사법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지배적 통제를 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법을 행사하는 권력은 항상 견제되어야 하며 이들이 편견이나 변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

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등이 있다. 이에 관계 회복적 정의는 사법부 권력 남용을 항소와 이의 신청 방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Braithwaite and Pettit, 1993: 87-88).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신체적 폭력,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법원으로 보내지지 않는 사회에서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로마 공화주의는 이러한 화이트칼라 및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Braithwaite and Pettit, 1993: 20).

셋째, 관계 회복적 정의는 비난(reprobation)의 성격을 중시 여긴다.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신체에 대한 물리적 처벌만을 고려하였다. 반면에 관계 회복적 정의는 범죄적 수치심을 느끼게끔 강조하는데, 공화주의적 형법 제도 아래서 범죄는 부끄러운 행동이기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동기부여가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행위로 상정되기에 범죄행위자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Braithwaite and Pettit, 1993: 89-91).

이와 같이, 관계 회복적 정의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온정주의이다(Braithwaite and Pettit, 1993: 43-46). 이러한 근거에 따라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관계 회복적 정의는 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사법 절차에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을 권리에 초점 맞춘다. 그리고 형사법 체계는 시민들 판단에 위배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사법 제도의 목적은 범죄 예방인데,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넷째, 공동체의 복원(reintegration)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관계 회복적 정의는 시민들이 자신이 책임질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 회복적 정의는 법과 정의가 적극적이고 이해 당사자들이 만남으로써 책임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Braithwaite, 2007: 178).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존중받지 못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보상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보상과 더불어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과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같은 방법도 수반되어야 한다(Braithwaite and Pettit, 1993: 91-93).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이 2등 시민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범죄자들은 평생 낙인찍혀 살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거(Richard Dagger)는 페팅과 브레이스웨이트의 공화주의적 형법이 이론적으로는 의의가 있으나 개념적 정의가 불명확하고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한다(Laborde and Maynor, 2009: 316-317). 하지만 페팅과 브레이스웨이트는 공화주의적 형법으로 세밀하게 제시해 준다.³⁷⁾ 상

37) 앞서, 보았던 포괄적 이론의 10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페팅과 브레이스웨이트는 공화주의적 사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첫째, 범죄로 구분되는 종류와 행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에 대한 답변으로 불쾌한 공격 범죄(crimmes of offence), 합의에 의한 범죄(consensual crimes), 무과실 책임 범죄(strict liability crimes) 등을 든다. 둘째, 어떤 유형의 처벌이 허용되고 금지되어야 하는가? 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 판결 선례는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가? 에 대한 답변으로 모든 유형의 범죄에 규정할 수 있는 최대 양형이 확실히 존재해야 하고 있다. 셋째, 형사 사법 체계는 정부로부터 얼마만큼의 예산을 받아야 하는가? 경찰은 순찰하는 것과 훈련하는 것 중 어느 곳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범죄의 심각성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 사법 체계가 사회에 엄격하게 되지 않을 정도만큼의 예산은 필요하다. 넷째, 어떤 종류의 감시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무작위 순찰 활동은 비생산적이다.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라이스(Reiss)가 제시한 순응과 억지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교통사고 및 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교차로에서 교통 위반 딱지 대신에 교차로에 대한 깊이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소, 보석, 면제와 같이 재판 이전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범죄 수사의 타깃이 되어야 하고 있다. 여섯째, 어떤 사건을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가? 공화주의적 형법 제도는 불기소를 기본 입장으로 삼는다. 일곱째, 플리바게닝, 사전 심사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감의 원칙에 따라서 석방에 찬성할 것이다. 여덟째, 판결하기 위한 판단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차 자체가 처벌 효과를 지닌다. 경범죄 같은 경우 약식 재판으로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단순히 정확한

기의 논의에 근거하여 견제 민주주의에서의 관계 회복적 정의는 사회에 대한 권한이 시민에게 이양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Braithwaite, 2003: 5).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신로마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견제 민주주의는 이러한 신로마 공화주의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의의가 있다. 현실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소수자의 지배 및 시민들의 군중심리로 인한 중우 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시민이 국가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 이의제기능력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가 시민의 중우 정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정주의와 관계 회복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민과 국가 간의 쌍방향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갈등의 정치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판결만이 아니라 비난과 복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고 있다. 아홉째, 유죄로 판단되는 범죄인에게 어떤 형량을 부여할 것인가? 처벌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제한적이어야 하고 있다. 개인은 항상 사회에 복귀해야 하는 존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그 경우가 다르다. 열째, 감옥, 보호 관찰, 가석방에의 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가? 교도소에서 좋은 행실로 인한 조기 석방은 기본적으로 합당한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기에 공화주의는 이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다. 공화주의는 피해자들 역시 사회구성원이기에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고 감옥에서 내보내야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외출 및 휴가를 제시한다(Braithwaite and Pettit, 1993: 94-136).

VI. 견제 민주주의를 반영한 시민교육의 과제

본 장에서는 견제 민주주의의 민주시민교육 적용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우선, 도덕과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교육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교과서 분석과 견제 민주주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새로운 정치개념인 견제 민주주의가 기존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3절에서는 이의제기능력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선보이고 이를 활용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모색할 것이다.

1. 도덕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1) 도덕과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변천 과정

도덕과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형태로서의 교육 과정의 시기이다. 도덕과 교육은 1894년도 갑오개혁 당시 『수신』 과목에서 출발하여 광복 이후에 공민 또는 윤리 교과로 분류되었다. 이 시기에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문교부는 51년에 ‘도의 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도덕 교육을 강조하였다. 55년에 실시된 제 1차 교육 과정에서는 자기실현, 인간관계, 경제 및 직업, 공민, 반공정신으로 나누어 가르쳤었다. 63년에 실시된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여 민족중흥과 새로운 역사 창조의 사명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하였다.³⁸⁾

38)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굴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

특히, 이 시기부터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교육이 확립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74년부터 제 3차 교육 과정기로 볼 수 있으며 79년에는 『국민 윤리』가 단독 교과서로 출판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 과정은 처음으로 통일교육이 포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민 윤리에서 배우는 교육 목표는 민족의 긍지, 조국애, 통일, 반공 등과 같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가르쳤다. 88년의 제 5차 교육 과정까지는 제 3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큰 틀은 유지하였다. 특히, 서구의 냉전시대 종식으로 인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통일 교육의 당위성에 치중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도덕과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 교화와 동일시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 때문에, 정치와 교육을 관련지어 논의하거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기시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져 온 측면이 없지 않다.” (홍용희, 1995: 290)고 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사용한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과거 군사정권의 이데올로기 홍보로 사용된 전력이 있기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제 6차 교육과정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윤리교과의 정체성을 키우고자 노력하였는

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국민교육헌장』

데, 이념 문제를 벗어나 윤리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다학문적 접근인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 방법을 취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통합적 성격을 지닌 교과 교육학으로서 『국민 윤리』에서 『윤리』 교과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생활영역확대법을 선보이며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생활환경이 확대되는 범위에 따라 개인< 가정·이웃·학교< 사회< 국가로 나아가는 특징을 지니는 교육 방법이다. 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공산주의 체제 비판에 중요성이 퇴색되고 통일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로 교육의 중점 내용으로 변모하였다(교육부, 1994: 22-23).

<표 14>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의 영역 변천사(교육부, 1994: 35)

제 3차 교육과정	제 4차 교육과정	제 5차 교육과정	제 6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자각 · 우리 겨레의 윤리 생활 · 현대 사회와 국민적 자질 · 국가 발전과 국제 생활 ·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윤리 · 우리 겨레의 사상 · 현대 사회와 윤리 · 국가 생활과 윤리 · 조국 수호와 평화 통일 · 문화와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윤리 ·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 · 사회와 윤리 · 국가와 윤리 · 조국의 통일과 번영 · 민주주의 이념과 현대 이데올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윤리 · 사회와 윤리 · 국가와 윤리 · 통일의 과제와 전망 ·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도덕과에서 생활 영역별 주요 가치 덕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생활 영역,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 사회생활 영역, 국가·민족 생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5개의 가치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민주시민교육은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의 영역에서 내용 영역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5> 2007, 2011, 2015 교육과정 내용 요소 민주시민교육 관련 비교

영역	핵심가치	2007 교육과정	2011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타인과의 관계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생활과 도덕 친구와 우정의 의미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이버 예절 청소년기의 비인간화 문제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이성교제와 성도덕 인간존엄성과 소수자 보호 양성평등의 도덕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생활과 도덕 친구관계와 도덕 사이버 윤리와 예절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협동 타인 존중의 태도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청소년 문화와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된 우정이란 무엇인가? 성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웃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평화적 갈등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국가 발전과 나라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북한주민과 민족애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 존엄성과 인권 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바람직한 통일 모습 사회정의와 도덕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국가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세계화시대의 우리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계 시민으로서 도덕적 과제는 무엇인가?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방법에서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7, 2011, 2015 교육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내용 요소는 체계화에 실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상기의 교육과정은 내용 요소의 순서에서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타인과의 관계 중 ‘사이버 윤리’와 관련해서 2007 교육과정에서는 네 번째 순서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2011 교육과정은 세 번째에 위치해 있으며, 2015 교육과정에서는 다섯 번째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2007 ‘국가 발전과 나’ 관련하여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2011 교육과정에서는 여섯 번째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에서는 다섯 번째에 배치되어 있다.

둘째, 개념의 혼란이 나타난다. 다문화와 관련한 개념이 대표적인데, 2007 교육과정에서는 ‘타문화’로, 2011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으로, 2015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사회’로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적 관점이 부족하다. 특히, 세계화 개념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된다. 2007 교육과정에서는 ‘평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2011 교육과정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중점을 둔다. 반면에 2015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관심 가진다. 이와 같이, 세계화 개념에서 평화, 시대, 시민이라는 개념의 남발 현상이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영역에 대한 혼란이 나타난다. 인권 개념이 대표적인데, 2007 교육과정에서 인권 개념은 ‘타인과의 관계’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2011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 포함되어 있다. 성윤리와 관련해서 2007 교육과정에는 ‘이성교제와 성도덕’, ‘양성평등의 도덕적 의미’ 등의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2011 교육과정에서는 성윤리와 관련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한편, 2015 교육과정에서는 ‘성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로 다시금 강조되고 있어 교육과정에 의해서 강조 유무가 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요소 순서 배치의 혼란함은 도덕

과의 이론적 체계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 7차 교육과정이나 2007·2009·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영역 내용을 검토해볼 때, 반공교육에서 인권, 다문화, 정보, 세계시민 윤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환되긴 했으나 일관적인 논리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도덕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피상적인 내용에 그쳐 교육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주어야 한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참여하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민주시민교육 방법에 관한 논쟁

지금까지 제 7차 교육과정이나 2007·2009·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영역 내용을 검토해볼 때, 이론적 틀이나 일관적인 논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접근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은 여타의 과목보다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연계성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피상적인 내용에 그쳐 교육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배한동, 2006: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과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수동적인 시민에서 벗어나고 능동적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고자, 『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하여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교육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와 사회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면,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기관의 자발적인 교육이며, 민주적 참여의 기능과 시민적 성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체제 유지 자체를 위한 맹목적인 정치적 교화와는 다르다(배한동, 2006: 31-32).

민주시민교육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주어야 한다. 게다가, 학생들의 시민 교육을 성립하는 데 있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토론에 대한 참여를 단지 학습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학습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주시민을 위한 내용에 있어서도 원론적 서술에 그쳐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비판적 사고와 같은 민주주의를 익힐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배한동, 2006: 68).

이와 같이, 도덕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민주적 방법과 의사결정 그 자체를 경험하게끔 해야 한다. 본연구자는 이와 같은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이론으로 공화주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피터슨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공화주의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크릭(Bernard Crick)의 ‘크릭 보고서(Crick’s Report)’가 공화주의와 접목되어 시민들의 사회적 책임, 지역 사회참여, 정치적 문해력 등의 주제를 토대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 모델을 구축했다.

크릭(Bernard Crick)은 민주주의를 원칙, 제도, 정신 등으로 설명하였다. 크릭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주의 개념으로써 개인의 자유, 인권, 경제적 진보,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개인은 어떠한 강압과 간섭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법안에서 질서를 지킨다면 최대한의 자유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Crick, 2002: 16).

두 번째 방법은 제도적 장치로서의 민주주의이다. 시민은 어떠한 형태의 민주주의이건 간에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의미하는 데,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 참정권은 시민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준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법에 의한 지배인 헌정주의를 제시할 수 있다. 법의 지배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시민들을 간섭 및 제약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에 가깝다. 소수의 권력자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어느 한 집단에 부여하지 않고 다수의 시민 혹은 집단에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 분립 정책이 필수적인데 입법, 사법, 행정부의 분립과 같은 헌정주의가 이에 해당하고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행동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국가가 개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제도이기보다는 개인과 국가 모두 민주적인 태도를 지니는 시민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 완비된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길러주어야 하고 있다. 크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활동적 시민’을 기르는데 있다. 크릭 보고서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도출된 교육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크릭 보고서에 근거하여 영국에서의 시민교육 학습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6> 영국 학교 시민교육 학습방안 내용(김원태, 2006: 315 재구성)

학년	단원	단원명	비고
7	1	시민교육(학교, 토론규칙, 지역사회, 내가 자라면?)	

학년	단원	단원명	비고
7-9	2	범죄	시민교육과 다른 과목과 연계되는 단원
	3	인권	
	4	다양성	
	5	법에서 동물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6	정부, 선거와 투표	
	7	지역 민주주의	
	8	지역 사회의 여가와 스포츠	
	9	대중매체의 중요성	
	10	시민교육과 지리	다른 과목과 함께 실시되거나 별도 시민교육으로 다룰 수 있는 단원
	11	시민교육과 역사: 세계평화	
	12	시민교육과 역사: 투표권을 얻기 위한 중요성	
	13	시민교육과 종교교육: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	
	14	민주적 참여의 실제 발전(토론, 의사결정)	수업 외 일정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단원
	15	범죄와 안전에 대한 인식	
	16	인권의 개념(실제 활동)	
	17	학교 연계	
	18	우리 학교의 기반 강화	
9	19	평가단원	
7-9	20	공공선이란 무엇인가?	시민교육과 과학의 연계 학습단원
	21	사람과 환경	

상기의 표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릭 보고서에 입각한 영국의 시민교육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교육이 단순히 학교 내에서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어 ‘사회 참여 (community involvement)’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참여적 교육은 권리 중심의 자유주의적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Peterson, 2011: 121). 이를 통하여, 학생

들은 지역 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민교육과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교육의 지리, 역사, 종교 과목과 접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선과 환경에 대한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을 나누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단순히 시민교육의 그 자체의 내용에 그치지 않고 타 교과와의 연계를 통하여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식, 기술, 가치의 내용을 배우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정치적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가장 최적의 교육방법은 대화이다. 대화는 일종의 수사학이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방법을 기를 수 있게 해주며, 대화를 통하여 타인의 주장을 경청할 수도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타인과의 말하기와 청취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시민교육에서 큰 함의를 가지고 올 것이다.

셋째, 토론 및 의사결정을 학생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연습할 수 있다. 이는 크릭 보고서에서 강조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구의 시민교육에서도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QCA, 1998; Crick, 2002; Annette, 2003).

그리고 크릭 보고서에 입각한 시민교육은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기 보다는 능력 함양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특정한 결과를 야기하는 암묵적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토론을 통한 비판적 추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토론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비지배 자유에 입각하여 서로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듦으로써 수업 및 학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크릭은 “나는 자

유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좋은 시민’ 과 ‘법의 지배’ 보다는 공화주의의 주장이 훨씬 타당함을 깨달았다.” (Crick, 2002: 114)고 하여 공화주의가 시민교육의 목적과 성격에 대하여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크릭 보고서는 민주주의 정신을 길러줄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그렇기에 크릭 보고서는 학생들의 ‘알’ 권리에 관심 가진다. 다시 말하면, 크릭 보고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는 방법에 가깝다. 상기의 논의한 대로 크릭 보고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근거이자 지향하는 바가 다른 민주시민교육적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2. 도덕과교육에서 견제 민주주의의 적용 모색

1) 민주시민의 근거로서 공화주의적 시민성

지금까지 논의를 통하여, 도덕과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익혀야 하는 교과로 이해하였다. 그렇다면, 도덕과의 민주시민교육에서 상정해야 할 시민성은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자는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을 주장하고자 한다.

공화주의적 시민성이 민주시민교육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기존 민주시민교육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교육이었다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을 기르는데 주력한다. 견제 민주주의는 관습적 가치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유럽 위원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규범을 전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응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본질이다.” (Peterson, 2009: 66)고 정의한 것처럼,

도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적 체계에 대하여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민주적 방법과 의사결정 그 자체를 경험하게끔 도와주는 과목인 것이다.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심의 형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민주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진정한 학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둘째,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입각한 교실은 소통이 되는 공간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의사전달이 가능해야 하는데 ‘대화’가 대표적인 소통 수단이다. 대화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훌륭한 교육적 방법이다.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방법이 권장된다. 시민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상정된다(심정보, 2014: 362-365).

암기 및 주입식 교수법은 학습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학습 욕구를 억누르게 되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을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된다. 배움은 학습자의 본능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욕구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민주주의 내에서의 논쟁은 시민 교육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의 덕목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이 역동적이고 동기유발을 줌으로써 도덕과의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국가에서도 이를 중시 여겨 ‘민주적 의사소통’을 배우는 것이 시민 교육의 중심 목적으로 삼고 있다(Englund, 2006: 503). 이러한 측면에서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자기 지배가 실현되는 공동체에서 다양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 사이의 연대성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타인의 의견에 대하여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다. 자유주의 교육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는 논리만을 내세우는 데 그치는 반면에 공화주의적 교육은 다른 시민들의 견해나 처지를 이해하는 공감을 강조한다(Peterson, 2009: 62). 이와 같은 시민적 덕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성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에서는 관용과 배려의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방법이 권장된다. 시민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통해서 시민들은 창의성, 비판적 사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등과 같은 문제해결과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교실 공동체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유의미하다. 일탈자 중심에서 순응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관계 회복적 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견제 민주주의는 내용적 측면만 아니라 수업 구성 부분으로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관계 회복적 정의에 입각하여 권리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콜버그의 ‘정의 공동체(just community)’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였다. 도덕교육이란 도덕적 덕목을 집단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것과 도덕추론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콜버그는 교육의 단위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집단임을 알게 되었고 개인의 도덕추론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도덕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콜버그는 도덕을 행위규칙을 내면화는 물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을 적용하는 규칙과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였다(심성보, 2014: 125). 콜버그는 정의 공동체 이론의 이상적 공동체는 각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타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타인을 이해하려 하는 것, 협동적인 방식의 도덕적 의사소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로마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공동체

의 성질과 흡사하다. 특히, 콜버그는 학교를 ‘작은 공화국’으로 규정하여 정의와 사랑의 원리가 중심을 이루는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추병완, 2018: 35-36).

반면에, 신로마 공화주의는 콜버그의 정의 공동체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감정’에 대한 가르침을 중시 여겼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민주시민 교육에서 관계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끄러움에 대한 교육’을 들 수 있다. 인간의 본성과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키아벨리는 ‘우모리(umori)’ 개념을 활용한다. 우모리란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감정적 기질로써 누군가에게 지배받지 않으려는 욕망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우모리는 개인적 감정을 뜻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에서 지니는 고유한 감정을 뜻하기도 한다(신철희, 2016: 145). 이는 도덕적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마키아벨리의 ‘좋은 관습(buoni costumi)’의 체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교육 이념과 목적에 따라 학생 스스로가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여 능동적인 자율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공화주의 분석 및 적용

이번 절에서는 현재 도덕 교과에서 공화주의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할 것이다.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화주의는 고등학교 교과서인 『윤리와 사상』에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다. 2009, 2012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계’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대립하여 이해한 반면, 2015 교육과정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박성근, 2018: 148). 공화주의는 사회사상 중 『윤리와 사상』 성취기준에 나타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7> 2015 『윤리와 사상』 성취기준

단원	성취기준
[12윤사04-01]	동·서양의 이상사회론들을 비교하여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12윤사04-04]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12윤사04-06]	동·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원칙 및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성취기준에서 공화주의는 [12윤사04-03]에서만 명시되어 있지만 2015 교육과정은 과거에 비하여 공화주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현상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구분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공화주의 내에서 시민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화주의의 중첩성 문제는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시민과 시민의 덕

- 시민의 자유와 시민성에 관한 주요 사상들(자연권 사상, 공화주의 등)을 기술하고 있다.
-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공동선, 법치, 관용에 관한 주장과 정당화 논변을 기술하고 있다.

- 애국심에 관하여 공화주의의 대승적·자발적 사랑, 자유주의의 헌법 애국주의, 민족주의의 애국심 등을 비교하여 기술하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주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서 공동체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관과 맞닿아 있다. 공화주의를 공동선, 법치, 관용으로 주장한 것은 신로마 공화주의의 특징을 간과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즉, 교과서에서 반영되어 있는 공화주의는 ‘시민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에서 주장하는 공동선의 관점만 부각하고 있는 셈이다(신종섭, 2019).

앞서, 본 연구자는 시민 공화주의와의 길항 관계 분석으로 신로마 공화주의의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둘의 관계는 공공선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거나 이를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남을 논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시민 공화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상정해야 하며, 공화주의 내에서 시민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의 구분을 주장하는 것이다.

신로마 공화주의의 특징은 도덕과 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신로마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하여 학습하는 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만 초점을 맞춘다. 소극적 자유는 사회정의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이론이다. 또한 적극적 자유 역시 전체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하여, 신로마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는 전체주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동시에 사회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신로마 공화주의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서 기존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두 번째, 신로마 공화주의는 시민불복종 대신 이의제기능력으로 새로운 시민성을 제시할 수 있다. 견제 민주주의는 거부권을 중시

여기기 때문이다.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거부권이 아니며, 공화주의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거부권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리와 사상』 IV단원 사회사상 중 민주주의 단원에서 견제 민주주의를 추가할 수 있다. 공화주의는 국가와 시민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더해서 견제 민주주의의 특징인 이의제기능력을 시민 불복종의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이의제기능력은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자율성 및 건전한 비판의식과 일치하고 있다.

세 번째, 도덕적 권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 공화주의적 권리 개념이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기존의 개념 대신에 공화주의적 권리는 상호적 합의에 가깝다. 요컨대, 공화주의적 권리는 정치적 숙의로부터 도출되며 입법을 통해 제도화 가능하다. 그러므로 도덕과에서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한 가치 중심적 태도 및 일상생활에서 인권 존중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인권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유에 입각한 세계시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세계시민주의는 의무론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항상 동등한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화주의적 세계시민주의는 비지배 자유에 입각한 세계시민주의를 천명한다. 공화주의의 국가관은 ‘주권(sovcreignty)’ 개념을 강조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지배에 맞서기 위해 동등한 기회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은 지배에 맞서기 위하여 견제하는 것이다. 즉, 시민은 스스로 국가를 조직할 수 있는 집합적 사람들(collective people)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화주의는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는 많은 시민들이 국가에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과 시민의 주권을 실현해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ettit, 2019: 240-241).

다섯 번째, 공화주의는 정의 개념을 관계 회복적 정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관계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생활지도는 일방적 징계가 아닌 온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좋은 방법으로 도입 가능할 것이다. 관계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청소년 선도에 관한 연구는 법과 교정 영역에서 이미 많이 논의된 바 있다(김이문, 2018; 박연규, 2016; 윤태현, 2017; 이종원, 2011). 보통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관계 회복적 정의를 가지고 오는 반면에 도덕과에서는 도덕 발달을 위해서 관계 회복적 정의 관점을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송애리, 2013).

관계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생활지도는 일방적 징계가 아닌 온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좋은 방법으로 도입 가능할 것이다. 관계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존하면서도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는 용서와 화해를 요구함으로써 가해자가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섯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이용식, 423-424).

- ① 가해자는 자신이 해를 입힌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대해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 ② 피해자에게는 그가 입은 감정적·물질적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 ③ 피해자와 가해자 및 그 가족,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상호 대화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 ④ 이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해자와 지역사회에 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⑤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과 공공의 안전강화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태전 교장을 중심으로 하여 창원태봉고와 남해

상주중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정의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은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동체 회의로 학교를 운영한다(정창우, 2019: 126). 이처럼, 관계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학교 공동체에서는 학생이 심의 형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학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정리하면, 신로마 공화주의의 내용은 현재 도덕과에서 논의 중인 자유, 시민불복종, 권리, 세계시민주의 등의 개념에서 더욱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3. 이의제기능력에 입각한 수업 모형 탐색

1) 기존 갈등적 수업 모형

기존의 교육은 지식을 ‘습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사는 수업을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달수단으로 축소시켰다(Young, 2003: 42-44). 반면에 토론 수업은 강압과 동조가 아닌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하며, 이는 민주주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도덕적 인성을 길러주는 덕목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의견이 불일치 상황에 놓일 때, 이를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참여적 접근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증대 시킬 수 있다.

만일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될 때, 다른 어떤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결정은 본인에게 맡길 것입니다. 많은 경우 본인은 학생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여러 책을 읽거나 또는 토론하는 데 보다 많은 흥미를 가질 것이며, 본인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Gutmann, 1990: 129).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존을 위한 협동과 공유된 도덕 원칙에 대하여 논의하여 민주적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심의의 장이 필요하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토론 교육이 필요하다(Lind, 2017: 39, 49).

토론에 입각한 수업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갈등을 극대화하는 토론 방법인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 토론이 있다. CEDA 토론의 가장 큰 특징은 절차에 대한 존중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CEDA 토론은 크게 입론, 교차조사, 반론, 최종 발언이라는 네 가지 역할로 나눌 수 있다. 입론은 논제에 대해 자기 팀의 입장을 담은 논점을 펼치는 과정이다. 입론에서 펼친 논점을 토대로 해서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팀의 입장을 충분히 포괄해야 하고 있다. 토론 도중에 새로운 논점을 내세우거나, 또는 상대 팀이 입론에서 말하지 않은 논점에 대해 반박했다면 이는 모두 잘못이다. 입론은 논제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제시, 핵심 용어의 개념 정의, 논점을 3~4개 항목으로 정리, 기대효과를 열거하는 순서로 전개하고 있다.

교차조사는 방금 입론이나 반론에서 발언을 마친 사람이 말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입론에 대해 반론을 펼치거나 또는 반론에 대해 재반론하기 위해 입론이나 반론에서 말한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이다.

반론은 상대방 주장의 허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왜 잘못되었고 어떤 점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밝히는 부분으로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최종 발언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하고, 토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청중을 향해 다시 한 번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단계이다. 또한 최종 발언은 청중을 향해 설득을 하는

단계이다. CEDA 토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8> CEDA 토론 진행 순서

찬성 (조:)		반대 (조 :)	
① 입론1		② 입론1	
③ 입론2		④ 입론2	
작전타임			
⑤ 교차조사1		⑦ 교차조사1	
⑧ 반박1		⑥ 반박1	
⑨ 교차조사2		⑪ 교차조사2	
⑫ 반박2		⑩ 반박2	
작전타임(2분)			
⑬ 교차조사3		⑭ 교차조사3	
⑮ 최종변론		⑯ 최종변론	

CEDA 토론은 교차조사 단계에서 타인과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보장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CEDA토론이 자유토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차조사에서 드러난다. 자유토론은 주제가 난잡해지고 외부적 요소가 많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유토론을 맡기게 되면 암묵적 규칙이 생성되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구분된다. CEDA 토론의 역할 분배는 바로 이러한 자유 토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토론 방법이다.

또한, 교차조사는 ‘더 나은 논증의 힘’ 만이 참여자들의 선택을 좌우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논리적, 합리적 절차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CEDA 토론은 협동력 및 논리적 사고력 증가는 물론 산과술과 같은 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모순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토론방법으로 '갈등의 창조적 해결'이 가능하다(이경희, 2009).

다음으로, 올리버(D. W. Oliver)와 셰이버(J. P. Shaver)의 '가치갈등수업 모형'이 있다. 가치갈등 수업모형은 학생들이 가치 갈등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올바르게 좋은 판단을 기르는데 유용한 학습 방법이다. 올리버와 셰이버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다원주의로 상정하여 양립불가능성과 공약불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의, 사실, 가치의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대 사회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들은 '법리적 모델(jurisprudential model)'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논리적 사고방식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그들은 8단계로 세분화하여 서명한다(Oliver and Shaver, 1966: 114-115).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 갈등 사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주어진 구체적 가치 갈등 사태가 무엇인지 발견함으로써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둘째, 규범확인 단계이다. 문제 상황에서 갈등하는 규범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셋째, 가치간의 갈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갈등하는 가치에 대하여 의미 명료화함으로써 특정 행위나 의사결정이 특정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다른 가치와는 다름을 알아내고자 노력한다. 넷째, 가치 갈등의 유형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특수한 가치 갈등을 다른 가치 갈등과 개념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사실과 가치를 개념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한다. 다섯째, 양립된 입장의 결과 예상단계이다. 관련된 규범들을 각각 선택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판단하는 단계이다. 자신의 입장의 일관성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자신의 감정적인 가치 입장 결정하는 단계이다.

자신의 입장의 일관성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사실적 타당성 검토하는 단계이다. 정당화 과정을 거친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진술의 적합성 검사하는 단계이다. 그동안 갈등 해결 과정을 정리하면서 가치 입장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점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노희정, 2012: 121-123). 이와 같이, 가치갈등해결수업모형을 통하여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도출 가능하며, 갈등 역시 사실적 증거와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합의가 가능한 이론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CEDA토론과 가치갈등수업모형은 토론과 탐구 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교사는 특정 가치나 규범의 대변자가 되지 못하는 기계적 중립에 근거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CEDA토론과 가치갈등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만을 확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이 나타나는 “나는 나의 의견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의견이 있는데 누가 옳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식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빠질 위험이 크다(Gutmann, 1991: 85-87). 즉, 일종의 토론을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합의에 중점을 두지 않고, 게임처럼 상대방 토론에 대한 승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논리적 옳고 그름에만 치중하게 만든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토론은 논리적 싸움이 아닌 학교 내에서의 불합리한 관습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방법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학생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학생들과의 공공선을 위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이의제기능력을 활용한 모형

앞 절에서 본 연구자는 CEDA 토론과 가치갈등 수업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들 토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본 연구자가 강조하는 토론 수업 모형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 논리적 사고에 머물러 국한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양하는 것이다.

공화주의적 토론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써 도덕적 판단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편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토론은 린트(Georg Lind)에게 구체화된다. 린트는 콜버그의 딜레마 토론을 발전시킨 ‘콘스탄츠 딜레마 토론 방법(Konstanz method Dilemma Discussion)’을 개발한다.³⁹⁾ 콘스탄츠 딜레마 토론 방법은 기존의 콜버그 딜레마 토론에서의 비현실적인 주제보다는 현실적인 주제로 주제를 선정한다. 린트는 딜레마 토론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성 역할, 비행의 심각성, 법과 사이에서 반하는 결정, 다른 환경, 시대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총 10 가지 사례의 딜레마를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한다.

수잔은 친한 친구와 백화점에서 윈도우 쇼핑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드레스들을 살펴본다. 그녀는 친구가 탈의실에서 손에 블라우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잠시 뒤 그녀는 친구가 탈의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다. 친구는 손짓으로 오라고 하더니, 그녀의 코트 안에 블라우스를 잠깐 보여주고는 재빨리 가게를 나간다. 수잔이 가게를 나가려고 할 때, 가게 보안요원이 그녀를 붙잡는다. 수잔은 단지 친구와 가게에 함께 온 것 뿐이었다. 그 보안요원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말해 달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블라우스를 훔쳤어요. 당신은 그녀의 이름을 말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절도범죄를 도운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라고 위협했다. 수잔은 몹시 당혹스러워 하며 망설인다. 결

39) 콘스탄츠 딜레마 토론은 콜버그 딜레마 토론과는 방법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참여자들이 4개 이상의 딜레마를 토론했던 것과 달리 하나의 토론을 90분 동안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블래트 효과를 중점을 두는 딜레마 토론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토론을 추구해야 한다. 홀로 개인만 생각하는 것에서 3-4명의 소그룹의 토론을 통하여 효율적 토론을 추구한다. 이러한 토론과정은 학생들 스스로가 진행하고 교사는 단지 규칙 위반만 점검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담당한다(Lind, 2017: 192-193).

국 그녀는 자신의 친구 이름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다(Lind, 2017: 302).

논란의 여지가 있는 딜레마 토론을 통해서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하거나 영화를 보여주고 같은 의견의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지지’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판단하기, 상대방의 귀 기울이기, 공개적으로 투표하기 등의 ‘도전’의 단계들을 번갈아가면서 일어나기를 유도해야 한다(Lind, 2017: 188-189). 이에 따라, 콘스탄츠 딜레마 토론은 갈등을 도덕적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을 부추기는 토론은 그 사회에서 논란이 될 만한 민감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유용한 교육 방법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공화주의적 성향을 띄는 시민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보 지식, 의사소통의 방법, 참여와 책임있는 행동의 개발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1999b: 14). 이와 같이, 논쟁적 토론은 민주시민교육의 일부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도 학생들이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하여 실제로 합의를 경험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량을 길러낼 수 있다. 토론의 목적은 단순히 합의의 차원을 넘어서야 하며,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통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공화주의적 심의에 따른 토론이라 할 수 있다(조주현, 2013: 196-197).

견제 민주주의에 입각한 이의제기능력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대화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구성하였다. 이의제기능력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주제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중 3단원 사회와 윤리 중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관한 쟁점탐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소수집단우대정책 토론은 다음과 같다(정창우 외, 2019: 94).

<표 19> 소수자 우대정책에 관련한 수업 사례

(가) 세릴 홉우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혼자 힘으로 고등학교, 지역 전문 대학, 그리고 새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를 다녔다. 그 뒤 텍사스로 이사하여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냈다. 학업 평균 성적도 우수했고, 입학시험도 그런대로 잘 보았는데 탈락하였다. 백인 여성인 홉우드는 입학을 거절당한 것이 부당하며 차별에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격생 중에는 홉우드보다 대학 성적은 물론이고 입학시험 점수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있었다. 학교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

(나)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준화된 시험에서 계층 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도 흑인과 중남미계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험에서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표준화된 시험으로 학업 성취 가능성을 예측하려면 시험 점수를 해석할 때 학생의 가정, 사회, 문화, 교육 배경을 고려해야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인종, 민족, 경제 배경을 고려해 시험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 대학은 학업 성취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

1. (가), (나)의 핵심 주장을 써 보자.

.....

2. 다음 논제에 관해 우리 모둠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토론을 해보자.

입장, 근거, 예상반론,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론

.....

위의 토론에서 제시된 토론 방법은 앞서 제시된 CEDATO론에 가깝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모둠의 입장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주장에 대하여 논의하는 정도로 그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의제기능력이 좀 더 심화된 형태의 수업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비공식 여론조사는 ‘로버트 회의법 (Robert’ s rules of order)’ 를 기반하여 심화하고 있다.⁴⁰⁾ 로버

40) 로버트식 회의 방법은 국회식 회의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각광받았다. 국회식 회의 수정방법은 수정은 가능하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반면에 로버트식 회의 방법은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다. 즉, 수정사안에 대한 내용이 서열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 로버트식 회의 방법의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① 원안을 심사하는 도중에 수정이 나오면 일단 원안의 심의를 제쳐놓

트 회의법이란 일정한 방식을 차례대로 진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제안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회의법을 뜻한다(Pettit, 2019: 134).

<표 20> 비공식 여론조사를 활용한 갈등적 심의 순서

① 다수결 투표	② 불일치 발생	③ 불일치에 대한 토론	④ 불일치에 대한 재투표	⑤ 승인 혹은 거부	⑥ 승인 시 주장 반복	⑦ 재결정된 주장 선포
----------	----------	--------------	---------------	------------	--------------	--------------

신로마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합의한 결과를 존중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가치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으며, 공동체 내에서 시민들은 합의한 결과에 대하여 존중해야 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러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수많은 갈등과 투쟁을 거쳐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은 민주적인 논쟁 절차와 참여를 요구하여, 개인과 집단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Maynor, 2003: 190-191).

<표 21> 비공식 여론조사를 활용한 수업 사례

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수자우대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

2.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하여 조원들과 함께 토론해 보세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고민해 보세요.

.....

고 수정안 심의를 논한다. 이러한 수정안을 심의하는 동안에는 다른 수정안을 다룰 수 없다. ②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결처리한다. ③ 표결이 가결되면 수정안을 원안으로 상정하여 원안의 내용을 뒤이어 토론을 계속한다. 물론, 수정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④ 개의를 부결되면 다시 원안으로 토론을 계속한다. ⑤수정을 마치면 수정된 원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표결한다(고성봉, 2004).

3.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수자우대정책과 여러분들이 제시한 내용과 비교해보세요.

공통점		
차이점	교과서	여러분들의 견해

4. 각 조에서 제시한 소수자우대정책이 토론해보고 가장 타당성 있는 내용에 대해서 투표해보세요

5.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하여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인가요? 만약, 반대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최종 결정된 소수자우대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해보세요.

앞에서 제시한 토론은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일 뿐,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 즉, 우리 사회에서 왜 소수자 우대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즉, 학생들에게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을 먼저 알려주고 이를 토론하는 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가 소수자우대정책이 왜 나타났으며,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개념인지 고민하게끔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거꾸로 학습법’ 처럼, 학생들에게 소수자우대정책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소수자우대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그리고 소수자우대정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토론하게 만든다. 만약, 소수자우대정책의 잘못된 덕목이 있으면 이를 이의제기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구성원들과 토론함으로써 공정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견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의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주의자들은 다수의 의지가 중우정치 혹은 권력자들에 의하여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의제기능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등적 심의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 심의적 토론은 조화와 소통에 중점을 두기에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과정에 머문다. 대화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며 합의는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갈등을 변화의 필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적 체계에 대하여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민주적 방법과 의사결정 그 자체를 경험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민주시민교육을 성립하는 데 있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토론에 대한 참여를 단지 학습 전략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과 결과로서 이해해야 한다. 학생이 시민의 심의 형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보았을 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진정한 학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견제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은 능동적 시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대화를 통하여 시민들은 창의성, 비판적 사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서 이타적인 행위가 가능한 시민을 육성할 수 있는 수업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덕과 내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수업은 학생 스스로가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여 능동적인 자율적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II. 결론

본 논문에서 논의한 견제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견제 민주주의는 기존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그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존의 민주주의는 동조현상으로 인한 전체주의로의 가능성, 대리자의 수탁자로의 변질, 애로우의 역설, 이상적 합의 등과 같은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서 동의론에 입각한 순리적 동의와 결과적 동의, 합의론에 입각한 다중 민주주의와 경합 다원주의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 역시 기존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에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너무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은 이론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신로마 공화주의가 민주주의 의사결정론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이론으로 이해하였다. 그룹 행위자 이론이란 개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함몰되지 않고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이다. 그룹 행위자 이론은 신로마 공화주의의 반다수결주의 조건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반다수결주의 조건은 자신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라도 공정한 절차와 합의된 사항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신로마 공화주의만의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범주 규명을 확인하였다. 신로마 공화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비지배 자유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은 어떤 간섭이나 억압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이 가능한 ‘비지배 자유’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비지배 자유는 간섭은 받되 지배는 거부하는 공화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페팅은 비지배 자유의 대표적 사례로 선거에서 뽑힌 당선자를 들고 있다. 당선자는 시민들의 지지에 의해 대리인이 되었지만, 군주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지 않다. 만약 당선자가 월권행위를 한다면 시민들은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Pettit, 1997a: 57-58).

비지배 자유를 중심으로 한 신로마 공화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시민적 공화주의와는 다른 정치체제임을 이해하였다. 공동체주의는 헤겔의 인정이론으로, 시민 공화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우애로 설명하였다. 반면에 신로마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유에 입각하여 지배 없는 간접 개념을 설명하였고, 소수의 권력자들의 지배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의제기능력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신로마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의 근원적 이데올로기로 이해하고 공동체를 인위적 개념인 도구적 공화주의로 간주하였다.

셋째, 신로마 공화주의에 근거한 견제 민주주의는 새로운 공동체가 요구하는 적합한 이론적 근거임을 확인하였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의 이론적 토대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접목 가능성을 시도하여 기존 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견제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견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공공선도 역시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즉,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공공선을 함께 지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로마 공화주의는 ‘저항권’을 강조하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외부적 및 비외부적 통제상황이 나타나면, 개인은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나타난다. 이에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타인의 지배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항권을 제시하였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이의제기능력으로 인하여 지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인의 자유는 선거 제도만이 아닌 국가에 대한 대항 방법으로 이의제기능력이 제시된다. 저항권은 시민의 권리를 양도받은 권력자들이 권한 남용이 나타나면, 시민은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항권 논의는 이의제기능력으로 체계화되었다. 공화주의적 저항권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헌정주의와 결합하고자 하였다. 헌정주의는 정치체제의 일차적 목표

를 인민을 보호하고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기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왕에 대해서는 저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견제 민주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의제기능력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거부권이 아니며, 신로마 공화주의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저항권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계 회복적 정의를 설명하였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일탈자 중심 전략과 순응자 중심전략 중에서 후자의 논의를 새롭게 조명한다. 일탈자 중심전략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밝은 협상적 행위자의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로 배신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반면에 순응자 중심 전략은 이미 약속한 내용에 대하여 순응했을 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제공하기에 일탈자 중심보다 배신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 폭력이 있다고 할 때 보통 양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있다면, 관계 회복적 정의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상기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자는 신로마 공화주의가 제시하는 이의제기능력과 그룹 행위자 이론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근거로 견제 민주주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엿보았다. 도덕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도덕과에서 가르쳤던 개념을 보완할 수 있다. 자유 개념에 있어서 제 3의 개념인 비지배 자유를, 시민불복종의 긍정적 저항권으로서 이의제기능력을, 보편적 권리에서 상호적 권리를, 주권 개념에 근거한 세계시민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신로마 공화주의는 도덕과에서 이론적 개념 논의를 풍부하게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토론 교육에 있어서 이의제기능력을 학생들에게 가르침

으로써 학생들이 수업 및 학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었다. 토론 수업은 모든 학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할 만큼 중요한 교육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니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화는 분명히 활발한 시민 의식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학생들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말로 대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교육적 활동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심의 형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민주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진정한 학습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덕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가치를 함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시민들이 권력자에 맞서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견제 민주주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잘 드러나듯이 국가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시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며 독재자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공화주의라면, 촛불집회가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신로마 공화주의자인 페티(Philip Pettit)은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에 아주 좋은 일이었다. 정치적 격변은 공화주의 정치에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면 결코 정치가 조용할 수 없다. 지도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⁴¹⁾ 고 하여 촛불집회가 공화주의 정신이 발현된

41) 한겨레신문 (2019.02.29.) 페티-박영립 대담2 “민주정은 결코 조용할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4086.html#csidx89b3e68f3305d9e87>

사건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Pettit, 2019: 7).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서구에 비해 짧은 기간에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독재자들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공화주의가 국가의 이념을 넘어선 시민들의 생활신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공화주의의 정신은 우리 사회 내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은 명확해 보인다. 공화주의는 타인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개개인들이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주의 하에서 시민은 부당한 정치적 결정들이 나타날 때, 민주적 절차인 입법만이 아닌 시민단체와 같은 결사 행위, 대중 집회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치영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화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였음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2015),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 교육부(1992), 『중학교 교육 과정』 .
- 교육부(1995),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 과정 해설』 .
- 교육부(1997a),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 과정 해설』 .
- 교육부(1997b), 『도덕과 교육과정』 .
- 교육부(2013), 『도덕과 교육과정』 .
- 교육부(2015), 『도덕과 교육과정』 .
- 교육인적자원부(2007a),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
- 교육인적자원부(2007b),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 곽준혁(2016), 『정치철학2』 , 서울: 민음사.
- 김경희(2018), 『근대 국가 개념의 탄생: 레스 푸블리카에서 스타토로』 , 서울: 까치.
- 김비환 외(2011), 『자유주의의 가치들: 드워킨과의 대화』 , 서울: 아카넷.
- 김비환(2016),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서울: 박영사.
- 김영국 외(1995), 『레오 스트라우스의 政治哲學』 ,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원태 외(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은희 외(2014), 『현대정치철학의 테제들』 , 고양: 사월의 책.
- 김준수(2015), 『승인이론: 독일관념론의 상호주관성 이론 연구』 , 서울: 용의숲.
- 김태길(1978), 『John Dewey의 사회철학』 , 서울: 태양문화사.
- 박근갑 외(2009),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서울: 소화.
- 박명규(2009), 『국민·인민·시민』 서울: 소화.

- 박상섭(2008), 『국가·주권』 서울: 소화.
- 박찬구(2006),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파주: 서광사.
- 박효중(1994),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 I』, 서울: 인간사랑.
- 박효중(2001), 『국가와 권위』, 서울: 박영사.
- 박효중(2005),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효중(2012), 『자유, 핑미?』, 서울: 박영복스.
- 배한동(2006), 『민주시민교육론』,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서강식(2010),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교육이론』 고양: 인간사랑.
- 심성보(2014),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 서울: 살림터.
- 심성보(2018), 『한국 교육의 현실과 전망』 서울: 살림터.
- 유정식(2013), 『착각하는 CEO』.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장동진(2012), 『심의 민주주의: 공적 이성과 공동선』, 서울: 박영사.
- 정원규(2016), 『공화 민주주의』, 서울: 씨아이알.
- 정원섭(2008), 『롤즈의 공적 이성과 입헌민주주의』, 서울: 철학과현실사.
- 정연교 외(1993), 『사회계약론 연구』, 서울: 철학과현실사.
- 정영순 외(2002), 『고용과 사회복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정창우(2007), 『도덕과 교수 학습방법 및 평가』, 서울: 인간사랑.
- 정창우(2013),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서울: 울력.
- 정창우(2015),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정창우(2019),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 정리』, 서울: 교육과학사.
- 조승래(2010), 『공화국을 위하여』, 서울: 길.
- 조승래(2014),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정창우 외(2019), 『중학교 도덕 2』, 서울: 미래엔.
- 추병완(2018), 『도덕교육 탐구』, 서울: 한국문화사.
- 함덕웅 외(2005).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 한국과정평가원(2015a), 『도덕과 개정 교육과정』.
- 한국과정평가원(2015b), 『도덕과 교과서 집필기준』.
- 한국교육개발원(1994), 『민주시민교육』,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 논문

- 강일신(2015), 「헌정원칙으로서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이해」, 『법철학 연구』, 18권 2호.
- 강준만(2016), 「‘넛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적 유형 분류」, 『한국 언론학보』, 60.
- 곽준혁(2004),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세계화시대 ‘비지배 자유’ 원칙」, 『사회과학연구』 제12집 2호.
- 곽준혁(2005),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원칙」,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 곽준혁(2006),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 헌법재판과 비지배적 상호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5호.
- 곽준혁(2007), 「키케로의 공화주의」, 『정치사상연구』 제13집 2호.
- 곽준혁(2009a), 「공화주의와 인권」, 『정치사상연구』 제15집 1호.
- 곽준혁(2009b), 「공화주의와 한국사회: 필립 페티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연구』 제52집 1호.
- 곽준혁(2009c),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샹탈 무페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연구』 제52집 3호.
- 고성봉(2004), 「국회식회의 수정방법과 로버트식회의 수정방법 비교고찰」, 『한국회의법학회지』, 제2호.
- 김광모(2013), 「시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돼 줄 시민호민관」, 『공공정책』 Vol.94.
- 김경희(2006),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넘어 이소노미아(Isonomia)로」,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 김경희(2007), 「서구 민주공화주의 기원과 전개: 아테네에서 르네상스에 이르는 민주와 공화의 변증법」, 『정신문화연구』 Vol.30 No.1.
- 김남준(2008), 「다문화시대의 도덕 원리 논쟁: 관용과 인정」, 『새한철

- 학회』 제54집.
- 김상범(2012), 「갈등 해결의 정치철학적 기초로서의 모두스 비벤디」, 『분쟁해결연구』 제 10권.
- 김상범(2013), 『자유주의적 관용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상범(2019),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본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도덕윤리과교육』 제63호.
- 김상현·김희용,(2012) 「상호주관적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상호주관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41집.
- 김용환(2005), 「관용의 윤리: 철학적 기초와 적용영역들」, 『철학』 제 87집.
- 김은희(2010),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의 한계와 중첩적 합의 개념의 재조명」, 『철학』 제103집.
- 김이문(2018), 「학교폭력 예방에서 회복적 사법의 투영방안: 가·피해학생 관계 회복적 정의 중심으로」, 『자치경찰연구』 제11집.
- 김휘원(2013), 『자기결정의 자유로서의 동의의 본질과 구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기호(2009), 「헤겔의 인정 이론의 구조」, 『사회와 철학』 제 18호.
- 노희정(2012), 「가치 갈등 해결 수업모형의 한계와 그 개선 방안」, 『도덕연구』 제24권 2호.
- 박구용(2001),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범한철학』 23호.
- 박성근(2018), 『현대 공화주의의 도덕 교육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성우(2006),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고대 그리스적 맥락에서의 세 가지 대인의 검토」, 『사회세계연구』 제21집.
- 박연규(2016), 「교정에서 회복적 정의의 관계윤리: 콜슨, 제어,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제10호.

- 박정순(2006), 「인권 이념의 철학적 고찰」, 『철학과 현실』, 제68호.
- 박찬석(2016), 「도덕과 교육의 토의·토론 학습 적용 연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대회』.
- 박효중(2000), 「정치적 의무의 정당화 이론으로서 동의론의 한계와 가능성」, 『아시아교육연구』, 제1호.
- 박효중(2004), 「도덕 판단에 대한 일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제5호.
- 백충용(2004), 「집합행위에 대한 엘스터의 설명 논리 비판」, 『철학연구』, 제64호.
- 변순용(2010), 「다문화사회 및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교육의 핵심 덕목으로서의 관용에 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 31호.
- 서도식(2008), 「자기보존과 인정: 의사소통사회의 사회적 투쟁 모델에 대한 반성」, 『철학논총』 제 51집.
- 손철성(2007),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검토」, 『동서사상』 제3집.
- 손철성(2010),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고찰」, 『윤리교육연구』 제22호.
- 송애리(2012),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과 해결 주체로서 도덕 교사의 역할」, 『도덕윤리과교육』, 제36호.
- 신중섭(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공화주의 개념 혼재와 해결방향 모색」, 『도덕윤리과교육』 제63호.
- 신철희(2016), 「민의 욕망과 정치 참여」. 『시민과세계』, 제 28호.
- 유중선(1996), 「정치사상사, 역사인가 철학인가?: Skinner와 Pocock의 역사적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 5권, 제 3호.
- 유중선(2005), 「존 포콕의(J. G. A. Pocock)의 정치사상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I)」, 『정치사상연구』 제 11집 2호.
- 유중선(2009), 「계시, 관습, 이성」, 『정치사상연구』 제 15집 1호.
- 유흥림(2018), 「공화주의 전통의 현대적 의의」, 『한국정치연구』 제27집.

- 윤영돈·정창우(2013), 「도덕과의 학문적 정체성 제고와 타교과와의 내용 중복성 지양방안」, 『한국윤리학회』 제88권.
- 윤태현(2017),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30호.
- 이경희(2009), 「생명윤리 수업을 위한 ‘CEDA 아카데미 토론’ -수업설계 및 실천적 수업모형을 위한 시론」, 『윤리교육연구』 제19호.
- 이범웅(2015),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초등도덕교육』 제49집.
- 이보영(2015), 「회복적 사법의 실천으로서 형사조정」, 『한양법학』 제26권.
- 이성호(2003), 「존 듀이의 사회철학: 민주주의, 학교 그리고 자본주의」, 『아시아교육연구』 제4권 2호.
- 이용재(2010), 「관용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대한정치학회보』 18집 2호.
- 이용식(2012).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동아법학』, 제54호.
- 이은주(2009), 「합리적 의사소통에 근거한 초등 도덕과 교육방안 연구」, 『교육연구』 제46집 .
- 이종원(2011), 「응보적 정의와 관계 회복적 정의: 사형제도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제28호.
- 이재호(2006), 「근대적 인권 개념의 기초와 한계」,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3호.
- 장준호(2013). 「윤리교육의 정치철학적 근거로서 공화주의에 대한 고찰」. 『초등도덕교육』, 42집.
- 전동진(2011). 「공약 불가능성」. 『존재론연구』, 25집.
- 전동진(2012). 「사유의 입장적 성격」. 『현대유립철학연구』, 제28집.
- 정미라(2005), 「문화다원주의와 인정윤리학」, 『범한철학』 제36집.
- 정성호(2000), 「지향성에 대한 데넷의 탐구전략」, 『철학』 제63집.
- 정원규(2002),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절차주의적 공화민주주의 모델을

- 제안하며」, 『철학』 제71집.
- 정준표(2003), 「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서 합리성의 개념」,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2호.
- 정창우(2006), 「도덕과에서 ‘좋은 수업’의 의미 및 조건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22호.
- 정창우(2009), 「인성 발달을 위한 상호작용 기반 인성교육 실천 방안 탐색」,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26호.
- 정창우(2017), 「인성교육과 시민교육 관계 정립 및 실천 방향 모색」, 『한국윤리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 정태호(2014), 「고소, 고발 남발하는 사회, 형벌권 오, 남용하는 국가」, 『계간민주』 제10집.
- 정태창(2013),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의 딜레마」, 『철학사상』 제47집.
- 정호근(1994), 「하버마스의 담론이론」, 『철학과현실』, 제23호.
- 정호근(1996), 「의사소통적 규범정초 기획의 한계」, 『사회비평』, 제15호.
- 정 훈(2010), 「중첩적 합의와 공리주의: 세플러에 대한 반론」, 『철학』 제103집.
- 조승래(2001), 「소극적 자유론의 전통」, 『영국 연구』 제 6호.
- 조일수(2004), 「체계적 인권교육을 위한 도덕과 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18호.
- 조일수(2016), 「공화주의적 애국심에 대한 연구: M.Viroli의 논의를 중심으로」, 『倫理研究』 제106호.
- 조주현(2013), 『공화주의적 심의의 정당성 구축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주현(2015), 「공화주의 시민성과 도덕과 교육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제49호.
- 조주현(2018), 「심의 민주주의와 도덕과 교육의 과제」, 『도덕윤리과교

- 육』 제60호.
- 조진호(2014), 「腐敗防止와 清廉倫理에 對한 共和主義的 接近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찬래(2012),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 차우규(2013), 「도덕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도덕윤리과교육』 제 41호.
- 추병완(200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엠에드.
- 최형찬(2016), 「도덕과 인권교육방안」, 『도덕윤리과교육』 제50호.
- 황인표(2005), 「도덕과 교육의 인권교육의 적정화 방안」, 『도덕윤리과교육』 제20호.
- 홍용희(1995), 「도덕과 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접근 방안」, 『국민윤리연구』, 제34호.

2. 국외문헌

(1) 원서

- Ackerman, Bruce and Fishik, Jamers(2004), *Deliberation Day*,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Bellamy, Richard(2007). *Political Constitutionalism: A Republican Defence of the Constitutionality of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llamy, Richard(2011), *Citizenship*. In George Klosko (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bbio, Norberto and Viroli, Maurizio(2003), *The Idea of the*

- Republic*, tr., Allan Cameron,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Braithwaite, John and Pettit, Philip(1992). *Not Just Deserts: A Republican Theory of Crimi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Braithwait, John(2003), *Principles of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Competing or Reconcilable Program Paradigms?*, Oxford and Portland. on. Hart Publisching.
- Cohen, J.(1989), *Deliberative democracy and democratic legitimacy*, in Hamlin, A. and Pettit, P. (eds.) Oxford: Blackwell.
- Crick, Bernard(2002), *Democrac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workin, Ronald(1999), *Freedom's Law: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Elster, Jon(1998), *Deliberative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inberg, Joel(1986), *Harm to Self: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shkin, James S.(2009),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furt, Harry G. (1988), *The Importance of What We Care About: Philosophical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lderen, Martin, and Quentin Skinner(2002), *Republicanism : A Shared European Herit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tmann, A. and Thompson, D.(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y, John(2000), *Two Faces of Liberalism*, New York: New Press.
- Habermas, Jürgen(1982), *A reply to my critics*,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 Habermas, Jürgen(1984),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 am Main: Shurkamp.
- Harrington, James(1992), *The Commonwealth of Oceana and A System of Politics*, ed., J. G. A. Pococ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ek, Frederick(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nohan, Iseult(2002), *Civic Republicanism*, London: Routledge.
- Kramer, Larry(2006), *The People themsel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ynor, John W.(2003), *Republicanism in the Modern World*, Cambridge: Polity.
- MacCallum, Gerald(1991), *Liberty*, ed., David Miller, Oxford: Oxford University.
- Oldfield, Adrian(1990), *Citizenship and Community: Civic Republicanism and the Modern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Oliver, D. W. & Shaver, J. P.(1966), *Teaching Public Issues in the High School*, Boston: Houghton Mifflin.
- Peterson, Andrew(2011), *Civic Republicanism and Civic Educ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Pettit, Philip(1993), *The Common Mind: An Essay on Psychology, Society an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ttit, Philip(1997a),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ttit, Philip(2001a). *A Theory of Freedom: From the Psychology to the Politics of Agency*, Cambridge: Polity.
- Pettit, Philip(2012). *On the People's Terms: A Republican Theory and Model of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cock, J. G. A.(2004), *Quentin Skinner: The History of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Histo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1998),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Crick Report)*, London: QCA.
- Rawls, John(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hg, W.(1994), *Insight and Solidarit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th R. Faden and Tom L. Beauchamp(1986), *A history and theory of informed consen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andel, J. Michael(1996), *Democracy's Discontent: America in Search of a Public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ellers, M. N. S.(1998), *The Sacred Fire of Liberty*, London: Macmillan Press.
- Shuppert, Fabian(2013), *Freedom, Recognition and Non-Domination: A Republican Theory of Global Justice*, New York: Springer.
- Skinner, Quentin(1998), *Liberty before Liber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0), *Democracy in Swedish Education Stockholm,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Taylor, Charles(1992),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 번역서

Austin, John(김영진 옮김)(1992), 『말과 행위』, 서울: 서광사.

Aristoteles(이창우 · 김재홍 · 강상진 옮김)(2006),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Aristoteles(천병희 옮김)(2009), 『정치학』, 고양: 숲.

Ball, Terrance and Dagger, Richard(정승현 옮김)(2006). 『현대 정치 사상의 파노라마: 민주주의의 이상과 정치 이념』, 서울: 아카넷.

Barrow, Robin(정창우 옮김)(2013), 『도덕철학과 도덕교육』, 서울: 울력.

Beiser, Frederick(이신철 옮김)(2012). 『헤겔 : 그의 철학적 주제들』, 서울: b.

Benhabib, Seyla(정대성 옮김)(2008), 『비판, 규범, 유토피아』, 서울: 울력.

Bernstein, Richard(정창호 · 황설중 · 이병철 옮김)(1996),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 과학과 해석학 그리고 실천』, 서울: 보광재.

Berlin, Isaiah(박동천 옮김)(2006),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서울: 아카넷.

Bobbio, Noberto(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1993). 『현대 민주주의론』, 서울: 창작과비평사.

Bobbio, Noberto(황주홍 옮김)(2010),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Cicero, M. T.(김창성 옮김)(2007), 『국가론』, 파주: 한길사.

Cohen, J. and Arato, A.(박형신 · 이혜경 옮김)(2013), 『시민사회와 정치 이론2』, 서울: 한길사.

- Dahl, Robert, (김왕식 옮김) (1999). 『민주주의』. 서울: 동명사.
- Dewey, John(정창호 · 이유선 옮김) (2014). 『공공성과 그 문제들』. 서울: 한국문화사.
- Donally, Jack(박정원 옮김) (2002), 『도덕적 인권과 국제정치』, 서울: 오름.
- Dworkin, Ronald(홍한별 옮김) (2012),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서울: 문학과지성사.
- Elster, Jon(김성철 · 최문기 옮김) (1993) 『합리적 선택』, 서울: 신유.
- Ferguson Wallace K.(진원숙 옮김) (1991), 『르네상스사론』, 서울: 집문당.
- Foucault, Michael(이정우 옮김) (2000),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 Fraser, N. and Honneth, A.(김원식 · 문성훈 옮김) (2014), 『분배인가 인정인가』, 고양: 사월의 책.
- Freeman, Michael(김철효 옮김) (2005), 『인권, 이론과 실천』, 서울: 아르케
- Freierie, Paulo(사람대사람 옮김) (2007), 『자유의 교육학』, 서울: 아침이슬.
- Gutmann, Amy(민준기 옮김) (1991), 『민주화와 교육: 민주시민 교육의 이상과 실제』, 서울: 을유문화사.
- Habermas, Jurgen(이진우 옮김) (1997a), 『담론윤리의 해명』, 서울: 나남.
- Habermas, Jurgen(황태연 옮김) (1997b),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서울: 나남.
- Habermas, Jurgen(황태연 옮김) (2000), 『이질성의 포용』, 서울: 나남.
- Habermas, Jurgen(윤형식 옮김) (2008), 『진리와 정당화』, 서울: 나남.
- Habermas, Jurgen(한상진 · 박영도 옮김) (2010), 『사실성과 타당성』, 서울: 나남.
- Habermas, Jurgen(윤형식 옮김) (2011), 『아, 유럽』, 서울: 나남.
- Haidt, Jonathan(왕수민 옮김) (2014), 『바른 마음』,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스.

Hardt, Michael and Negri, Antonio(윤수중 옮김) (2006), 『제국』, 서울: 이학사.

Hardt, Michael and Negri, Antonio(조정환 · 정남영 · 서창현 옮김) (2008), 『다중』, 서울: 세종서적.

Hardt, Michael and Negri, Antonio(정남영 · 윤영광 옮김) (2014), 『공동체』, 서울: 사월의책.

Hegel, G.W.F.(임석진 옮김) (2005), 『정신현상학 1』, 파주: 한길사.

Held, David(강정인 외 옮김) (1994). 「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 서울: 문학과지성사.

Hobbes, Thomas(진석용 옮김) (2008), 『리바이어던』, 파주: 나남.

Honneth, Axel(문성훈 외 옮김) (2009), 『정의와 타자』, 파주: 나남.

Kohlberg, Lawrence(김민남 외 옮김) (2000), 『도덕발달의 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Kymlicka, Will(장동진 · 장휘 · 우정열 · 백성욱 옮김) (2008),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서울: 동명사.

Laborde, Cecil and Maynor, John(곽준혁 · 조계현 · 홍승원 옮김) (2009),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서울: 까치.

Laclau, Ernesto and Mouffe, Chantal(이승원 옮김) (2013),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 민주주의를 향하여』, 서울: 후마니타스.

Lind, Georg(박균열 · 정창우 옮김) (2017), 『도덕적 민주적 역량』, 서울: 양서각.

Locke, John(강정인 · 문지영 옮김) (1996), 『통치론』, 서울: 까치.

Machiavelli, Niccolo(강정인 · 김경희 옮김) (2003), 『로마사 논고』, 파주: 한길사.

MacIntyre, Alasdair(이진우 옮김) (1997),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Manin, Bernard(곽준혁 옮김) (2004), 『선거는 민주적인가』, 서울: 후마

니타스.

Mill, John Stuart(서병훈 옮김) (2005), 『자유론』, 서울, 책세상.

Millgram, Stanley(정태연 옮김) (2009), 『권위에 대한 복종』, 서울: 에
코리브르.

Mouffe, Chantal(이보경 옮김) (2007), 『정치적인 것의 귀환』, 서울: 후
마니타스.

Mouffe, Chantal(이행 옮김) (2008), 『민주주의의 역설』, 서울: 인간사
랑.

Mouffe, Chantal(이승원 옮김) (2018),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서울:
문학과 세계사.

Negri, Antonio(윤수중 옮김) (2010), 『지배와 사보타지』, 서울: 중원문
화.

Nozick, Robert(남경희 옮김) (2000),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서울:
문학과지성사.

Plato(박중현 옮김) (2005), 『국가』, 서울: 서광사.

Pettit, Philip(곽준혁 · 윤채영 옮김) (2019), 『왜 다시 자유인가: 공화주의
와 비지배 자유』, 파주, 한길사.

Pocock, J. G. A. (곽차섭 옮김) (2011),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1』, 파주:
나남.

Putnam, Hilary(김효명 옮김) (1990), 『이성, 진리, 역사』, 서울: 민음사.

Rachels. James(노혜련, 김기덕, 박소영 옮김) (2006), 『도덕철학의 기
초』 서울: 나눔의집

Ranciere, Jacques(진태원 옮김) (2015), 『불화』. 서울: 길.

Ralws, John (장동진 옮김) (1999), 『정치적 자유주의』, 서울: 동명사.

Ralws, John (황경식 옮김) (2003), 『정의론』, 서울: 서광사.

Ralws, John (장동진 · 김만권 · 김기호 옮김) (2017), 『만민법』, 서울: 동
명사

Rombach, Heinrich(전동진 옮김) (2001), 『아폴론적 세계와 헤르메스적

- 세계』, 서울: 서광사.
- Rousseau. Jean Jarque(고봉만 옮김) (2003). 『인간 불평등 기원론』, 서울: 책세상.
- Rousseau. Jean Jarque(이환 옮김) (2004). 『사회계약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Sabine, George (강정인 · 김세걸 옮김) (1994), 『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 파주: 한길사.
- Sabine, G. and Thorson, T.(성유보 · 차남희 옮김) (1999), 『정치사상사 2』, 파주: 한길사.
- Sandel, J. Michael(안진환 옮김) (2010), 『정의의 한계』,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Sandel, J. Michael(안규남 옮김) (2012), 『민주주의의 불만』, 서울: 동녘.
- Sandel, J. Michael(이양수 옮김) (2014), 『정의의 한계』, 서울: 멜론.
- Sandel, J. Michael(안진환 옮김) (2016),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서울: 와이즈베리.
- Searle, John(김기현 · 송하석 · 심철호 · 이병덕 · 최훈 옮김) (2015), 「합리성의 새로운 지평」, 『철학과 현대문명』, 서울: 철학과현실사.
- Sen, Amartia(박순성 · 강신욱 옮김) (1999), 『윤리학과 경제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 Sen, Amartia(이규원 옮김) (2019), 『정의의 아이디어』, 서울: 지식의아 아이디어.
- Scanlon. Thomas, (강명신 옮김) (2008).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 파주: 한울.
- Scanlon. Thomas, (성창원 옮김) (2012). 『도덕의 차원들』, 서울: 서광사.
- Skinner, Quentin(박동천 옮김) (2004),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1』, 서울: 한길사.

- Skinner, Quentin(조승래 옮김) (2007),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서울: 푸른역사.
- Skinner, Quentin(박동천 옮김) (2012),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2: 종교개혁의 시대』, 서울: 한국문화사.
- Skinner, Quentin(황정아 · 김용수 옮김) (2013), 『역사를 읽는 방법』, 서울: 돌베개.
- Sunstein. Cass(이정인 옮김) (2011).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서울: 프리뷰.
- Sunstein. Cass(정경덕 옮김) (2013), 『심플러: 간결한 네티지의 힘』, 서울: 21세기북스.
- Sunstein. Cass(박지우 · 송호창 옮김) (2015).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서울: 후마니타스.
- Sunstein. Cass(박세연 옮김) (2016), 『와이네티지?: 똑똑한 정부는 어떻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가』, 서울: 열린책들.
- Taylor, Charles(송영배 옮김) (2003a), 『불안한 현대사회』, 서울: 이학사.
- Taylor, Charles(김선욱 외 옮김) (2003b), 『세속화와 현대문명』, 서울: 철학과현실사.
- Taylor, Charles(정대성 옮김) (2014), 『헤겔』, 서울: 그린비.
- Thaler Richard and Sunstein Cass(안진환 옮김) (2009), 『네티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서울: 리더스북,
- Thoreau, H. D. (강승영 옮김) (2011), 『시민의 불복종』, 서울: 이레.
- Tilly, Charles(이승엽 · 이주영 옮김) (2010). 『위기의 민주주의』, 서울: 전략과문화.
- Viroli, Maurizio(김경희 · 김동규 옮김) (2006), 『공화주의』, 서울: 인간사랑.
- Walzer, Michael(정원섭 외 옮김) (1999), 『정의와 다원적 평등』, 서울: 철학과현실사.
- Walzer, Michael(김용환 외 옮김) (2001), 『자유주의를 넘어서』, 서울: 철학과현실사.

- Walzer, Michael(송재우 옮김) (2005), 『관용에 대하여』, 서울: 미토.
- Walzer, Michael(최홍주 옮김) (2009), 『정치철학 에세이』, 서울: 모티브북.
- Wellmer, Albercht(김동규 · 박종식 옮김) (2010), 『대화 윤리를 향하여』, 서울: 한울아카데미.
- Wittgenstien. Ludwig(이영철 옮김) (2006), 『철학적 탐구』, 서울: 책세상.
- Young, Robert, (이정화 · 이지현 옮김) (2003),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담론교실』, 서울: 교육과학사.
- 加藤 尚武 외(이신철 옮김) (2009), 『헤겔사건』, 서울: b.

(3) 논문

- Ackerman, Bruce and Fishkin, James S(2002), "Deliberation day",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10, No. 2, pp. 129-152.
- Bellamy, Richard (2013). "Rights, Republicanism and Democracy", In Andreas Niederberger & Philipp Schink (eds.), *Republican Democracy: Liberty, Law and Polit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 pp. 253-275.
- Benhabib, S. (1996) "Toward a deliberative model of democratic legitimacy", in Benhabib, S. (ed.)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lin, Isaiah (1969), "Two Concepts of Liberty" 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8-172.
- Black, D. (1948) "On the Rationale of Group Decision-Mak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6, pp. 23-34.
- Blattberg, Charles (2003). "Patriotic, not deliberative, democracy",

-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6 (1), pp. 155–174.
- Braithwaite, John (2007). "Contestatory Citizenship; Deliberative Denizenship" , In Michael Smith, Robert Goodin & Geoffrey Geoffrey (eds.), *Common Minds*.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1–181.
- Chung, Ryoa (2003), "The cosmopolitan scope of republican citizenship" ,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6(1), pp. 135–154.
- Cohen, Joshua (1996), "Procedure and substance in deliberative democracy" , in Benhabib, S. (ed.)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nstant, Benjamin (1988), "The Liberty of the Ancients Compared with that if the Moderns" in *Benjamin Constant: Political Writings*, ed., Biancamaria Fonta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workin, Gerald (1972), *Paternalism*, *The Monist* 56(1), pp. 64–84.
- Englund, Tomas (2006). "Deliberative communication: A pragmatist proposal" ,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pp. 503–520.
- Feinberg, Joel (1971), "Legal Paternalism" ,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1(1), pp. 105–124.
- Frankfurt, Harry G. (1971), "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The Journal of Philosophy*, 68(1), pp. 5–20.
- Galston, William (1989). "Civic education in the liberal state", In Nancy L. Rosenblum (ed.), *Liberalism and the Moral Life*, pp. 89–101.
- Gutmann, A. and Thompson, D. (2003) "Deliberative democracy

- beyond process” , in Fishkin, J. S. and Laslett, P. (ed.)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Oxford: Blackwell, pp. 153–174.
- Husak, N. Douglas (1981), “Paternalism and Autonomy” ,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10, pp. 27–46.
- Khan, G. A. (2011), “Habermas and Oakeshott on Rationalism, Morality and Democratic Politics” *Political issues*, vol. 60, pp. 381–398.
- Kramer, M. H. (2008), "Liberty and Domination" in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ed., Cecile Laborde and John Maynor, Malden: Blackwell Publishing, pp. 31–57.
- Killoren, David and Williams, Bekka (2013). “Group Agency and Overdetermination” ,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16(2), pp. 295–307.
- Larmore, Charles (2004), "Liberal and Republican Conceptions of Freedom", in *Republicanism: History, Theory and Practice*, ed., D. Weinstock and C. Nadeau, London : Frank Class, pp. 96–119.
- List, Christian (2002). “Two concepts of agreement” , *The Good Society*, 11(1) pp. 72–79.
- List, Christian (2008). "Deliberation and agreement", In: Rosenberg S.W. (eds) *Deliber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Palgrave Macmillan, London.
- List, C., and Pettit, P. (2001) "Aggregating Sets of Judgments: An Impossibility Result", *Economics and Philosophy*, pp. 89–110.
- List, Christian & Pettit, Philip (2004). *Aggregating sets of judgments: Two impossibility results compared*. *Synthese* 140

- (1–2): pp. 207 – 235.
- Marneffe, Peter de (2006), “Avoiding Paternalism,”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4.3 ,pp, 68–94.
- Noelle–Neumann, Elisabeth (1974), “The spiral of silence: A Theory of public opinion” , *Journal of Communication*, 24(2).
- Peterson, Andrew (2009), “Civic Republicanism and Contestatory Deliberation: Framing Pupil Discourse Within Citizenship Education” ,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7(1), pp. 55 – 69.
- Pettit, Philip (1982). “Habermas on Truth and Justice” ,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Supplement* 14, pp. 207–228.
- Pettit, Philip (1988). “The consequentialist can recognise rights” , *Philosophical Quarterly* 38(150), pp. 537–551.
- Pettit, Phillip (1996), “Freedom as Antipower”, *Ethics*, 106, pp. 576–604.
- Pettit, Philip (1997b), “Republican Theory and Criminal Punishment” , *Utilitas*, 9, pp. 59–79.
- Pettit, Phillip (1998), "Reworking republicanism", ed., Allen. A. and Regan, M. *Debating Democracy's Discont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73–96.
- Pettit, Philip (1999). “Republican Freedom and Contestatory Democratization” , In Ian Shapiro & Casiano Hacker–Cordon (eds.), *Democracy's Valu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63–190.
- Pettit, Philip (2000), “Two Contratuals of Scanlon's Contractualism” , *The Journal of Philosophy*, 97(3).
- Pettit, Philip (2001)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Discursive Dilemma," *Philosophical Issues* 11, pp. 268–299.

- Pettit, Phillip (2002), "Keeping Republican Freedom Simple On a Difference with Quentin Skinner", *Political Theory*, 30(3), pp. 339–356.
- Pettit, Phillip (2004), "Discourse Theory and Republican Freedom" in *Republicanism: History, Theory and Practice*, ed., D. Weinstock and C. Nadeau, London: Frank Cass.
- Pettit, Phillip (2006a), "Democracy, National and International" , *Monist*, 89, pp. 302–325.
- Pettit, Phillip (2006b), "Freedom in the Market" ,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5, pp. 131–49.
- Pettit, Phillip (2006c), "Group Agency and Supervenience" , in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44.
- Pettit, Phillip (2006d), "Joint Actions and Group Agents" , *Philosophy of Social Sciences*, 36, pp. 18–39.
- Pettit, Phillip (2007a), "Rationality, Reasoning and Group Agency" , *The Dialectica Lecture*, 61, pp. 495–519.
- Pettit, Philip (2007b), "Joining the dots" in *Common Minds: Themes from the Philosophy of Philip Pettit*, ed., Smith, Michael, Goodin, Robert & Geoffrey, Oxford University Press.
- Pettit, Phillip (2008), "Republican Freedom: Three Axioms, Four Theorems" in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ed., Cecile Laborde and John Maynor,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Pettit, Phillip (2009a), "The Power of a Democratic Public" in *Reiko Gotoh and Paul Dumouchel, eds., Against Injustice: The New Economics of Amartya Sen*, CUP, pp. 73–93.
- Pettit, Phillip (2009b), "Law and Liberty" in Samantha Besson and Jose Luis Marti, eds, *Law and Republicanism*, Oxford

- University Press, pp. 39–50.
- Pettit, Phillip (2009c), “The Reality of Group Agents” in Chris Mantzavinos, ed.,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Philosophical Theory and Scientific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ettit, Phillip (2013), “Two Republican Traditions” in Andreas Niederberger and Philipp Schink, eds, *Republican Democracy: Liberty, Law and Polit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 Edinburgh.
- Pettit, Philip (2014a), “Criminalization in Republican Theory” in R. A. Duff, Lindsay Farmer, S. E. Marshall, Massimo Renzo & Victor Tadros (eds.), *Criminalization: The Political Morality of Crimi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32–150.
- Pettit, Philip (2014b), “How to Tell if a Group is an Agent” In Jennifer Lackey (ed.), *Essays in Collective Epistem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97–121.
- Pettit, Philip (2016), “Rousseau's Dilemma” , In Avi Lifschitz (ed.), *Engaging with Rousseau: Reception and Interpretation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68–188.
- Pettit, Phillip (2017), "Political realism meets civic republicanism",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20(3), pp. 331–347.
- Pettit, Philip (2018). “Corporate Agency, The Lesson of the Discursive Dilemma” In Marija Jankovic and Kirk Ludwig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Collective Intentionality*, Routledge, pp. 249–259.

- Pocock, J. G. A. (1981), "The Machiavellian Moment Revisited: A study in History and Ideology", *Journal of Modern History*, 52(1), pp. 49–72.
- Rawls, John (1985).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4(3), pp. 223–251.
- Rawls, John (1987). "The Idea Of An Overlapping Consensus" ,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7(1), pp. 1–25 .
- Saenz, Carla (2008). "Republicanism: An Unattractive Version of Liberalism" , *Ethics* , 7, pp. 267–285.
- Schacter, Jane S. (1995), "The Pursuit of "Popular Intent" , *Interpretive Dilemmas in Direct Democracy*, 107, pp. 107–176.
- Skinner, Quentin (1990), "Machiavelli's Discorsi and the pre-humanist origins of republican idea" in *Machiavelli and Republicanism*, ed., Gisela Bock, Quentin Skinner, Maruzio Virol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1–141.
- Skinner, Quentin (1991), "The Paradoxes of Political Liberty" in *Liberty*, Miller, Davi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kinner, Quentin (2002), "A Third Concept of Liberty",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117, pp. 237–268.
- Skinner, Quentin (2008), "Freedom as the Absence of Arbitrary Power" in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ed., Laborde and Maynor, Blackwell Publishing, pp. 83–101.
- Staszewski, Glen (2013), "Contestatory Democracy and the Interpretation of Popular Initiatives" , *Seton Hall L. Rev.*, Vol.43, pp. 1165–1183.
- Sunstein, Cass (1988), "Beyond the republican revival" , *Yale Law*

- Journal*, 97(8), pp. 1539–1590.
- Sunstein, Cass (1999), “Agreement without theory” . In S. MACEDO (Ed.) *Deliberative Politics: Essays on Democracy and Differ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3–150.
- Taylor, Charles (1985), “What's Wrong with Negative Liberty “ in *In Philosophical Pap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1–229.
- Taylor, Charles (1997), “The politics of recognition” , *New Contexts of Canadian Criticism*, Peterborough: Broadview Press.
- Westheimer, J. and Kahne, J. (2004), “What kind of citizen? The politics of education for democracy” ,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1(2), pp. 237–269.

3. 기타기관 자료 및 신문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한영사전, 합의,

URL=<law.go.kr/lstTrmSc.do?menuId=4andsubMenu=4andp1=1andfsort=10andoutmax=50andquery=#click35>.

교육부(2018.05.01), “질문하는 교과서로 학교수업 바뀐다.”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andboardSeq=74056andlev=0andsearchTy'pe=nullandstatusYN=Wandpage=1ands=moeandm=0503andopType=N>

교육부(2018.08.17),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

5080&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20&s=more&m=0503&opType=N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동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928&cid=42140&categoryId=42140>

리얼미터(2018, 11,19), “국민 53% 대입 수능 정시 확대해야.”,

<http://www.realmeter.net/%EA%B5%AD%EB%AF%BC-53-%EB%8C%80%EC%9E%85-%EC%88%98%EB%8A%A5-%EC%A0%95%EC%8B%9C-%ED%99%95%EB%8C%80%ED%95%B4%EC%95%BC/>

매일경제(2019.01.10.), “英 EIU ‘민주주의’ 순위서 한국 세계 21위” ,

<http://www.mk.co.kr/news/world/view/2019/01/21126/>

조선일보(2018.07.03.), “이제는 중학교도 ‘과정중심평가’ 어떻게 바뀌었나.”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3/2018070301002.html

조선일보(2019.03.25.), “대학들 “정시 30%는 너무 많다”... 고1 大入 다 시 줄렁.”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5/2019032500232.html

중앙일보(2018.02.06.), “같은 내용인데 보수는 인성교육, 진보는 민주시민교육 ‘썰전’ .”

<https://news.join.com/article/22348506>

한겨레(2019.02.28.). “소수의 지배에 맞설 ‘민주공화주의’ 어떻게 세울까.”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4085.html>

한겨레(2019.02.28.). “민주정은 결코 조용할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4086.html>

프레시안(2017.11.06),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네 가지 문제와 한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4711&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
- Christiano, Tom, "Democrac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2018), Edward N. Zalta (ed.), forthcoming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8/entries/democracy/〉](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8/entries/democracy/)
- Cudd, Ann and Eftekhari, Seena(2017), "Contractarian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Zalta, Edward N(ed). URL = [〈https://plato.stanford.edu/entries/contractarianism/#toc〉](https://plato.stanford.edu/entries/contractarianism/#toc)
- Dworkin, Gerald, "Paternal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2017), Edward N. Zalta (ed.),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7/entries/paternalism/〉](https://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7/entries/paternalism/)
- Forst, Rainer, "Toleratio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2017), Edward N. Zalta (ed.),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7/entries/toleration/〉](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7/entries/toler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Civic Educational Implications of Contestatory Democracy – Focusing on the decision making theory of neo-Roman republicanism –

Yun Hoi, Her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in democracies and to point out that in terms of republicanism, contestatory democracy could be the best alternative for decision-making.

In the pluralistic modern society, “disagreements” of opinions among citizens is an inevitable phenomenon of democracy. Two measures could be introduced to resolve such disagreements. First, one could disregard the disagreements and resolve it with violence or by relying on customs. Another way to resolve disagreements would be to acknowledge it as an inevitable product of democracy and to work on arriving at a decision which could satisfy everyone as much as possible. This paper focused on the latter

perspective with aims to identify the way to resolve conflicts and arrive at agreements within a democratic system.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ed to present a new democratic method based on the relations between democracy and republicanism. Such democratic methods, however, have limitations. This study aimed to solve the issues in each method in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sought the possibility of finding a new solution to the issue of disagreements through the “contestatory democracy,” which was founded on the Neo-Roman republicanism. Republicanism in the Neo-Roman Republic emphasized the “freedom as non-domination,” which seeks to form an equal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others, as well as the “right to resist” as a last resort in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Based on such discussions on the Neo-Roman republicanism, this paper focused on specific methods to realize freedom as non-domination through group agents, contestatory capability, and restorative justice for restoring relationships. The “group agency” theory, which relates to the counter-majoritarian and rational decision-making, was formally established by List and Pettit. By using the group agency theory, Pettit and List argued that agents will be able to make consistent choices. The “straw votes,” which were correspondingly conducted, were pivotal in that they helped members acknowledge and resolve disagreements.

Contestatory democracy emphasized the “contestatory capability” in regards to the citizen’s right to resist. The

concept of contestatory capability is not at odds with the existing concep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could complement it. Citizens, on the other hand, were equals in their relations with politicians who represented them but their roles were limited to being “editors,” rather than being “co-authors” who wielded the politician’s unique rights.

Third, a “restorative justice” could be an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 contestatory capability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which is sought in contestatory democracy. In a restorative justice, shaming an assailant would likely lead to bigger problems as they go astray. An ideal society with contestatory democracy would not only focus on the punishments for the assailants but would search for a way to rest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sailant and the victim.

Finally, this researcher found the implications of contestatory democracy on civil education in the ethics subject. One education method based on contestatory democracy could be conflictual deliberation. Discussion classes using such methods could also be used as an educational method to help students actively participate and to make democratic decisions.

key words: Decision-making theory, neo-Roman republicanism, contestatory democracy, group-agency theory, non-domination freedom, contestatory capability, restorative justice, civil education

student number: 2014–30498